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모두의 성장과 불평등 해소

발간사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의 방식과 성과를 나누는 방식을 함께 바꾸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의 둔화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은 산업과 일자리의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정 산업과 기업에 성과가 집중되고, 지역·기업·세대·계층 간 격차와 자산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고르게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은 양적인 확대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회와 성과가 지역과 기업, 노동자와 청년 등 사회 구성원에게 폭넓게 확산되어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를 서로 대립하는 과제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혁신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2026년을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대기업·수출·부동산 중심 성장구조를 넘어 벤처·인공지능·문화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과 노동시장의 제도를 혁신하고 불평등과 청년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성장의 총량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와 과정, 성과의 배분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고부가가치·고용친화적 산업구조와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행 경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본 시리즈는 전체 연구의 문제의식과 방향을 제시하는 **총론**, 새로운 성장동력과 혁신생태계를 다루는 **제1부**,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완화하고 포용적인 일자리 체계를 모색하는 **제2부**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보고서는 독립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고 그 성과를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으로 확산한다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론**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이중의 과제를 진단하고, 기존 성장모델을 넘어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전체 연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1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엔진: 혁신생태계 조성」은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다룹니다. 벤처기업의 창업 이후 스케일업, 제조와 현실공간에 AI를 접목하는 피지컬 AI,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K-컬처, 혁신산업과 지역경제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2부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성: 포용적 일자리 전략」은 성장의 기회와 성과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줄이고,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산불평

등과 세대 간 기회 격차, 일자리와 교육·훈련에서 이탈한 청년의 사회적 재진입, 인구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살펴보고,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번 연구가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완결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제성장과 일자리, 혁신과 포용을 각각 분리된 정책 영역으로 접근해 온 기존의 논의를 넘어, 이들을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담당자, 산업계와 노동계, 연구자와 시민들이 새로운 성장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과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앞으로도 산업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혁신의 성과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7.31.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본 연구의 구성



요약

1. 문제의 제기

- 한국을 포함한 선진·신흥국 다수가 직면한 성장둔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
 - 생산성·잠재성장률 둔화, 소득·부와 기회의 불평등 심화가 동시에 진행
-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성장률 하락, IT·디지털 분야를 제외한 전반적 생산성 정체,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고용·소득 불안,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계층 이동성 체감 악화와 자산 격차 확대 등이 겹치면서 성장과 형평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음
 - Pew 조사 등 국제 여론 자료는 경제성장 자체보다 불평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OECD 자료는 한국의 시장소득 불평등·자산 불평등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을 지적
-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경제 운영은 성장 패러다임의 완전 전환을 목표로 하면서 국정운영은 국민의 삶이 제1 원칙임을 강조
 -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 길을 제시
- 2026년 연구 주제는 성장전략의 5개 대전환 중 일자리 관점에서 가장 긴밀하게 연관된 분야와 더불어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

2. 새로운 성장전략의 모색

가. 과거 성장전략에 대한 평가

- 한국의 성공 신화는 시장경제의 정착과 더불어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달성으로 압축적으로 설명
 - 한국의 제헌헌법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헌법상 권리로 명문화함으로써 사적 소유·기업 활동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 질서를 확립
- 한국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정착 과정을 살펴보면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음
 - 농지개혁, 수출주도 산업화, 안정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시장경제가 정착
- 농지개혁은 재산권 기반의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결정적으로 기여
 - 소작농의 자작농화와 광범위한 토지 소유 분산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대중적 제도로 정착

- 지주-소작 구조에서 발생하던 지대의 상당 부분이 농민·정부로 이전되어, 장기적으로 성장 친화적 분배 구조를 형성
- 인적자본·산업화 기반: 농지개혁과 교육 확대의 결합은 숙련 노동, 내수 수요, 대량 생산체제를 가한 조건을 동시에 마련
- 시장경제 친화적인 농지개혁은 당시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던 대중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
- 수출주도 산업화는 (1) 비교우위에 따른 자원배분, (2) 세계시장에 의한 성과 평가, (3) 낮은 보호와 조건부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한국 산업의 가격·품질·생산성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음
- 정부 주도의 선택·집중·재벌 중심 성장, 금융왜곡, 분배 문제 등은 시장경쟁을 왜곡하거나 잠재적 취약성을 키운 요인으로 남았으며, 이후 개혁·조정 대상이 되었음
- 1980년대 안정화는 1) 물가 안정과 거시 안정, 2) 수입·환율·자본시장 개방의 진전, 3) 금융·산업의 자율화 확대, 4) 공정거래법·재벌규제 등 경쟁질서의 제도화를 통해 한국의 시장경제를 형식적으로는 한 단계 성숙시켰음
- 정부-재벌 간 위험공유와 광범위한 정책금융, 불안정한 금융감독·회계·공시 체계는 시장규율과 책임원칙을 약화시켜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한국경제의 이면에 구조적 취약성을 남겼음
-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는 축복된 위기이라 평가
- 건전한 거시지표만으로 위기를 막을 수 없으며, 금융시스템·자본흐름·레버리지 관리가 중요
- 자본계정 개방은 속도·순서·감독이 결합되어야 하며, 단기외채/외환보유액과 같은 금융취약성 지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에는 재정여력과 사회안전망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정치·사회적 저항을 완화할 수 있음
- 대마불사 신화를 깨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혁 없이는 장기 성장의 기반을 확립할 수 없음

나. 모두의 성장

- 이재명 정부는 2026년을 '성장 패러다임의 완전 전환'과 '국민 삶의 질 제1원칙'을 공식화한 대전환의 원년으로 기존 수출·대기업·부동산 중심 성장모델에서 탈피해야 하는 시점으로 규정
- 투자 증가율이 2000년대 연 4.6%에서 2020~24년 1.2%로 급락하고, 생산성 정체와 함께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IT 편중 성장이 심화되어 IT 대비 IT GDP 비율이 1995년 42:76에서 2024년 88.2:21.4로 극단적으로 벌어진 점이 구조적 위기의 핵심 징후로 제시

- ‘모두의 성장’은 단순한 재분배의 구호가 아니라, 자산·기회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함을 강조
- 부의 세습화도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데, 60세 이상이 순자산의 60%를 보유하고 상속·증여 규모가 5년간 두 배 증가하여 2024년 188조 원에 이르며, 전체 부의 지니 계수 변동의 약 23%를 설명할 정도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불평등 고착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동
- 청년층에서는 15~29세 NEET 비중이 18.3%로 OECD 3위이며, 30대를 포함하면 약 70만 명 규모의 청년이 고립·우울 등 심리 문제까지 동반한 사회적 배제 상태에 놓여 있어, 단순 고용정책을 넘어선 종합적 접근이 필요
-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따른 정년 연장, 해고 유연화, 포괄임금제 폐지 등 상충되는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으나, 이를 개별 규제·노사 분쟁 차원이 아니라 성장전략 차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
- 우리나라에서 OECD 기준 250인 이상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에 불과해 독일(41%),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 등에 비해 현저히 낮고, 청년의 선호는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 간 괴리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
- ‘모두의 성장’은 단순 재정 지원 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규제·금융·인프라 등 자원을 총체적으로 재배치하는 성장 전략을 제시
-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

3. 불평등의 경제적 접근

가. 불평등 현상의 이해

- Pew Research Center (2025), Economic Inequality Seen as Major Challenge Around the World에서는 한국을 포함 36개 국가 41,503명을 대상으로 불평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
-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중앙값 기준 54%가 자국의 빈부격차를 “매우 큰 문제”, 30%가 “상당한 문제”로 인식해, 10명 중 8명 이상이 경제적 불평등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
- 경제적 불평등 외에도 인종·민족 차별(매우/상당한 문제 68% 중앙값), 성별 불평등(62%), 종교 차별(56%) 등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타났음
- 불평등의 원인 중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부자들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중앙값 60%가 “매우 크게 기여”, 26%가 “상당히 기여”한다고 응답
- OECD의 Does Inequality Matter? 보고서는 회원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 계수를 비교했는데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나쁜 상태를 보여줌

- 한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성장과 형평을 동시에 달성했지만 200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이 악화
-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배분 상태를 미국, 중국, 덴마크와 비교하면 뚜렷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음
- 소득 및 자산 배분 모두 불평등 순위가 미국, 중국, 한국, 덴마크 순으로 나타났음
- 소득 기준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미국 (20.7%), 중국 (15.7%), 한국 (14.0%), 덴마크 (12.2%)이고, 상위 10% 소득 점유율은 미국 (46.6%), 중국 (43.3%), 한국 (37.4%), 덴마크 (32.9%)로 나타났음
- 한국과 미국의 소득 상위 1%는 소득세의 40%를 부담
- 자산 기준 상위 1% 점유율은 미국 (34.8%), 중국 (30.2%), 한국 (25.6%), 덴마크 (20.5%)이고, 상위 10% 점유율은 미국 (69.6%), 중국 (67.9%), 한국 (65.9%), 덴마크 (50.1%)로 나타났음
- 한편 자산 기준 상위 20%의 점유율은 미국 (83), 중국 (80), 한국 (79)로 파레토의 2:8 비율과 유사
- 자산 불평등은 최근 심화되어 2025년의 경우 순자산의 불평등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순자산 기준 10분위별 자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최상위 10%의 자산 증가 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음

나. 역사적 접근

- 불평등에 관한 역사적 접근은 Walter Scheidel의 The Great Leveler: Violence and the History of Inequality from the Stone Age to the Twenty First Century (한국어 번역 제목 : 불평등의 역사)를 토대로 정리
- 발터 샤이델은 인류사의 장기 추세를 통해 불평등은 평화로운 진보가 아니라 대규모 폭력(전쟁·혁명·국가 붕괴·전염병)에 의해 주로 완화되었음을 보여줌
- 선사시대 불평등은 현대 사회와 비교할 때 평등 상태를 유지
- 선사시대가 구조적으로 평등했던 이유는 1)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이 적었고, 2)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해야 부를 축적·상속하기 어려웠으며, 3) 이동하는 단위가 크지 않았으므로 경제 규모 역시 제한적이었고, 4) 토지를 포함한 사유 재산 개념이 희박했으므로 축적된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부의 형태는 주로 이동 가능한 물품(도구, 장신구 등)에 국한
- 농업혁명 이후 초기 정착 사회인 신석기 시대의 추정 지니 계수는 0.30~0.45로 오늘 날 한국의 지니 계수와 유사한 수준
- 신석기 시대부터는 토지 사유화가 시작되면서 세습 자산이 발생하였고 촌락 내 계층화도 진행하면서 불평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 로마 제국은 대토지 집중, 노예제, 정복 전쟁을 통한 부 집중 그리고 수탈적인 조세 구조 등으로 산업화 이전 사회 중 가장 높은 불평등한 사회
- 고대 문명은 국가를 형성하면서 토지 집중, 노예제, 조세 제도를 통해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음
- 중세는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임
- 로마 붕괴 직후 초기 중세에서는 사회 지배 계층인 엘리트가 붕괴하면서 대토지가 해체되었고 지역 분권화도 이루어지면서 불평등이 완화
- 중세 초기 이후 봉건 영주 중심의 토지 지배, 교회 토지의 집중과 더불어 도시의 상업자본이 축적되면서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불평등 현상이 다시 나타남
- 중세 후기 불평등은 페스트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농민 협상력 강화로 인해 완화

다. 이론적 접근

1) 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

-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불평등을 자연적 불평등과 도덕·정치적 불평등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면서 사유재산·노동 분업·시민사회·국가의 형성과정을 통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착되는 과정을 설명
-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적 불평등 대신 도덕적·법적 평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인민 전체가 주권을 나누지 않고 함께 행사하는 인민 주권론을 제시
-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법률로 빈부격차를 제한·조정하여, 한편에서는 누구도 너무 가난해서 자기 자신을 팔지 않도록, 다른 한편에서는 누구도 너무 부유해서 타인을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
- 사회계약론은 절대왕정과 왕권신수설에 맞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근대 민주주의의 원리를 제공
- 이는 미국 독립혁명·프랑스 혁명, 근대 헌정주의, 인권 사상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고, 오늘날에도 정치적 정당성과 시민권 논의의 기본 틀로 간주

2) 프랑소아 케네: 경제표, 농업철학

- 케네는 프랑스 중농주의 대표 인물로, 농업을 유일한 생산적 부로 간주하고 경제 전체의 순환을 경제표(Tableau économique)라는 도식으로 표현
- 경제표는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지출이 계급 간에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거시경제 순환표로 자본주의적 대농(대차지 경영)이 발달한 대농업국에서 농업과 상업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형성되는 경제를 가정

- 중농주의자는 소득 원천과 사회계급을 최소 4가지로 구분
 - 소득 원천은 임금, 이윤, 이자, 순잉여로 구성
 - 사회계급은 1) 70% 인구로 구성된 노동자(농업 노동자, 저숙련 제조업 노동자), 2) 10% 인구 자영업자(포도 재배 자작농, 제조업 장인과 수공업자), 3) 인구 8%의 자본가 또는 소작농으로 이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며 소득이 가능 높음, 4) 엘리트는 지주, 성직자, 관료로 구성
- 케네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은 다양한 자본가 계급 내 소득 차이에서 발생
 - 포도 재배 < 광산업 < 목축업 < 소작농 < 장인 < 지주 < 상업 자본가 < 곡물 토지 자본가 < 임업 토지 자본가 순으로 소득이 발생
 - 케네는 모든 자본의 수익률이 10%로 일정하다고 는 가정에서 자본가 계급별 소득 차이는 결국 투자된 자본 규모의 차이로 설명

3) 애덤 스미스: 국부론

-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는 국부 증진이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상정
 - 그는 원시 국가, 목축 국가, 농업 또는 봉건 국가, 상업 국가로 발전한다는 발전 단계설에 따라 당시 영국을 가장 발전한 상업 국가로 상정
- 스미스 당시 영국 경제의 생산계급과 인구 비중은 노동자 (56%), 농민 (20%), 상인 (10%), 빈민 (9.6%), 자본가 (4.2%), 지주 귀족 (1.5%) 등으로 구성
 - 소득 기준으로는 지주 가족 1인당 평균 소득은 450 파운드, 자본가 145 파운드, 노동자 14 파운드 상인 27 파운드 농민 22 파운드 빈민 3 파운드
- 스미스 국부론의 기여는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과 부를 연결한 점
 - 중상주의 시대에는 통치자와 국가의 부만이 중요하다고 생각
 - 중농주의 시기부터 노동자와 농민의 번영을 국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
- 스미스에 따르면 높은 임금과 낮은 이자율은 경제 발전과 합리적 정의 유지를 바라는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특징
 - 노동계급이 생필품과 편의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국가는 부강
- 스미스는 노동자와 지주의 이익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함께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들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
 - 경제발전은 최하위층 소득을 상승시키나 최상위층 소득을 더 빨리 증가시켜 양극화를 심화

4) 데이비드 리카도: 정치경제학 원리

- 리카도는 경제성장의 핵심 문제를 생산물(소득)의 지주·자본가·노동자 사이 분배 문제로 보고, 그 분배 구조가 경제성장과 불평등을 결정
 - 경제에 참여하는 3계급 간의 분배 문제가 경제 문제의 핵심
- 리카도가 상정한 경제는 기본적으로 농업 경제로 지주는 토지를 소유·임대하고, 자본가는 토지를 빌려 농업 생산을 주도하며, 노동자는 임금을 받는 농업노동자로 구성
- 리카도는 불평등을 수량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계급 간 몫의 구조 변화가 불평등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에 대해 분명한 함의를 제시
 - 지대의 장기적 상승은 지주 계급의 몫과 권력을 확대시켜, 노동자·자본가에 비해 지주의 상대적 지위를 강화
 - 노동자는 인구압력 때문에 생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장기적 노동계급의 생활수준 상승에 비관적
 - 이윤율이 하락하면 자본축적이 둔화되고, 이는 노동수요 증가세를 약화시켜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할 여지도 축소
- 리카도 당시는 소득과 소득 불평등 정도가 동시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
 - 영국의 소득 불평등은 18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악화
 - 리카도 당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극심하면서 동시에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시현

5) 칼 마르크스

- 영국 자본가의 자산 증가로 불평등은 확산되었지만, 노동자의 실질임금 역시 19세기에 걸쳐 지속 증가
 - 19세기 초까지 정체하던 실질임금은 이후 상승 추세
 -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노동 귀족이라 불리는 부유 노동자 계층도 등장
- 마르크스의 계급을 1830년대 프랑스의 사회 계급의 평균 소득과 고용 비중과 비교하면 소득 기준으로는 산업자본가에 해당하는 고용주가 평균 임금의 8배로 가장 높고, 농업노동자/하인의 소득은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장 낮은 수준
- 마르크스 당시 임금은 노동자 유형에 따라 상이하고 국가별로는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임금 변화가 컸음
 - 실질임금 상승 또는 이윤율 하락은 불평등 완화를 초래
 - 경제 위기,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생산 영역 확대 또는 자본 직접업의 고도화는 불평등을 심화
 - 산업예비군 역시 실질임금 하락을 통해 불평등을 심화

6) 빌프레도 파레토

- 파레토는 소득과 부의 분포가 상위 구간에서 멱함수 형태의 파레토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입문』에서도 경제 균형과 분배 구조의 관계를 다루었음
- 여기서 “상위 20%가 총소득/부의 80%를 가진다”는 식의 파레토 원리(80:20 법칙)로 일반화되었음
- 파레토에 있어서 분배는 단순한 경험적 규칙이 아니라, 일반균형과 후생이론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할 구조적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파레토는 1890년대 유럽 여러 나라의 소득·부 자료를 조사하면서, 높은 소득·부 구간에서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이상을 받는 사람의 수가 멱함수 (power function) 형태로 감소한다”는 규칙성을 발견
- 파레토 법칙의 함의는 특정 소득 이상을 얻는 사람에 대한 특정 소득 이하의 소득을 얻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한 불평등 지수
- 소득 분포 곡선이 변하지 않는다면 재분배를 통한 분배 양상을 바꿀 수 없음
- 파레토 계수는 1.5~2 사이에서 안정적이므로 상위 10% 차지하는 몫이 전체 소득의 46% (계수 1.5)에서 상위 10% 차지하는 몫이 전체 소득의 32% (계수 2) 사이
- 파레토는 “상위 몇 퍼센트가 전체 소득·부의 거대한 비중을 가진다”는 법칙을 제시했고, 이를 파레토 원리(80:20 법칙)라 칭함
- 파레토는 이 비율이 정확히 80:2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불균등한 상층 분포가 구조적으로 나타난다”는 성격의 규칙이라고 이해

7) 사이먼 쿠즈네츠

- 쿠즈네츠는 1955년 AEA 회장연설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에서 미국·영국·독일의 약 50~75년 장기 소득분포 자료를 재구성해 산업화 초기에는 불평등이 상승하고, 이후 성숙 단계에서 하락한다는 역-U자형(Kuznets curve) 가설을 제시
- 이 논문은 불평등을 경제성장 과정의 내생 변수로 다룬 계량 분석으로 평가되며, 이후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불평등 논의를 지배한 일반이론으로 자리 잡았음
- 쿠즈네츠는 경제의 발전단계가 낮은 수준일 때는 불평등이 비교적 낮다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불평등이 높아지고, 고소득 단계에 도달하면 다시 불평등이 감소함을 통계적으로 보여 주었음
- 초기 농업사회에서 산업화가 시작되면, 일부 노동자와 자본가가 도시·공업 부문으로 이동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농촌-도시, 전통-현대 부문 간 격차가 커져 불평등이 상승

8)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제도적 통제가 없으면 구조적으로 고도의 자산·소득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주장
 - 자본수익률 r 이 성장률 g 보다 체계적으로 높은 상태($r > g$)가 지속될 때, 과거에 축적된 자산이 노동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남으로써 상위 계층의 부가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를 지배
- 피케티는 18세기 이후 유럽·미국의 소득·자산·상속세 자료를 광범위하게 재구성하여,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불평등을 축소시킨다는 쿠즈네츠 가설을 비판
 - 20세기 중반에 관측된 불평등 완화는 성장에 따른 자생적 결과가 아니라, 두 차례 세계대전·대공황·인플레이션·몰수 및 매우 높은 누진세율 등 비정상적 충격과 강력한 정책의 산물이었음을 강조
 - 불평등의 장기 추세는 제도와 정치에 의해 조정될 뿐,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평등화되지 않음을 주장

9)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 샌델은 현대 불평등의 핵심 문제를 “얼마를 갖고 있느냐” 자체보다,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시민적 존엄을 어떻게 훼손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강조
-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에서 그는 평등을 분배 문제 이전에 도덕적 인정과 시민적 존엄의 문제로 재구성하면서, 능력주의가 공정성·연대·공동선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비판
- 샌델은 현대 사회가 소득·지위의 차이를 능력과 노력의 공정한 보상으로 서사화함으로써, 부와 성공을 도덕적 우월성의 표지로 만든다고 지적
 - 가난과 실패는 구조·운의 결과가 아니라 네 책임으로 환원되고, 성공은 전적으로 네 공로라는 자의식으로 전유되며,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 연대와 상호책임의 감각을 약화시킴
 -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한 분배의 불균형이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고 존중할지에 대한 도덕적 서열화의 문제로 전환

10) 아드리언 울드리지: 능력주의의 두 얼굴

- 아드리언 울드리지의 능력주의(meritocracy)는 현대 문명을 만든 가장 강력한 제도이지만, 그 성공 때문에 스스로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이중성을 지니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능력주의를 개혁하고 재설계해야 함을 강조
 - 능력주의의 본질은 출신이 아니라 성취
- 울드리지가 정의하는 능력주의는 단순한 공정 경쟁이 아니라, 재능과 노력에 따라 선발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적 질서
 - 이는 단순한 분배 원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혁신·행정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동

- 예를 들어, 혈통이 아니라 시험과 성과로 관료를 선발하면 → 더 유능한 정책 집행 → 더 빠른 기술 채택 → 더 높은 성장으로 이어짐
- 오늘날 능력주의는 자기 타락 속에서 위기
- 울드리지의 핵심 진단은 능력주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무 성공해서 귀족제로 변질되었다는 점이 문제
- 엘리트의 세습화: 고소득·고학력층이 교육, 주거, 네트워크를 통해 지위를 자녀에게 이전하면서 능력주의가 사실상 신귀족제로 변질
- 시험과 자격의 과잉: 시험은 원래 공정성을 위한 도구였지만 시험 준비 능력 자체가 계급화되면서 진짜 능력보다 시험 전략, 학벌·자격증이 중요
- 대중의 분노와 정치적 결과: 능력주의는 패자를 단순히 덜 노력한 사람으로 낙인찍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그 결과 엘리트에 대한 불신을 초래
- 울드리지의 처방은 능력주의의 폐기가 아니라 재설계를 통해 수정된 능력주의를 제시
- 엘리트 개방성 회복을 통해 상위 교육기관의 사회적 다양성 확대
- 초기 교육 격차 축소 통해 유아·초등 단계에서 기회 불평등 완화
- 단일 시험 의존 탈피 통해 다양한 재능을 평가하는 다중 경로
- 엘리트 책임 강화를 통해 공공봉사, 사회적 기여 요구
- 존엄의 재구성을 통해 비엘리트 직업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 회복

라. 세대 간 이슈

1) Inheritocracy의 부상

- 영국의 The Economist는 2025년 3월 1일자 기사에서 상속계급사회(Inheritocracy)의 재 등장을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강조
-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잘 적용 되었기 때문에 상속이 적더라도 스스로 부를 일군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
- The Economist는 선진국 전반에서 상속 재산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면서 능력주의가 표방하는 이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
- 상속 규모의 급증
- 선진국 사람들은 올해 약 6조 달러를 상속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0% 규모로, 20세기 중반 선진국 평균(약 5%)의 두 배 수준
- 프랑스에서는 상속 흐름(연간 상속 규모/GDP 비율)이 1960년대 이후 두 배, 독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거의 세 배 규모

- 그 결과 젊은 세대가 집을 사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노동 성취 못지않게 상속 재산에 의해 좌우

2) 대응 방안

- The Economist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사망은 2036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2036년에 미국에서만 150만 명의 붐 세대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
- 주택·주식 가치도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상속될 자산 더미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큼
- 금리가 높아진 세상에서 상속을 받아 은행 예금이나 국채에 넣어두기만 해도 순수 렌티어로서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대부분 선진국의 정부는 상속세를 올리기보다는 줄이는 추세를 보임
- 상속세는 상속 계급 사회 문제를 다루는 공정한 수단일 수 있음
- 상속세는 극도로 인기 없는 세금이라, 정부들은 상속세를 제대로 집행하기보다 각종 예외·감면 규정을 도입하거나, 과세 기준(공제 한도)을 올리고, 아예 세제를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에 의존하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음
- 현대 사회의 문제점은 불평등은 커졌는데 세금은 과거에 비해 매우 진보적
- 1980~90년대 선진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상승했고, 이후 불평등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중산층 소득은 정체하였고 그 결과 포퓰리즘은 부상

4. 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

가. Z세대 사회주의

- 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은 'Z세대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청년 좌파 포퓰리즘의 성격을 정리하고, 한국 청년층의 소득·자산 구조를 진단한 뒤, 시장경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년 세대의 주거·생계·기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
- The Economist는 2026년 특집에서 Z세대 사회주의를 높은 집값·임대료·인플레이션과 AI로 인한 일자리 불안에 직면한 청년층이 "내 임대료 낮춰라, 공짜 교통·보육을 제공하라, 내 일자리를 지켜라"는 식의 즉각적 비용 경감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
-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 등의 일부 정치인과 녹색당·좌파정당은 임대료 동결, 시영 식료품점, 무상 보육·무상 교통, 교육비 전면 무료화 등 강한 가격·임대료 통제와 공영화를 통해 이를 구현하려 함

- 이들은 기업의 '탐욕 인플레이션'을 생계비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하고, 경제 성장은 일반 시민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정부 지출 재원도 광범위한 증세가 아니라 초고소득·초부유층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믿음
- 그 결과 전통적인 사회주의·자유주의가 노조와 누진세, 공공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자본주의 틀 안에서 개혁을 추구하던 것과 달리, Z세대 사회주의는 시장과 대기업에 대해 강한 불신을 보이며 규제·공영화·부자 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지님
- Eurobarometer와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생계비가 이민·실업·환경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며, 물가·주거비 위기에 대한 분노가 기업과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짐
- 미국에서는 다수 시민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을 '기업의 탐욕'으로 보면서도 연방 소득세는 너무 높다고 느끼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신뢰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하버드 정치연구소 조사에선 미국 18~29세 청년층에서 자본주의·사회주의 모두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하며, 이념 자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당장 생활비를 낮추고 소득을 올려 줄 정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이는 체제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고비용 구조 속에서 '누가 내 청구서를 줄여 줄 것인가'라는 실용적·거래적 정치 선호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국 청년 세대 소득 및 자산

-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25년 3월)에 따르면, 소득 5분위의 자산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는 6.1% 감소해 분배 구조가 더욱 악화되었고, 자산 점유율도 상위 5분위는 1.4%p 늘고 하위 1분위는 0.7%p 줄었음
- 가구주 연령별 평균 자산은 40대·50대에서 각각 7.7% 증가한 반면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오히려 0.3% 감소하여, 자산 수준도 가장 낮고 증가율마저 가장 부진한 세대로 나타났음
- 자산 구조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실물자산 비중이 커지며, 50대 가구는 6억 6,205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39세 이하 가구는 3억 1,498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청년층은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실물자산(부동산·거주주택) 격차는 훨씬 크며, 이는 주거 사다리 진입 실패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
- 부채는 40대·50대·60세 이상·39세 이하 순으로 빠르게 늘고 있으나,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금융부채/저축액 비율로 본 재무 건전성은 청년세대가 가장 취약
- 39세 이하 가구의 부채/자산 비율은 30.3%로 60세 이상(10.8%)의 세 배 가량이며, 금융부채/저축액 비율도 131%로 고령층(4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39세 이하가 63.0%로 높고,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 역시 가장 높아, 소득·자산이 불안정한 시기에 높은 레버리지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드러남

- 이는 주거·교육·생활비를 빚으로 메우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경기 충격에 대한 청년층의 취약성을 크게 키울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한국 청년층 일부 정서를 The Economist가 묘사한 Gen-Z socialism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me-first형 분배·가격 개입 요구'로 해석한다. MZ세대는 “경제 규모와 1인당 GDP는 최대인데, 월세·점심값·좋은 일자리 측면에서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인식 속에서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와 자산가에게만 돌아갔다는 제로섬 정서를 강하게 갖고 있으며, 주거·생활비에 대한 가격 통제와 보조금 정책에 높은 기대를 보인다.
- 또한 자원 조달에 있어 부가세·보편적 소득세 인상에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면서, 재벌·초부유층·대기업에 대한 누진 상속·증여세·보유세·소득세 강화에는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서구형 Gen-Z 사회주의의 '상층부 집중 과세' 인식과 닮아 있다. AI·플랫폼 노동 확산과 비정규직 확대는 “노동시장의 위험은 젊은 세대가, 연금·복지의 과실은 기성세대가 가져간다”는 정서를 강화하며, 국가의 일자리 보장 책임과 기술 변화에 대한 방어적 규제 요구를 키운다.

다. 한국의 청년 세대를 위한 제언

- 서구에서는 Z세대 사회주의가 녹색당·좌파당, 특정 정치인 등을 매개로 조직화된 정치 프로젝트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에선 아직 전국적 정치 세력보다는 개별 정책 선호와 온라인 여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차이가 있음
- 한국 진보정당·시민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기후·노동권 등 전통 좌파 의제와 결합되어 있어, '생활비·가격 통제' 단일 어젠다로 재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
- 한국에서도 성장 스토리 붕괴, 주거·자산 불평등 심화, AI·노동시장 변화 속 세대 간 부담 배분에 대한 불만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Gen-Z식 정서적·경제사회적 기반이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고, 정책 선호 차원에서는 이미 그 징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제시
- Z세대 사회주의가 제기하는 불만은 정당하지만, 가격 통제·AI 도입 저지·극단적 부자 증세 등 일부 해법은 주택 공급 위축, 투자 감소, 성장 둔화 등 부작용이 크므로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설계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저렴하고 풍부한 주택과 인프라 공급 확대, 청년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기성세대 연금 구조의 조정,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보육 서비스 확충을 통해 청년의 생활비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향이 중요
- 재정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낭비적 정부 지출을 줄여 효율성을 제고한 후, 증세가 불가피한 경우 안정적·광범위한 세원을 유지하되 초부유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 부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완화할 새로운 세제 설계가 필요
- 초부유층 실제 세부담률에 대해서도 학계 연구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정교한 계량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조세 개혁을 논의해야 함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모두의 성장과 불평등 해소

CONTENTS

I. 문제의 제기	1
1. 2026년 국정운영 방향	3
2. 연구 주제: 성장전략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5
II. 새로운 성장전략의 모색	9
1. 과거 성장전략에 대한 평가	11
2. 모두의 성장	27
III. 불평등의 경제적 접근	29
1. 불평등 현상의 이해	31
2. 역사적 접근	36
3. 이론적 접근	40
4. 세대 간 이슈	72
IV. 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	85
1. Z세대 사회주의	87
2. 한국 청년 세대의 소득 및 자산 현황	93
3. 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	96
참고문헌	101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모두의 성장과 불평등 해소

표 목차

〈표 1〉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21
〈표 2〉 대분류 영역: 순위 변화 (2001~2022)	23
〈표 3〉 2022년 대분류별 순위(요약)	25
〈표 4〉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34
〈표 5〉 시대별 불평등 추이	39
〈표 6〉 케네 당시 사회계급의 소득 수준과 인구 비중	43
〈표 7〉 3계급의 이득과 사회적 후생	48
〈표 8〉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사회 계급 규모와 상대적 소득	52
〈표 9〉 1831~32 기간 트리어 지역의 소득과 인구 비중	53
〈표 10〉 스미스와 마르크스 당시의 영국 3계급의 상대 소득 비교	55
〈표 11〉 1831년 프랑스 사회표	56
〈표 12〉 유럽 주요 국가의 명목 임금 (1848년)	56
〈표 13〉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7
〈표 14〉 1865 잉글랜드와 웨일스 납세자 소득분포	58
〈표 15〉 국가별 소득 분포 구간별 파레토 계수	61
〈표 16〉 1774~1929년 미국의 불평등과 평균 소득	65
〈표 17〉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보유액	93
〈표 18〉 자산 유형별 보유액 및 구성비 (가구주 연령대 및 종사상지위)	93
〈표 19〉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보유액	94
〈표 20〉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보유액	95
〈표 21〉 가구특성별 가계의 재무건전성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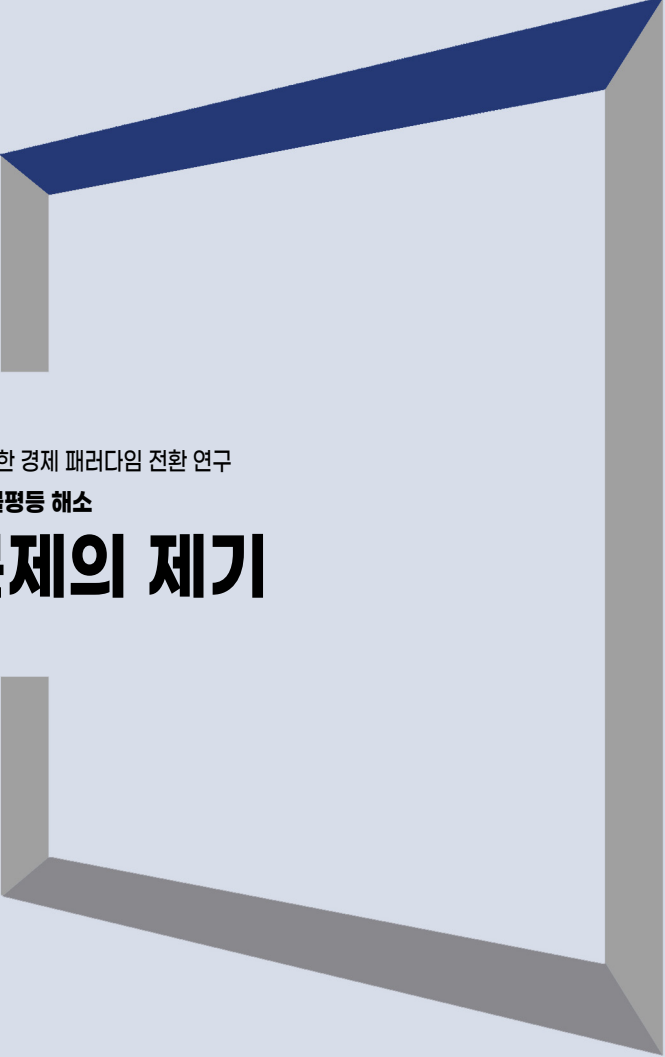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 OECD 회원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 계수	33
[그림 2] OECD 회원국의 자산 기준 지니 계수	33
[그림 3] 지니 계수 추이	34
[그림 4] 지니 계수 및 5분위 배율	35
[그림 5] 역사적 시기별 지니 계수	39
[그림 6] 케네 당시 사회계급의 소득 수준과 인구 비중	44
[그림 7] 스미스 당시의 인구 비중과 소득 수준	47
[그림 8] 영국 1688~1911 지니 계수와 1인당 GDP	50
[그림 9]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로 할인한 실질임금 추이	53
[그림 10] 1670~2010년 잉글랜드 최상위 1% 부 점유율	54
[그림 11] 영국 1760~1870 잉글랜드 실질임금 추이	54
[그림 12] 파레토 곡선	60
[그림 13] 파레토 상수	61
[그림 14] 전체 부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	64
[그림 15] 1774~2019 미국의 장기적 불평등	64
[그림 16] 쿠즈네츠 모형에서 평균 소득과 불평등	66
[그림 17] 중국의 쿠즈네츠 곡선 (1985~2019)	67
[그림 18] 상속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72
[그림 19] 미국의 순자산	75
[그림 20] 정부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	76
[그림 21] 가구 소득 형성 단계별 지니 계수 및 한국 불평등 순위	77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모두의 성장과 불평등 해소

그림 목차

[그림 22]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 규모 (2016~22)	78
[그림 23] 복지국가가 불평등에 미친 효과: 상위 10% 대비 하위 50% 비율의 변화 ·	79
[그림 24] 미국의 상위 1% 세후 소득과 조세 부담	80
[그림 25] 주요 G7 국가의 지니 계수 추이 (1970~2020)	80
[그림 26] 미국 평균 조세 부담률 (소득 이전 이후)	82
[그림 27]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87
[그림 28] 유럽인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	89
[그림 29] 영국인 중 세금을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 ····	89
[그림 30] 미국 18~29세 청년 세대의 이념 지지	90
[그림 31] 연령대별 자산 보유액	94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모두의 성장과 불평등 해소

I. 문제의 제기

I. 문제의 제기

1. 2026년 국정운영 방향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가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면서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수 있다”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을 강조
- 2026년 경제 운영은 성장 패러다임의 완전 전환을 목표로 하였고, 국정운영은 국민의 삶이 제1 원칙임을 강조
 - 한국 경제가 기존 성장전략에 안주하는 경우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대전환을 통한 경제 도약을 추구
 -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 특권, 불공정을 바로잡아 국민 삶의 질을 향상
-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 길을 제시
 - “성장전략의 대전환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시도”라고 설명
-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 지적
 -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
-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은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벤처기업”임을 지적
 -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나가겠다”고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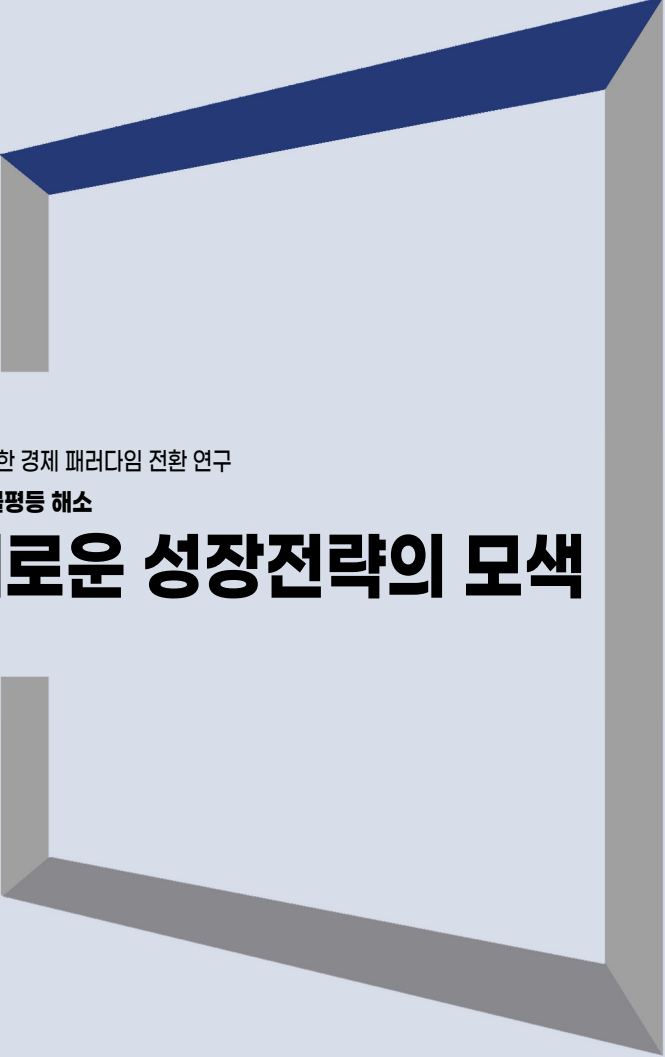
-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며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 등 안전한 작업 환경과 생명 존중을 위한 조치를 확고히 시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
-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과 관련해선 “올해 9조 6000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으나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전략으로 삼겠다”고 했음
- 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했음
-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고, 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밝혔음

2. 연구 주제: 성장전략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 2026년 연구 주제는 성장전략의 5개 대전환 중 일자리 관점에서 가장 긴밀하게 연관된 분야와 더불어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
- 성장전략 중 현 정부의 관심이 가장 큰 분야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분야이므로 우선 이 분야를 일자리와 연계시켜 살펴볼 것임
 - 모두의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지만 그 중에서도 매출 1천억 원 이상 규모의 고성장 벤처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기대됨
-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이상, 고용의 80% 안팎을 차지하며, 그 안에서 고성장 벤처기업의 부가가치 성장 기여도가 증가 추이
 - 벤처기업은 부품·서비스·용역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높아, 성장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자영업에 추가 매출과 고용을 유발
 - 국내외 공급망에 편입된 경우, 물류·컨설팅·IT서비스·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1차·2차 협력업체의 매출·고용을 확대시키는 파급효과를 지님
- 한국은행·OECD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는 벤처·혁신형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부문의 부가가치 성장 기여도가 대기업을 상회하는 추세가 나타남
 -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특허·신제품 등 혁신 성과가 더 크며, 이는 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짐
 - 매출 1천억 원 수준까지 성장한 벤처는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후발 스타트업·동종 업종에 모방·파급 효과를 주어, 산업 전반의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음
 - 일정 규모에 도달한 벤처는 코스닥·코스피 상장 또는 M&A를 통해 자본시장에 편입되며, 이는 투자자 수익과 함께 연기금·기관투자자의 자산 수익률 개선에 기여
 - 기업이 창출한 이익과 임직원 소득은 법인세·소득세·사회보험료 형태로 재정에 기여하며, 고성장 벤처 집단이 늘어날수록 세수 기반 다변화 효과가 발생
-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수는 많지만 생산성과 임금이 낮은 것이 문제인데, 매출 1천억 원급 고성장 벤처는 '생산성 높은 중소·중견 기업층'을 두껍게 만들어 구조적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
 - 정책 측면에서는 단순히 매출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기보다, 성장·혁신 역량을 가진 벤처가 1천억→수천억→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 생산·고용을 키우는 것이 필요

- 초혁신 경제 구현 차원에서 인프라·기술, 산업, 인재 등 전분야 AI 대전환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혁신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선정하여 AI 로봇, AI 선박, AI 가전, AI 드론, AI 반도체, AI 팩토리 분야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
 -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산·학·연 연합을 통해 7대 선도 분야에 AI를 심어 제조·물류·재난·농업 등 비정형 현장을 자동화, 지능화
 - 이를 위해 국가 AI 컴퓨팅센터, 독자 AI 모델, 국산 NPU(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등 공통 인프라를 깔고, 각 분야별 실증·규제 완화·R&D·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붙이는 피지컬 AI 정책의 큰 틀을 마련
-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분야에서도 K-컬처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큼
 - K-컬처 산업 육성은 고용 친화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 2022년 기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는 약 62만 6천 명 수준으로, 출판·지식정보·게임·방송·음악 등이 주요 고용 흡수 부문
 - K-팝·드라마·게임·웹툰 등 K-컬처 핵심 분야 매출은 2023년 기준 154조 원, 수출 133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해 관련 기업의 상시·전문직 고용 기반을 확대
 - 한류 확산에 따른 화장품·패션·식품 등 소비재 수출 증가(2017~2021년)는 총 37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이 중 11만 6천 개가 소비재, 4만 4천 개가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6년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 예상되지만,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등 구조적 과제도 상존
 -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지속 하락 우려
 - 투자 증가율은 2000년대에는 4.6%, 2010년대에는 3.2%, 그리고 2020~24년에는 1.2%로 하락
 - 경기회복이 IT 편중 성장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IT 대 비IT 부문 국내총생산 비율은 2000년을 100 기준으로 1995년에는 42:76, 2005년 185:126, 2015년 440:178, 2024년 882:214로 그 격차가 매우 커졌음
- 소득 분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악화되다가 2010년대 이후 복지지출 확대로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주요국가 대비 불평등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시장소득 기준 지니 계수는 지난 10년 기간 다소 정체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 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 2023년 소득 지니 계수는 0.323으로 OECD 국가 평균이 0.307보다 높은 수준
- 자산 격차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어 2025년 3월 기준 순자산 지니 계수는 역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0.625를 기록
- 2025년 3월 기준 순자산 5분위 배율 역시 7.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음
-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가 자산 양극화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며, 부동산 중심 자산 쏠림과 고소득층 낮은 소비성향이 성장에도 부정적이라고 진단
-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더불어 자산 불평등은 다음 세대의 상속, 증여 문제로 연결되어 불평등의 세습화를 가져와 사회의 가치관에서 경제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국 사회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계 순자산의 60% 이상을 보유
- 베이비 부머와 그 앞선 세대의 상속 증여 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국세청 집계 기준 상속, 증여 재산 가액은 최근 5년 기간 두 배 이상 증가 (2024년 188조원)
- 상속·증여 등 세대 간 이전이 전체 부의 지니 계수의 약 23%를 설명할 정도로 자산 불평등에 기여
- 한국 사회에는 2022년 기준 15~29세 청년 중 18.3%가 NEET(니트)로 분류되며 이는 OECD 국가 중 3위로 높은 수준
- 인구 감소로 절대 숫자는 줄었으나 2023년 상반기 기준 42.5만 명 (30대를 포함하면 70만 명 수준)이며 20대 후반 남성 비율이 높은 편
- 니트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우울, 정신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니트 청년 문제는 단순한 취업 문제를 넘어 고립·불안·장기 실업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까지 포괄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 외에 심리적 지원도 중요
- 한편, 노동시장의 주요 현안인 정년 연장, 해고 유연화, 포괄임금제 폐지 등의 이슈를 2026년 성장전략 안에서 평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
- 정부는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앞두고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제기
- 노동시장 부분의 핵심 기조는 고용안정·권리 보호·임금체불·안전 문제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바, 과연 해고 유연화와 포괄임금제를 향후 어떻게 접근할지 논의가 필요
- 과거의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모두의 성장 관련 주요 전략을 검토해 경기도 일자리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 주권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평등, 청년 계층,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모두의 성장과 불평등 해소

II. 새로운 성장전략의 모색

II. 새로운 성장전략의 모색

1. 과거 성장전략에 대한 평가

1) 한국의 시장경제 정착 과정

- 한국의 성공 신화는 시장경제의 정착과 더불어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달성으로 압축적으로 설명
 - 한국의 제헌헌법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헌법상 권리로 명문화함으로써 사적 소유·기업 활동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 질서를 확립
 - 제헌헌법에서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정은 민법·상법·회사제도·금융제도 정비의 기 준점이 되었음
 - 제헌헌법은 사회정의 실현,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우선 원칙으로 선언했지만 공 공성이 큰 산업의 국영, 공영화를 명시해 국가 주도 산업화의 근거를 제공
 -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기반을 갖추면서 민주주의를 이루었음
 - 1980년대 후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도시 중산층 역시 증가하면서 민주주의 기반이 마련
 -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시민사회가 급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정착
- 한국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정착 과정을 살펴보면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음
 - 농지개혁, 수출주도 산업화, 안정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시장경제가 정착

가. 농지개혁과 시장경제

- 해방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농지개혁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배분 방식과는 대조 적으로 달리 유상몰수, 유상배분을 채택하면서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질서 정착에 기여
 -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유상몰수·유상분배 방식을 채택해, 북한의 무상몰 수·무상분배와 대비되는 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토지 재편을 선택
 -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전환되면서 농민 다수가 토지라는 사유재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는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질서 수용의 인센티브를 강하게 부여

- 농지개혁 이후 자작농 비율은 14.2%에서 1951년 80.7%로 급증하고, 소작농 비율은 50.2%에서 3.9%로 급감해 경작자가 소유하는 구조(경자유전)가 현실적으로 구현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결합
 - 지주 계급의 몰락과 소작농의 자작농화는 지주-소작이라는 준신분적 계층 구조를 해체해, 경제적·정치적 평등에 대한 기대를 확대
 - 재산을 가진 다수 농민의 보수화·반공화는 공산주의 이념의 확산을 제약하면서, 시장경제와 선거민주주의가 결합된 체제를 정착시키는 기반이 되었음
- 유상몰수·유상분배의 경제학적 의미
 - 토지를 국가가 강제로 몰수하되 지주에게는 지가증권으로, 농민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으로 처리함으로써, 형식상 계약·보상·상환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유지
 - 이는 재산권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구조를 재편한 것이며, 토지 사회화가 아닌 토지 소유의 재분배를 통해 자본주의 틀 안에서 구조개혁을 시도
- 농지개혁의 경제적 성과
 - 이론적으로 소유와 경작의 일치, 농민 인센티브 상승, 집약적 경작 확대는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이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농민은 농지대금 상환·전쟁세(임시토지수득세)·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비료·종자·농기구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했고, 분배 농지는 상환 완료 전까지 담보 대출이 금지되어 자본 접근성이 낮았음
 - 그 결과 농업 총생산은 완만한 증가에 그쳤고, 쌀 생산 증가율은 일제시기보다 낮아져, 농지개혁이 단기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 했음
- 정부의 재정·투자 역할
 - 정부는 귀속농지(일본인 토지) 상환분 등에서 큰 사업 잉여를 남겼고, 일반분배 농지까지 합산하면 농지개혁 특별회계 세입의 약 65%가 잉여로 남았음
 - 잉여 덕분에 정부는 수리시설·간척 등 농지개량사업을 추진해 천수답 비중을 34.3%에서 19.4%로 줄이고, 경지면적을 171만 정보에서 188만 정보로 확대하는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산업자본 형성의 실패와 부분적 전환
 - 농지개혁은 초기에는 지주가 받은 보상금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해 자본축적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지가증권의 실질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지주 계급은 몰락

- 지가증권은 평균 액면가의 절반 이하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생활비로 소진되어 전통 지주계급이 기업가로 전환하는 경로는 미약했으며, 다만 일부 신흥 기업가가 저가 매입한 지가증권으로 귀속기업을 불하받는 방식으로 산업자본을 축적하는 사례가 있었음
- 농지개혁은 매우 불평등했던 토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분산시켜, 자산 집중을 완화하고 초기 조건의 균등성을 높였음
- 토지 집중 완화는 교육투자 가능성을 넓히고 중장기 성장에 우호적인 소득·자산 구조를 형성하는 효과를 지녔음
- 이승만 정부는 1950년 농지개혁 직후 6년제 의무교육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 예산 비중을 1950년 5.7%에서 1960년 15.2%로 확대하였고 취학률 역시 96%에 도달
- 농지개혁으로 자작농이 된 농민들은 자녀 교육에 우선 자원을 배분했고, 농지개혁에서 제외된 사학재단도 1950년대 중반까지 중·고·대학을 대거 설립해 교육 기회를 크게 확장
- 농지개혁-의무교육-사학 확대가 결합해 숙련 노동을 대량 공급하는 인적자본 기반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1960년대 이후 제조업 주도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
- 결과적으로 농지개혁은 재산권 기반의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결정적으로 기여
- 소작농의 자작농화와 광범위한 토지 소유 분산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대중적 제도로 정착
- 지주-소작 구조에서 발생하던 지대의 상당 부분이 농민·정부로 이전되어, 장기적으로 성장 친화적 분배 구조를 형성
- 인적자본·산업화 기반: 농지개혁과 교육 확대의 결합은 숙련 노동, 내수 수요, 대량 생산 체제를 가능한 조건을 동시에 마련
- 시장경제 친화적인 농지개혁은 당시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던 대중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

나. 수출주도 산업화와 시장경제

- 1950년대 한국 경제는 농업 비중이 크고, 내수 보호와 수입대체 지향 정책이 우세했으나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는 자원 빈곤·내수시장 협소·외자 필요성 등을 인식하고, 성장의 엔진을 수출에 두는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
- 1964년 대폭적인 환율 절하와 관세·수입규제 완화를 단행하여, 수출재와 수입경쟁재의 국내 가격이 세계시장 가격과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도
- 수출기업에는 관세환급·세제감면·수출금융·수입우선 배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국내시장 보호 수준은 비교적 낮게 유지해 비효율적인 수입대체 산업에 과도한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정부는 금융배분·외자배정·각종 특혜를 수출실적과 연동함으로써, 기업이 '정부와의 관계'보다 세계시장 성과에 의존해 성장하도록 유도
- 수출 부문에서는 세계시장 가격·품질·납기 경쟁이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준시장적 경쟁 구조가 형성
- 제조업 수출은 1962~73년 연평균 30% 안팎의 속도로 증가했고, 제조업 생산 증가율도 1965~73년 연평균 20%를 상회
- 초기 수출품은 섬유·의류·가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중심이었으며, 이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이라는 비교우위를 활용해 세계시장에 진입한 전형적 사례
- 실증분석에 따르면 1960년대 한국의 제조업 수출은 수입품보다 노동집약적이었고, 제조업 전체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지는 동안에도 수출 부문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은 상품으로 구성
- 1970년대 이후 정부는 중화학 공업 육성을 통해 철강·조선·기계·화학·전자 등 자본·기술집약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추진했고, 이들 산업 역시 수출시장을 주요 판매처로 삼았음
- 수출은 저임금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넘어, 기술 축적·규모의 경제 실현·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해 동태적 비교우위(학습·기술혁신)에 기여
- 국내시장이 작고 보호 수준이 얇은 상태에서, 수출기업은 가격·품질·납기에서 글로벌 경쟁자와 직접 경쟁해야 했고, 이 압박이 비용절감·품질개선·생산성 향상을 강하게 유인
- 세계은행 등 연구는 한국의 수출 확대로 인해 제조업 부가가치와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증가했고, 1960~73년 사이 제조업 TFP가 약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보고
- 정부는 특정 업종·기업을 지원했지만, 지원의 지속 여부는 수출성과에 의존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이 검증되지 못한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웠음
- 국내 보호가 높고 수출 의무가 없는 전통적 수입대체 전략과 달리, 한국의 수출주도 전략에서는 정부 보호가 조건부였고, 수출 실패는 정책 지원 축소로 이어지는 식의 시장규율 장치가 내장
- 환율·관세·보조금의 조합에도 불구하고, 무역정책의 설계는 국내 거래재 가격이 세계 가격과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비교적 성공했고, 이는 초과이윤과 심각한 비효율의 여지를 줄였음
- 수출지향 전략 아래에서의 평균 유인율과 그 분산이 낮았다는 실증 결과는,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차별적 지원보다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경쟁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시사

- 해외 바이어의 요구, 국제표준, 기술이전·OEM 경험 등은 기업이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는 강력한 학습 기제로 작동했고, 이는 단순한 양적 성장 이상의 효율성·기술수준 향상으로 이어졌음
- 초기에는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기술·디자인·브랜드 등 비가격 경쟁력 요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출을 통해 축적된 학습이 동태적 경쟁력을 강화
- 한국의 수출주도 산업화는 완전한 자유방임이 아니라, 국가가 금융·외환·무역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이 그 틀 안에서 경쟁하는 제한적 계획된 시장경제에 가까웠음
- 자원배분의 최종 심판은 세계시장이었고, 수출 실적이 곧 정책·금융 지원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정부개입은 상당 부분 시장신호와 연동되어 작동했음
- 정부는 수출 확장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재벌에 금융·외자·프로젝트를 집중 배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활용했지만, 동시에 재벌 간·국제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일정 수준의 효율성을 유지하려 했음
- 재벌 집중·내수 독점·정경유착 등 경쟁제약 요인이 심화되었으나, 최소한 1960~80년대의 수출경쟁 국면에서는 재벌 간 성과 경쟁이 비용절감·품질개선을 압박하는 역할도 일정 부분 했음
- 수출 확대는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임금소득을 끌어올렸으며, 교육투자 확대와 결합하여 숙련노동 공급을 증가
- 인적자본 축적은 기술·관리·마케팅 역량을 높여, 나중에는 저임금에서 벗어나 기술·지식 기반의 경쟁력으로 이동하는 데 기여
- 수출주도 산업화 과정에서의 정부-재벌 유착, 금융 왜곡, 과잉투자 등은 1997년 외환위기 시기 취약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수출주도 전략이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새로운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줌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경쟁법 강화·금융자유화·자본시장 육성·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며, 전통적 수출·재벌 중심 지원에서 보다 경쟁친화적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 오늘날에는 수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서비스·디지털·글로벌 가치사슬 내 고부가가치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방과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유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
- 결과적으로 수출주도 산업화는 (1) 비교우위에 따른 자원배분, (2) 세계시장에 의한 성과 평가, (3) 낮은 보호와 조건부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한국 산업의 가격·품질·생산성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음
- 정부 주도의 선택·집중·재벌 중심 성장, 금융왜곡, 분배 문제 등은 시장경쟁을 왜곡하거나 잠재적 취약성을 키운 요인으로 남았으며, 이후 개혁·조정의 대상이 되었음

다. 1980년대 안정화와 시장경제

- 1980년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안정화 정책은 1970년대 고도성장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
 - 중화학공업 드라이브와 정책금융 남용으로 과잉투자·과잉부채가 누적되었고, 특히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투자 효율 저하와 채산성 악화가 심각
 - 경공업·서비스 부문과의 자원 배분 불균형,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부동산 투기 등 구조적 왜곡 역시 심화
-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 이후 물가가 급등했고, 임금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면서 수출경쟁력 악화 현상이 나타났음
 - 1979년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이 발표될 만큼 생필품·부동산·집세의 급등, 저축 정체, 기업의 부동산 투기가 주요 정책 현안이었음
- 정부 주도의 선택·집중·보호·지원 모델은 초기 산업화에는 유효했지만, 1980년대 들어 경제 규모 확대에 의해 정부의 미시적 개입·투자조정으로 모든 부문을 통제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
 - 기업의 진입·퇴출이 시장이 아닌 정부의 행정적 판단과 금융기관을 통한 '구제 금융'에 의해 좌우되면서,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이 누적
- 1980년대 중반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약세와 엔고, 3저(저유가·저금리·저달러) 환경 속에서 수출 여건이 유리해졌으나, 동시에 수입·자본시장 개방, 환율제도 개편 등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음
 -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더불어 미국·국제기구로부터 무역·자본시장·환율제도에 대한 개방 압력이 강화
-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정책 기조는 '안정화, 개방화, 자율화'라는 이른바 안정화로 전환되었고, 이는 거시 안정, 금융·산업의 자율화, 대외 개방 및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시장경제 틀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
- 정부는 1979년 '경제 안정화 종합 시책'을 통해 수출 지원 축소,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 농촌 주택개량사업 축소 등으로 과열을 진정시키려 했고, 가격 현실화·가격 규제 품목 축소·금리 자율화 등으로 왜곡된 가격체계를 바로잡고자 했음
 - 재정 긴축, 추곡 수매가 인상 억제, 유가 안정 조치 등을 통해 1980년 28.7%에 달하던 물가상승률을 1982년 7.2%로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
 - 통화 긴축으로 1975~82년 M2 연평균 증가율 35%가 1983~85년 20% 수준으로 억제되었지만, 정책금융 지속 등으로 통화당국의 통화조절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음

- 1979~83년 중화학공업 과잉투자에 대한 투자조정이 단행되어 발전설비·자동차·건설중장비 등 핵심 분야 일부 설비가 축소·조정
- 투자조정은 구제 금융을 수반했으며,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 이후에도 재무 개선에 실패해 1980년대 중반 다시 산업합리화 조치가 필요
- 1985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과 '공업발전법' 제정으로 산업합리화 업종에 세제·금융 지원이 제공되었고, 발전설비·해운·해외건설·석탄·조선·신발 등 구조불황 업종의 합리화가 추진
- 1986~88년 5차례에 걸쳐 78개 부실기업이 정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원금 탕감·이자 감면·장기저리 신규대출·세금 감면 등 사실상 '공적 구제'가 제공
- 금리 자유화는 물가 안정 이후 매우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84~86년 부분 자유화 시도,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 1991년 이후 4단계 추진계획을 통해 본격화
- 정책금융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이유로 오히려 확대되었고, 한국은행 재할인·우대금리 등을 통해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
- 시중은행 민영화가 1981~83년 사이에 진행되었고, 상호신용금고·보험·증권·투자자문·벤처캐피탈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금융시장의 다원화와 사금융의 제도권 편입이 추진
- 한편 기업어음(CP) 시장 확대, 신탁계정 운용 자유화 등으로 은행 대출 밖의 자금조달 비중이 늘었으나, 건전성 감독 기준의 후진성과 감독기구 분절, 회계·공시제도의 낙후 등이 잠재적 금융불안을 키웠음
- 1978년 시도됐다가 석유파동으로 중단된 수입자유화는 1984년 이후 5개년 수입자유화 계획과 함께 본격 추진되었고, 1986년 경상수지 흑자 확대, 1989년 비관세장벽 완화, 1990년 GATT 11조 이행으로 수입시장의 자유화가 심화
-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통해 일본과의 교역불균형 완화가 시도되었으나, 통상마찰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났음
- 자본시장 개방은 상품시장에 비해 늦게 진행되었고, 1980년대 후반 경상흑자에 대응해 해외직접투자 규제 완화·수입신용 및 은행차입 규제 강화, 1990년대 초 장기자본유입 자유화·주식시장 부분 개방 등이 추진
- 1990년 복수통화바스켓제에서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전환하며 환율 변동폭($\pm 2.25\%$)을 허용하는 등, 점진적인 환율제도 시장화가 이루어졌음

-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부당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 제한, 재판매가격 유지 제한 등 전통적 경쟁법 규정에 더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가 주요 목표
 - 공정거래위원회가 1981년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독립하면서 경쟁정책 당국의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진입 규제·투자조정·가격통제·공기업 통제 등 산업정책적 개입이 광범위해 시장경제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은 제한적
 - 재벌 규제는 1980년 '기업체질강화대책', 1987년 출자규제제도·여신한도관리제도를 축으로 상호채무보증 제한, 소유분산·지배구조 규제, 업종전문화 유도 등 다층적 장치를 도입했지만, 경제력 집중 억제 효과는 미미
 - 정부는 재벌 파산을 사실상 용인하지 않는 '대마불사'를 유지했고, 1985년 국제그룹 해체가 거의 유일한 예외일 정도로 위험공유 체제를 지속해 도덕적 해이를 강화
- 1980년대 안정화는 1) 물가 안정과 거시 안정, 2) 수입·환율·자본시장 개방의 진전, 3) 금융·산업의 자율화 확대, 4) 공정거래법·재벌규제 등 경쟁질서의 제도화를 통해 한국의 시장경제를 형식적으로는 한 단계 성숙시켰음
 - 정부-재벌 간 위험공유와 광범위한 정책금융, 불안정한 금융감독·회계·공시 체계는 시장규율과 책임원칙을 약화시켜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한국경제의 이면에 구조적 취약성을 남겼음
- 안정화는 계획·통제 중심 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실험'이었고, 그 성공과 실패의 양면이 1997년 위기와 이후의 구조개혁 의제(금융자유화, 지배구조 개선, 재벌 개혁, 감독체계 정비)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

라. 외환위기와 시장경제의 정착

- 1997년 한국 외환위기는 거시지표가 양호했음에도 금융·기업 부문의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대외 충격과 자본 유출이 겹쳐 터진 유동성·신뢰 위기
 - 위기 직전까지 성장률은 6~9%, 실업률은 2%대, 재정수지는 소폭 흑자, 물가도 안정적
 - IMF와의 연례협의에서도 양호한 성과 (clean bill of health)라는 평가를 받았음
 -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4%를 넘고, 순대외부채 비율과 단기외채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등 대외 취약성은 이미 확대되었음
-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은 네 가지로 정리
 - 과다 차입과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은 과잉 레버리지 기업
 - 관치금융과 암묵적 보증에 기대어 부실심사를 일삼은 규율 없는 은행·비은행 금융

- 느슨한 규제·감독과 연성예산제약을 용인한 정부 실패
- 자본계정 개방과 단기외채 의존, 잘못 조정된 환율정책이 만든 대외 불균형
- 1990년대 초 자본계정 자유화 이후 단기 외채가 급증
- 1990년 중반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이 1배를 넘었고
- 1997년 중반에는 2배를 상회
- 1994년 이후 새로 인가된 종금사가 난립하며 해외 단기차입을 중개했고, 감독 부재 속에서 만기구조가 장기 투자 - 단기 부채로 심각하게 왜곡
- 국내외 투자자는 위기 발생 시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에 젖었고,
- 일본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와 태국발 위기 이후의 전염효과가 겹치면서 신뢰 붕괴와 급격한 자본유출로 외환위기가 현실화
- 초기 대응의 실패와 IMF 관리체제
- 위기 발발 후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의 퇴출은 지연되었고, 금융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였으며 외환시장 개입으로 보유 외환을 소진
- 구조개혁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해, 시장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
- 결국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IMF 패키지·채무재조정·국제채 발행을 통해 단기 유동성 위기를 넘겼음
-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고금리·긴축정책과 함께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분야의 구조조정을 포함
- 금융부문의 문제는 정부 개입과 상업성 부재, 느슨한 여신 심사, 부실한 회계와 파편화된 감독체계로 은행들은 대기업 집단에 교차지급보증을 전제로 과다 대출을 했고, 담보 위주의 관행과 느슨한 대손 충당 기준 탓에 부실이 숨겨져 있었음
- 위기 이후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목표는 신용중개 기능 회복과 장기 경쟁력 제고로 1단계에서 5개 은행과 166개 비은행 금융기관(NBFI)이 정리·퇴출하였고, 부실·정상 금융기관을 구분해 정상기관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본확충을, 부실기관에는 정리·합병을 추진
- 금융감독을 통합한 금융감독원(FSS)을 설치하고, 국제 모범규범에 부합하는 건전성 감독체계를 도입
- 기업부문은 고 레버리지·저수익 구조가 심각해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비율은 1995년 647%에 달했고, 위기 당시에도 500%를 상회해 충격에 취약
-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미비한 파산·퇴출 메커니즘 때문에 비효율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존비화되는 문제가 누적

-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은 민간주도, 공정한 손실분담, 워크아웃 중심
 - 55개 기업을 퇴출시키는 선 퇴출, 후 구조조정 전략을 통해 시장규율을 회복
 - 자산·부채 규모에 따라 대기업 집단,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차별적으로 처리
 - 과잉중복 분야에 대해서는 이른바 빅딜을 통해 사업을 맞교환하거나 통합
-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축은 재정 여력(fiscal space)과 사회안전망이었음
 - 한국은 위기 이전까지 낮은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해 왔기에, 위기 국면에서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과 경기안정화·복지 지출 확대를 감당할 수 있었음
- 사회안전망은 단기 대책과 제도 확충으로 나누어,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공공근로 확대 등 경기·고용 충격을 흡수하는 프로그램이 가동
 - 동시에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확대, 국민의료보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중 장기 안전망이 구축
 - 강도 높은 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튼튼한 안전망이 없으면 구조조정 자체가 정치·사회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작동
- 노동시장에서는 구조조정과 동시에 고용유연화와 노동권 강화가 병행
 - 해고·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대신, 공무원·교사의 노동조합 설립과 정치활동 허용 등 권리 측면에서의 진전을 통해 사회적 타협을 도모
 -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합의 문화 형성은 부분적 성과에 그쳐 협력적 노사문화는 미완의 과제로 남았음
-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양적 지표와 질적 구조 모두에서 큰 변화를 겪었음.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급락했지만 빠르게 회복했고,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외환보유액과 국가신용등급은 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개선
 - 정부는 산업정책의 촉진자·후견인에서 규칙을 정하고 감독하는 심판·규제자로 역할이 이동했고, 암묵적 지급보증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설계
 - 규제·감독은 국내 기준에서 OECD 수준의 국제 모범 규범으로 상향되었고, 금융 부문은 은행 중심 관치금융에서 자본시장 중심, 상업성·수익성을 중시하는 체계로 전환
 - 기업은 대마불사, 재벌 중심, 불투명한 지배구조에서 시장규율·투명성·책임경영을 중시하는 구조로 이동
 - 노동시장은 종신고용에서 해고 가능성이 커진 대신, 안전망과 권리 강화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전환

-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는 축복된 위기(blessing in disguise)라고 평가
- 건전한 거시지표만으로 위기를 막을 수 없으며, 금융시스템·자본흐름·레버리지 관리가 중요
- 자본계정 개방은 속도·순서·감독이 결합되어야 하며, 단기외채/외환보유액과 같은 금융 취약성 지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에는 재정여력과 사회안전망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정치·사회적 저항을 완화할 수 있음
- 대마불사 신화를 깨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혁 없이는 장기 성장의 기반을 확립할 수 없음

2) 성장과 형평의 조화: 지표를 활용한 진단

- 한국경제는 농지개혁, 수출주도 산업화, 안정화,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시장경제가 정착되었음
- 경기도일자리재단의 2024년 과제로 수행되었던 경기도 일자리의 미래 전략 수립 연구의 2장 한국의 위상 진단은 거버넌스 지표를 활용해 한국의 위상 변화를 OECD와 G20 국가와 비교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한국의 포용적 성장의 수준을 진단
- 거버넌스 지표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한 나라의 포용적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
- 포용적 성장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조화롭게 성장할 때 달성 가능
- 시장은 앞서 가지만 시민사회가 낙후하다면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는 성공적이지 않은 성장경로라 할 수 있음

<표 1>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부지표내용
국가	기본권	정치	정치안정성지수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Index (-2.5 ~ 2.5)
		자유	자유지수	Freedome in the World, total score (0-100)
		안전	안전지수	World Risk Index
	책무성	부패	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0-10)
		법치	법치지수	Rule of Law Index (-2.5 ~ 2.5)
		정부효과성	정부효과성지수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2.5 ~ 2.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부지표내용
	시장개입	사업지원	기업자유지수	Business Freedom
		행정의 질	행정의질지수	Regulatory Quality Index (-2.5 ~ 2.5)
시장	안정적 성장	소득	국민소득	GDP per person, PPP
		거시안정성	인플레이션	inflation (annual %)
			정부 부채	Government Debt to GDP (%GDP)
		금융발전	금융발전지수	Financial development index
	산업경쟁력	기업환경	사업준비기간	Time required to start a business (days)
			연구개발지출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 of GDP)
		기술혁신	특허 출원 개수	Number of Patent grants at the USPTO
			인적 자본: 노동생산성	Output per worker GDP per person employed (constant 20** PPP \$)
		자본	물적 자본: 투자율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of GDP)
	시장기반	고용	고용 비율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total (%) (modeled ILO estimate)
			온라인정부발전자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정보화	인터넷 사용자 비율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 of population)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	Mobile cellular subscriptions (thousands)
		개방	무역규모	Trade (% of GDP)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net inflows (% of GDP)
시민사회	사회자본	관용	관용	Happiness explained by Generosity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Happiness explained by social support
	형평	경제적 형평	소득5분위비율	Income share held by lowest 10%, Pre-tax national income P0-10 share adults equal split
		사회적 형평	고용에서 성평등지수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emale male (% of female male population ages 15+) (modeled ILO estimate)
	웰빙	사회보장	교육지출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total (% of GDP)
			보건지출	Current health expenditure (% of GDP)
		보건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total (years)

- 거버넌스 지표는 OECD, G20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0~22 기간 패널데이터를 활용
 - OECD는 38개 회원국으로 구성, G20는 19개 국가와 EU집행위원회로 구성
 - 한국을 포함한 11개 회원국은 OECD와 G20에 공통으로 포함
 - 분석 대상 국가는 OECD 38개와 G20 19개에서 11개 국가를 제외한 46개 국가
- 한국의 위상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의 국가 영역은 2001년 32위에서 2022년 22위로 10단계 향상
 - 국가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내용의 순위는 대체로 개선되었는데 특히 정부효과성(16위 상승), 부패(10위 상승), 행정의 질(10위 상승)의 향상 정도가 두드러졌음
- 한국의 시장 영역은 2001년 13위에서 2022년 5위로 8단계 향상
 - 정보화, 개방, 소득은 모두 8계단 상승하여 향상 정도가 두드러졌음
- 한국의 시민사회 영역은 2001년 32위에서 2022년 28위로 4단계 향상
 - 웰빙을 구성하는 사회보장과 보건은 각각 22, 16 계단 상승
 - 시민사회 영역 중 순위가 낮아진 형평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

<표 2> 대분류 영역: 순위 변화 (2001~2022)

국가	국가 순위				시장 순위				시민사회 순위				평균
	'01	'08	'15	'22	'01	'08	'15	'22	'01	'08	'15	'22	
OECD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OECD+ G20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AUS	15	14	13	14	6	5	6	9	9	12	6	11	10.00
AUT	13	10	15	13	15	14	16	16	6	8	13	17	13.00
BEL	17	16	16	17	22	18	19	19	17	17	12	7	16.42
CAN	11	12	12	15	10	9	9	13	10	11	10	10	11.00
CHL	19	23	27	30	31	36	29	33	36	35	30	36	30.42
COL	43	42	39	40	40	41	37	40	41	41	41	43	40.67
CRI	34	36	34	34	46	45	40	43	33	30	33	37	37.08
CZE	28	25	23	20	26	27	25	31	21	21	20	13	23.33
DNK	2	1	2	1	7	7	10	7	1	2	3	2	3.75
EST	23	19	17	11	32	24	22	23	34	28	26	16	22.92
FIN	3	2	1	2	18	15	21	20	7	7	4	3	8.58

국가	국가 순위				시장 순위				시민사회 순위				평균
	'01	'08	'15	'22	'01	'08	'15	'22	'01	'08	'15	'22	
FRA	20	17	22	21	19	17	18	21	14	16	17	19	18.42
DEU	14	15	9	12	17	16	12	11	12	15	11	14	13.17
GRC	29	32	35	35	29	30	44	42	35	32	40	38	35.08
HUN	25	26	32	33	33	29	32	27	24	23	34	23	28.42
ISL	6	5	11	10	9	12	14	14	2	1	1	1	7.17
IRL	9	7	14	8	12	10	11	4	18	4	14	18	10.75
ISR	26	31	30	27	20	21	17	12	16	20	21	20	21.75
ITA	27	33	33	32	21	26	28	30	23	25	32	31	28.42
JPN	21	20	18	18	14	19	15	17	28	29	23	30	21.00
KOR	32	29	26	22	13	11	5	5	32	33	31	28	22.25
LVA	35	30	25	25	34	31	34	36	31	34	28	25	30.67
LTU	33	27	21	19	35	32	33	32	30	31	38	32	30.25
LUX	1	11	10	3	1	1	1	2	19	18	19	22	9.00
MEX	41	39	41	45	27	37	38	38	43	42	44	41	39.67
NLD	4	8	7	7	4	6	8	8	8	3	8	5	6.33
NZL	8	4	3	9	16	20	20	18	20	19	18	26	15.08
NOR	12	9	4	4	5	3	4	10	4	10	2	9	6.33
POL	30	34	28	31	37	38	36	34	26	24	27	33	31.50
PRT	22	21	20	24	23	22	31	29	25	27	25	27	24.67
SVK	31	28	31	29	44	35	35	35	22	22	24	24	30.00
SVN	24	22	24	26	24	23	30	26	11	13	15	6	20.33
ESP	18	24	29	28	30	25	23	24	27	26	22	21	24.75
SWE	10	3	5	6	8	8	7	6	3	6	5	4	5.92
CHE	5	6	6	5	2	2	2	1	5	5	9	12	5.00
TUR	39	37	40	44	45	39	39	41	45	46	43	45	41.92
GBR	7	13	8	16	11	13	13	15	13	9	7	8	11.08
USA	16	18	19	23	3	4	3	3	15	14	16	15	12.42
ARG	38	41	42	39	41	40	41	45	37	36	36	39	39.58
BRA	37	38	37	38	39	42	42	37	40	37	35	40	38.50
CHN	44	45	45	43	25	33	27	22	38	38	39	29	35.67
IND	42	43	44	41	36	44	46	44	44	44	45	46	43.25

국가	국가 순위				시장 순위				시민사회 순위				평균
	'01	'08	'15	'22	'01	'08	'15	'22	'01	'08	'15	'22	
IDN	45	44	43	42	43	46	43	39	29	40	29	35	39.83
RUS	46	46	46	46	28	28	26	28	39	39	37	34	36.92
SAU	40	40	38	36	42	34	24	25	46	45	46	44	38.33
ZAF	36	35	36	37	38	43	45	46	42	43	42	42	40.42

자료: 저자 작성

- 거버넌스 지표를 활용해 어느 나라가 포용성 수준이 가장 높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순위가 모두 상위 30%에 해당하는 국가를 살펴보았음
- 2022년 대분류 지수·순위 표를 기준으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이 상위 30%(46개국 기준 상위 14위 이내)에 동시에 들어가는 국가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 6개 국가
- 한국은 시장 영역만 상위 30%

<표 3> 2022년 대분류별 순위(요약)

국가	국가 영역 순위	시장 영역 순위	시민사회 영역 순위	조건 충족 여부
덴마크	1위	7위	2위	예
아이슬란드	10위	14위	1위	예
핀란드	2위	20위	3위	시장 미충족
네덜란드	7위	8위	5위	예
스웨덴	6위	6위	4위	예
스위스	5위	1위	12위	예
노르웨이	4위	10위	9위	예
캐나다	15위	13위	10위	국가 미충족
한국	22위	5위	28위	시장만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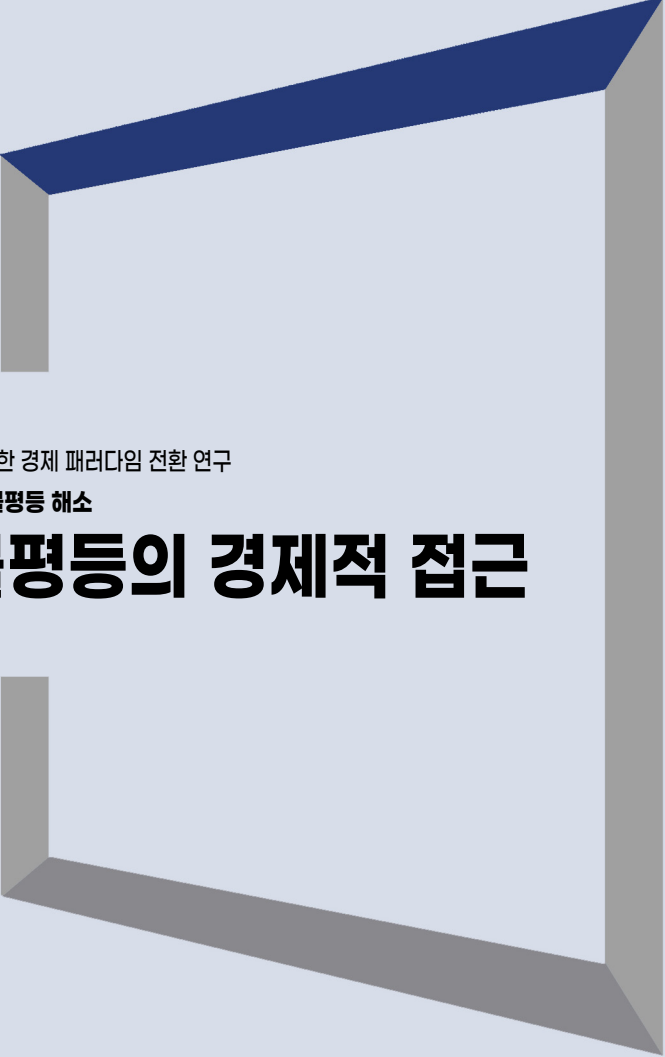
- 한편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영역별 순위 차이가 적을수록 포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4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0년 이후 격차가 어느 정도 축소되었는지 살펴보았음
- 대분류 영역의 LSM 값을 기준으로 영역별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기준으로 격차를 계산
- 한국은 시장의 순위가 높은 상태에서 국가·시민사회가 빠르게 개선되어 상대적 약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 국가·시장·시민사회 지수가 모두 크게 개선되면서, 초기의 후발국 위치에서 상위권으로 수렴
-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지수는 크게 개선되지만 시민사회는 OECD+G20 최하위권에 머물러, 시장-시민사회 간 비대칭이 크게 확대된 사례.
- 인도·러시아: 시장·시민사회·국가 영역의 개선 속도와 방향이 엇갈리며, 특히 시민사회(인도)·국가(러시아)의 취약성이 지속되는 구조적 비대칭이 두드러지는 국가
- 거버넌스 지표를 활용해 한국의 포용 성장 성과를 진단한 결과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는 시장 영역의 성과만 양호하였으나 최근 국가 및 시민사회 영역도 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포용 성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

2. 모두의 성장

- 이재명 정부는 2026년을 ‘성장 패러다임의 완전 전환’과 ‘국민 삶의 질 제1원칙’을 공식화한 대전환의 원년으로 기존 수출·대기업·부동산 중심 성장모델에서 탈피해야 하는 시점으로 규정
 - 투자 증가율이 2000년대 연 4.6%에서 2020~24년 1.2%로 급락하고, 생산성 정체와 함께 잠재성장을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IT 편중 성장이 심화되어 IT 대 비IT GDP 비율이 1995년 42:76에서 2024년 88.2:21.4로 극단적으로 벌어진 점이 구조적 위기의 핵심 징후로 제시
- 또한 수도권 1극 구조, 대기업 중심 고용, 경직된 노동시장,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이 결합된 복합 위기 속에서 벤처·AI·문화 등 신산업을 새로운 일자리 엔진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성장과 고용의 이중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이 뒷받침
 -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혁신(성장)과 포용(분배)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두의 성장’ 전략을 새로운 국가 성장 패러다임으로 설계하는 것을 목표
- 국정 기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균형), 모두의 성장(상생), 지속 가능한 성장(안전), 매력적인 성장(문화), 안정적 성장(평화)을 5대 대전환으로 제시
 - ‘모두의 성장’은 특정 집단의 독식이 아닌 기회·과실의 공평한 배분과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핵심 내용으로 갖는다고 정의
- ‘모두의 성장’은 단순한 재분배의 구호가 아니라, 자산·기회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함을 강조
 - 2023년 소득 지니 계수는 0.323으로 OECD 평균(0.307)을 상회하며, 2025년 3월 기준 순자산 지니 계수는 0.62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상위 20%의 자산이 하위 20%의 7.8배에 달하는 심각한 자산 양극화가 나타남
- 부의 세습화도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데, 60세 이상이 순자산의 60%를 보유하고 상속·증여 규모가 5년간 두 배 증가하여 2024년 188조 원에 이르며, 전체 부의 지니 계수 변동의 약 23%를 설명할 정도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불평등 고착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동
 - 청년층에서는 15~29세 NEET 비중이 18.3%로 OECD 3위이며, 30대를 포함하면 약 70만 명 규모의 청년이 고립·우울 등 심리 문제까지 동반한 사회적 배제 상태에 놓여 있어, 단순 고용정책을 넘어선 종합적 접근이 필요

-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따른 정년 연장, 해고 유연화, 포괄임금제 폐지 등 상충되는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으나, 이를 개별 규제·노사 분쟁 차원이 아니라 성장전략 차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
- 우리나라에서 OECD 기준 250인 이상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에 불과해 독일(41%),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 등에 비해 현저히 낮고, 청년의 선호는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 간 괴리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
- ‘모두의 성장’은 단순 재정 지원 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규제·금융·인프라 등 자원을 총체적으로 재배치하는 성장 전략을 제시
 -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
- 벤처·스타트업, 피지컬 AI, K-컬처 등 고부가가치·고용친화적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설계
 - 매출 1천억 원 이상 스케일업 벤처(985개사, 35.6만 명 고용)와 고용탄성이 높은 문화산업을 새로운 일자리 엔진으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AI 인프라, 금융·규제 혁신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
- 자산 불평등과 부의 세습 고리를 분석하고, 니트 청년의 사회 복귀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
 -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하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강조
- 정년 연장, 해고 유연화, 포괄임금제 개선 등 첨예한 노동 현안을 ‘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효율성과 공정성을 조화시키는 한국형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탐색
 - 성장정책과 노동개혁을 분리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 패키지로 설계하겠다는 의도를 반영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모두의 성장과 불평등 해소

Ⅲ. 불평등의 경제적 접근

III. 불평등의 경제적 접근

1. 불평등 현상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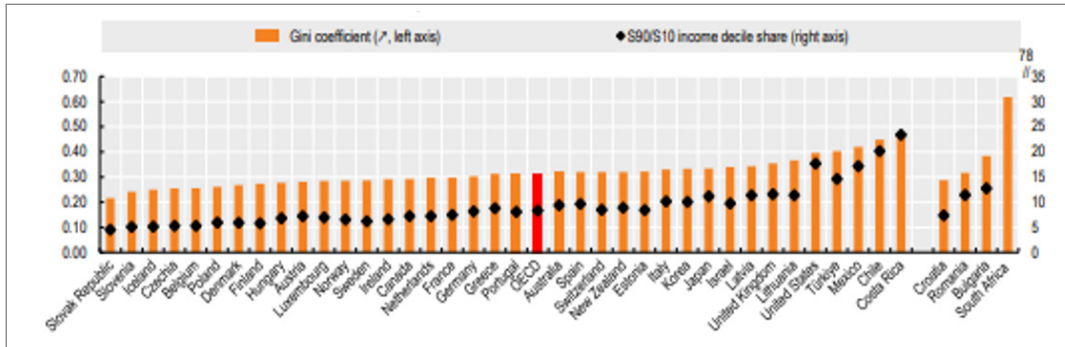
1) 불평등에 대한 조사 결과

- Pew Research Center (2025), Economic Inequality Seen as Major Challenge Around the World에서는 한국을 포함 36개 국가 41,503명을 대상으로 불평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
 - 아시아·유럽·라틴아메리카·중동·북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6개국에서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미국은 별도의 패널 조사(3,600명)로 수행
-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중앙값 기준 54%가 자국의 빈부격차를 “매우 큰 문제”, 30%가 “상당한 문제”로 인식해, 10명 중 8명 이상이 경제적 불평등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
 - 경제적 불평등 외에도 인종·민족 차별(매우/상당한 문제 68% 중앙값), 성별 불평등(62%), 종교 차별(56%) 등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타났음
- 불평등의 원인 중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부자들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중앙값 60%가 “매우 크게 기여”, 26%가 “상당히 기여”한다고 응답
 - 36개국 중 31개국에서 이 요인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높은 비중으로 꼽혔고, 특히 라틴아메리카·일부 아프리카와 남유럽 국가에서 응답 비율이 매우 높음
- 교육 시스템 문제와 기회 구조 관련 중앙값 48%는 자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불평등에 “매우 크게”, 33%는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며, 상당수 국가에서 교육이 두 번째 핵심 원인으로 인식
 - “일부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타고난다”는 요인에 대해 중앙값 39%가 “매우 크게”, 36%가 “상당히” 기여한다고 응답해, 출발선의 격차가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널리 인식
- 근로 차이·기술 변화·차별 관련 “일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요인은 중앙값 기준 40%가 “매우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데, 특히 라틴아메리카·일부 유럽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 강하게 지지
 - 로봇·컴퓨터 등 자동화에 대해서는 31%만이 “매우 크게” 기여한다고 응답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대다수 국가에서 좌파 성향 응답자는 우파에 비해 빈부격차를 “매우 큰 문제”로 볼 확률이 높고, 부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차별·기회 불평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비율도 높았음
- 미국에서는 좌-우 격차가 특히 큰데, 경제적 불평등을 “매우 큰 문제”로 보는 비율이 진보 76%, 보수 30%로 46%p 차이가 났음
- 다음 세대의 경제 전망 관련 36개국 중앙값 57%가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될 것”이라 답했고, “더 잘 살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쳐,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관이 우세
- 캐나다·미국·프랑스·이탈리아·영국·스페인 등 고소득 국가에서는 3/4 내외가 다음 세대의 하향 이동을 예상하는 반면, 방글라데시·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일부 남·동남아 중소득 국가에서는 다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
- 경제 시스템 개혁에 대한 태도 관련 36개국 중앙값 기준 52%는 자국 경제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20%는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70% 이상이 현 체제에 상당한 수준의 변화를 요구
- 고소득국에서도 네덜란드·싱가포르·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대대적인 변화 이상”을 원하며, 미국에서는 66%가 대규모 개혁(주요 변화 또는 완전 개혁)을 지지
-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 극소수 초부유층은 정치적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
- 2024년 연방선거에서 약 300명의 억만장자와 그 가족이 기부한 선거자금은 총 30억 달러로, 신고된 연방 선거자금의 19%에 해당
 - 펜실베이니아의 억만장자 제프 야스(Jeff Yass)는 2024년 연방 선거에 1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였고, 2026년 중간선거에서도 이미 약 5,500만 달러를 기부
- 억만장자 가족당 평균 기부액은 약 1,000만 달러로, 일반 소액 기부자 약 10만 명의 합계와 비슷한 규모
- 정치자금의 방향은 공화당 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어, 억만장자 및 그 가족이 공화당계 후보·위원회에 낸 돈이 민주당 측의 약 5배 수준
- 억만장자들은 상·하원뿐 아니라 주 대법원, 주지사, 지방 자치단체, 심지어 교육위원회·시의회 선거까지 폭넓게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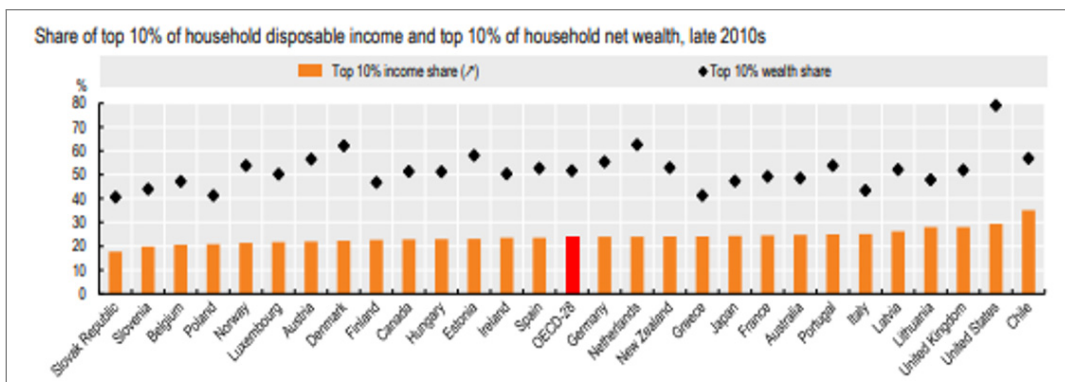
2)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 OECD의 Does Inequality Matter? 보고서는 회원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 계수를 비교했는데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나쁜 상태를 보여줌
- 한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성장과 형평을 동시에 달성했지만 200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이 악화



【그림 1】 OECD 회원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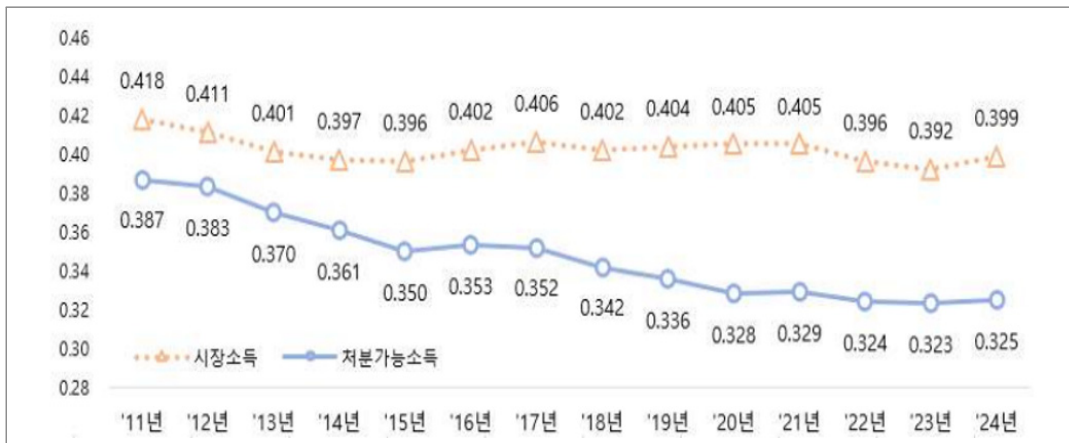
- 한국은 자산 배분 역시 OECD 평균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의 경우 자산 상위 10%의 점유율은 65% 수준으로 OECD 평균을 상회



【그림 2】 OECD 회원국의 자산 기준 지니 계수

-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배분 상태를 미국, 중국, 덴마크와 비교하면 뚜렷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음
- 소득 및 자산 배분 모두 불평등 순위가 미국, 중국, 한국, 덴마크 순으로 나타났음
- 소득 기준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미국 (20.7%), 중국 (15.7%), 한국 (14.0%), 덴마크 (12.2%)이고, 상위 10% 소득 점유율은 미국 (46.6%), 중국 (43.3%), 한국 (37.4%), 덴마크 (32.9%)로 나타났음
- 한국과 미국의 소득 상위 1%는 소득세의 40%를 부담

- 자산 기준 상위 1% 점유율은 미국 (34.8%), 중국 (30.2%), 한국 (25.6%), 덴마크 (20.5%)이고, 상위 10% 점유율은 미국 (69.6%), 중국 (67.9%), 한국 (65.9%), 덴마크 (50.1%)로 나타났다
- 한편 자산 기준 상위 20%의 점유율은 미국 (83), 중국 (80), 한국 (79)로 파레토의 2:8 비율과 유사
- 한국의 소득 분배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0년 이후 개선 추세를 나타냄
- 최근 소득 상위 계층의 시장 소득은 하위 계층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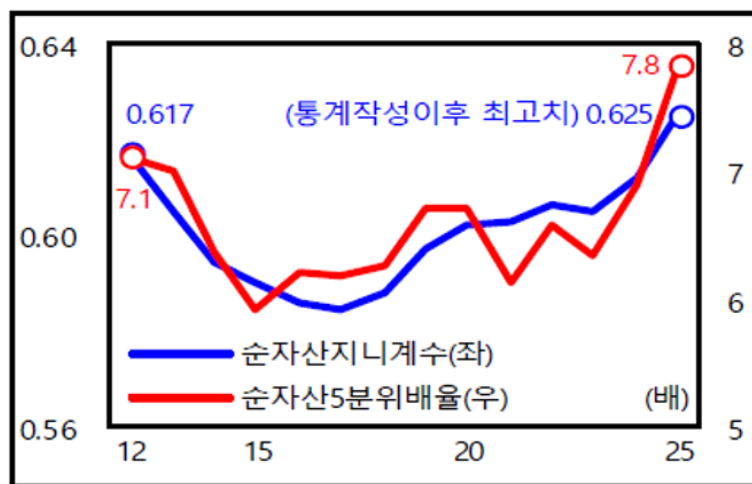
[그림 3] 지니 계수 추이

- 반면 자산 불평등은 최근 심화되어 2025년의 경우 순자산의 불평등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순자산 기준 10분위별 자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최상위 10%의 자산 증가 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단위: %, %p)

	순자산 지니 계수	순자산 점유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0.612	-0.1	0.7	1.7	3.0	4.5	6.3	8.6	12.3	18.6	44.4
2025년	0.625	-0.2	0.6	1.6	2.8	4.3	6.0	8.3	12.0	18.5	46.1
전년차	0.014	0.0	0.0	-0.1	-0.2	-0.2	-0.3	-0.3	-0.3	-0.2	1.6



[그림 4] 지니 계수 및 5분위 배율

2. 역사적 접근

- 불평등에 관한 역사적 접근은 Walter Scheidel의 *The Great Leveler: Violence and the History of Inequality from the Stone Age to the Twenty First Century* (한국어 번역 제목 : 불평등의 역사)를 토대로 정리
- 발터 샤이델은 인류사의 장기 추세를 통해 불평등은 평화로운 진보가 아니라 대규모 폭력(전쟁·혁명·국가 붕괴·전염병)에 의해 주로 완화되었음을 보여줌

1) 선사시대 (구석기 수렵채집 사회)

- 현대 사회와 비교할 때 선사시대 불평등은 평등한 상태
 - 당시의 추정 지니 계수는 0.20 ~0.30으로 오늘날 북유럽 복지국가의 세후 소득 지니 계수와 유사한 수준
 - 직접적인 소득·자산 데이터가 거의 없으므로, 고고학적 매장 부장품, 주거 규모·유적 분포, 인류학적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위계화의 정도를 간접 측정
- 선사시대가 구조적으로 평등했던 이유는 1)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이 적었고, 2)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해야 부를 축적·상속하기 어려웠으며, 3) 이동하는 단위가 크지 않았으므로 경제 규모 역시 제한적이었고, 4) 토지를 포함한 사유 재산 개념이 희박했으므로 축적된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부의 형태는 주로 이동 가능한 물품(도구, 장신구 등)에 국한
- 선사시대는 구조적으로 평등했지만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위계는 존재
 - 카리스마·사냥 능력 등 개인적 역량 차이에 따른 비공식적 격차는 존재
 - 구조적·세습적 계층화는 매우 제한적
- 샤이델은 선사시대의 평등을 자연적 평등 상태라기보다는 경제적 제약 때문에 발생한 평등으로 간주
 - 생산력과 인구 밀도가 낮았으므로 구조적 불평등이 나타나지 않았음
 - 불평등의 증가는 농경 정착 이후부터 발생

2) 신석기 시대

- 농업혁명 이후 초기 정착 사회인 신석기 시대의 추정 지니 계수는 0.30~0.45로 오늘날 한국의 지니 계수와 유사한 수준

- 신석기 시대 지니 계수는 무덤 부장품 격차, 주거 규모 차이, 저장 곡물 축적 규모 등을 고려해 추정
- 신석기 시대부터는 토지 사유화가 시작되면서 세습 자산이 발생하였고 촌락 내 계층화도 진행하면서 불평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 기원전 약 1만 년 전 시작된 농업혁명은 불평등의 역사에서 결정적 전환점
- 농업혁명은 토지의 정착과 더불어 사적 소유 개념이 등장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
- 농업혁명 결과 인구가 증가하고 재산의 세습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불평등의 구조화가 시작
- 토지 소유 격차가 커지고 가축과 저장 곡물이 축적되면서 촌락 간 규모가 차이가 생기면서 불평등은 점차 제도화
- 무덤 부장품의 차이로 사회적 위계가 나타남
- 동시에 족장사회(chiefdom)가 출현하면서 정치권력이 등장
- 잉여를 강제 징수하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지배 집단을 형성
- 신석기 시대부터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 차이를 넘어 정치권력과 결합
- 샤이델은 농업을 불평등의 엔진으로 간주
- 정착, 축적, 세습 세 요소가 결합하면서 인류는 본격적인 계층 사회로 진입

3) 고대 사회 (고대 제국과 고대 문명)

- 고대 로마 제국의 지니 계수는 0.55~0.65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오늘날 브라질, 남아공과 유사한 매우 높은 수준
- 로마 제국은 대토지 집중, 노예제, 정복 전쟁을 통한 부 집중 그리고 수탈적인 조세 구조 등으로 산업화 이전 사회 중 가장 높은 불평등한 사회
- 고대 중국 한나라 역시 토지의 집중과 더불어 귀족·관료 계층의 우월적 지위가 로마 제국과 유사하지만 로마 제국과는 달리 노예제 경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지니 계수는 0.45~0.55 수준으로 추정
- 고대 문명은 국가를 형성하면서 토지 집중, 노예제, 조세 제도를 통해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음
- 토지는 귀족·원로원 계층에 독점적으로 집중되면서 대토지 소유(라티퐁디움)을 조성,
- 부의 핵심 요소인 노예를 정복 전쟁을 통해 지속 공급하면서 노예제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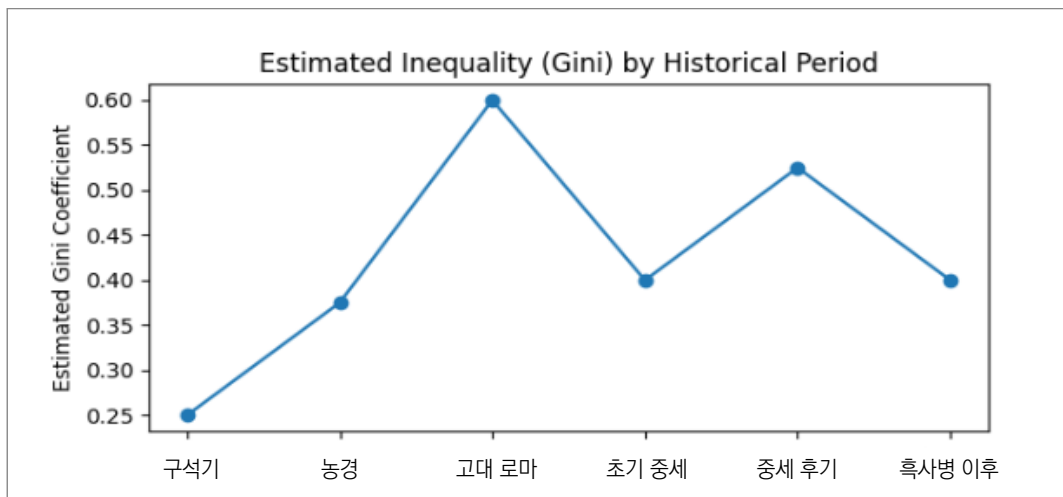
- 수탈적인 조세 제도를 통해 제국 중심부로 부가 집중되면서 농촌 인구의 다수는 생존수준에 머물렀음
- 고대 사회에서의 불평등 완화는 대규모 전쟁, 제국 붕괴, 인구 감소, 반란 등 폭력적 사건과 연결
- 제도개혁이 아니라 체제 붕괴가 불평등을 완화

4) 중세 사회

- 중세는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임
- 로마 붕괴 직후 초기 중세에서는 사회 지배 계층인 엘리트가 붕괴하면서 대토지가 해체되었고 지역 분권화도 이루어지면서 불평등이 완화
- 초기 중세의 지니 계수는 0.35~0.45 수준으로 추정
- 중세 후기에는 봉건 영주 중심의 토지 지배, 교회 토지의 집중과 더불어 도시의 상업자본이 축적되면서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불평등 현상이 다시 나타남
- 지니 계수는 0.45~0.60으로 추정
- Duncan Weldon (2025)에 따르면 몽골 제국의 영토 확장으로 시작된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인구의 30~50%를 감소시켜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흑사병 이후 중세 유럽의 불평등은 완화
- 페스트의 근원지는 중앙 유라시아 (티엔산·이식쿨 일대 등)로 14세기 흑사병은 그 지역의 자연 보균 숙주(설치류 등)에서 인류 사회로 확산되면서 발발
- 특히, 몽골 제국이 만든 광범위하고 안전한 교역·통행망(이른바 Pax Mongolica)이 유럽과 서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교통을 활성화했고, 이것이 흑사병의 빠르고 광범위한 확산을 가능
- 지니 계수는 0.35~0.45로 추정
- 중세 후기 불평등은 페스트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농민 협상력 강화로 인해 완화
- 불평등 완화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라는 외생적 요인 덕분

<표 5> 시대별 불평등 추이

시대	지니 계수	주요 특징
구석기	0.2 ~ 0.3	구조적 평등
농경	0.3 ~ 0.45	불평등 시작
고대 로마	0.55 ~ 0.65	산업화 시기 이전 최고 수준
초기 중세	0.35 ~ 0.45	제국 붕괴로 감소
중세 후기	0.45 ~ 0.60	봉건제도 정착되며 불평등 상승
흑사병 이후	0.35 ~ 0.45	인구 충격으로 불평등 완화

**[그림 5] 역사적 시기별 지니 계수**

3. 이론적 접근

1) 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

-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불평등을 자연적 불평등과 도덕·정치적 불평등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면서 사유재산·노동 분업·시민사회·국가의 형성과정을 통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착되는 과정을 설명¹⁾)
- 자연적 불평등: 나이, 체력, 건강, 지능 등 자연이 부여한 차이
- 도덕적, 정치적 불평등: 부, 권력, 명예, 지위 등 사회 제도와 관습이 만들어낸 차이
- 불평등의 기원은 사유재산
- 루소에 따르면 사유재산의 성립으로 시민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지적
 - “어느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한 최초의 사람이 시민사회의 진정한 창시자.”²⁾
- 사유재산은 비교와 질투, 명예욕, 경쟁과 지배, 부의 축적을 초래하고 권력을 집중
- 법과 국가는 질서와 평등을 위해 등장하는데 결과적으로 불평등의 제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법과 국가는 부자들이 자신 이익 보호하기 위한 장치
-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설득해 법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재산을 둘러싼 갈등과 부자의 불안정한 지배를 안정시키기 위해 법과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루소는 이를 부유층이 이익을 공고히 하려는 속임수로 해석
-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분석한 불평등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보장하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제시
- 사회계약은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신체와 힘,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전면 양도하여 하나의 공적 인격(주권자, 인민)을 만드는 행위이며, 그 결과 탄생하는 일반의지가 법의 근원
- 루소는 각 개인이 사적 이익을 쫓는 ‘개별 의지’와, 공동선(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엄격히 구분
- 일반의지는 단순한 다수의 합(여론·집합의지)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숙고할 때 도출되는 공통의 의지

¹⁾ Je conçois dans l'espèce humaine deux sortes d'inégalité; l'une que j'appelle naturelle ou physique, ... l'autre qu'on peut appeler morale ou politique, parce qu'elle dépend d'une sorte de convention, et qu'elle est établie, ou du moins autorisée par le consentement des hommes.

²⁾ The first man who, having enclosed a piece of ground, bethought himself of saying This is mine, and found people simple enough to believe him, was the true founder of civil society.

-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적 불평등 대신 도덕적·법적 평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인민 전체가 주권을 나누지 않고 함께 행사하는 인민 주권론을 제시
- 루소는 불평등의 기원을 사유재산과 그를 둘러싼 제도적 구조에서 찾지만, 『사회계약론』에서 재산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음
 - 대신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법률로 빈부격차를 제한·조정하여, 한편에서는 누구도 너무 가난해서 자기 자신을 팔지 않도록, 다른 한편에서는 누구도 너무 부유해서 타인을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
 - 사회계약은 자연적 신체적 불평등을 대신하여, 법적·도덕적 평등을 보장하는 장치임
- 사회계약론은 절대왕정과 왕권신수설에 맞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근대 민주주의의 원리를 제공
 - 이는 미국 독립혁명·프랑스 혁명, 근대 헌정주의, 인권 사상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고, 오늘날에도 정치적 정당성과 시민권 논의의 기본 틀로 간주

2) 프랑소아 케네: 경제표, 농업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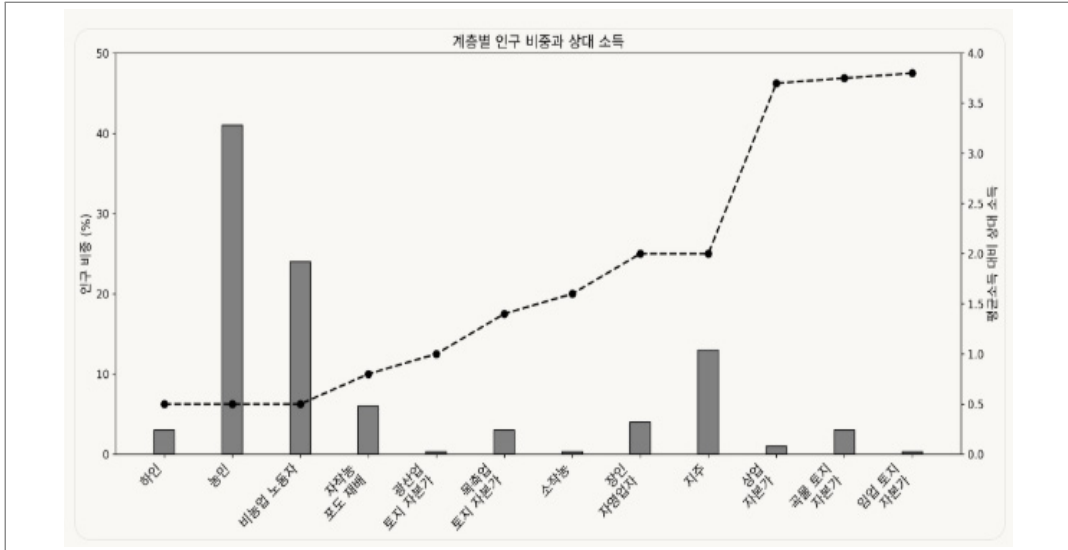
- 케네(François Quesnay)는 프랑스 중농주의(physiocratie)의 대표 인물로, 농업을 유일한 생산적 부로 간주하고 경제 전체의 순환을 경제표(Tableau économique)라는 도식으로 표현
 - 그는 역사상 최초로 economist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의 사상은 자유방임 (Laissez Faire, Laissez Passer)으로 알려졌다
- 중농주의자들은 상공업 중심의 중상주의와 달리, 토지·농업에 세력을 집중하고, 농산물 유통과 생산을 억누르는 규제(특히 곡물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 이들은 경제를 “자연적 질서”가 지배하는 체계로 보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가격·생산을 통제하기보다는 토지 소유권 보장과 자유로운 경쟁·교환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았음
- 경제표는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지출이 계급 간에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거시경제 순환표로 자본주의적 대농(대차지 경영)이 발달한 대농업국에서 농업과 상업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형성되는 경제를 가정
 - 사회는 1) 순생산물을 생산하는 차지농과 대농업경영자로 구성된 생산계급, 2) 지대 수취자 (귀족·성직자·국왕 등) 등 지주계급, 3) 상인·수공업자·공무원·군대 등 비생산적 계급 등 세 계급으로 구성

- 농업에서만 “순생산물”(produit net)이 발생하며, 나머지 부문은 이 순생산물을 단지 가공·유통한다고 가정
- 경제는 생산계급(농업)이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일부를 지대(순생산물)로 지주계급에게 지불하면, 지주계급은 받은 지대를 농산물·수공업품 소비에 쓰며, 이 지출이 다시 생산계급·비생산계급의 소득이 되는 순환경제로 이루어짐
- 비생산계급은 농업·지주계급으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다시 농산물과 기타 재화를 구매함으로써, 순생산물이 다시 농업에 재투자되도록 함.
- 이 과정을 통해 농업에서 발생한 순생산물이 지대→소비→재투자 형태로 경제 전체를 순환하며, 그 양과 구조에 따라 경제의 재생산·성장이 규정
- 케네의 경제표는 역사상 최초로 국민경제를 ‘상호 연결된 계급 간 소득·지출의 순환체계’로 파악한 도식이라는 점에서, 거시경제 순환표와 국민소득 계정의 선구로 평가
- 순생산물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산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려 한 시도는, 훗날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 고전파의 지대론 등에 큰 영향을 미쳤음
- 케네는 「농업 철학」에서 농업만이 생산적 노동임을 강조
- 그는 오직 농업이 자연과 결합해 새로운 부(순생산물)를 만들어 낸다고 보고, 농업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규정
- 수공업·상업은 농업에서 나온 생산물을 가공·유통할 뿐이므로 사회 전체의 순부는 증가시키지 못하는 비생산적 활동으로 간주
- 중농주의는 농업=생산계급, 상공업=비생산계급이라는 이분법적인 계급 구분을 하고, 농업의 사회적 우위를 강조
- 케네는 인간 사회에도 자연적 질서가 존재하고, 경제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국가는 이 자연 질서를 방해하는 규제(곡물 수출 금지, 가격 통제, 특권적 독점 등)를 제거하고, 토지 소유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 농산물의 자유로운 거래·수출입, 자유경쟁을 옹호하며, 이는 후대에 자유방임주의적 경제관의 선구라 할 수 있음
- 중농주의자들은 세수의 기본이자 가장 타당한 과세 대상은 순생산물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지주계급이므로 간접세를 포함한 복잡한 조세를 폐지하고, 농지에서 나오는 순생산물에 단일 지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고 효율적이라고 지적
- 이는 당시 프랑스의 조세 체제(귀족·성직자의 면세, 농민·제3신분의 과중한 부담)를 비판하는 급진적인 제안이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음

- 케네가 살던 프랑스는 당시 재무성 장관인 콜베르의 주도하에 사치품 수공업·왕실공업 보호, 품질 규제, 저임금 정책, 곡물 수출 금지 중상주의를 추구하면서 농업을 억압
 - 케네는 이런 정책이 농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농촌 기반을 붕괴시켜, 결국 국가 재정 위기 와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
 - 농업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곡물 자유무역, 시장가격 형성을 통한 농업 생산 유인 강화를 주장
- 케네와 중농주의자들은 루이 15세 궁정과 백과전서파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프랑스의 농업 위기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
 - 중농학파의 이론은 직접적으로는 큰 정책 전환을 이루지 못했으나, 경제를 하나의 체계로 분석하는 사고, 토지·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 자연적 질서와 경제 자유라는 개념을 통해, 후대 고전파 경제학(특히 스미스)과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중요한 자극을 주었음
-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과 공업이 부 창출의 핵심이 되면서, 농업만이 생산적이라는 중농주의의 전제는 현실과 맞지 않게 되면서 이론적 한계를 보여주었음
-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지니 계수는 0.49~0.55
 - 1760~1790 기간 상위 10% 소득점유율이 56%; 자산 상위 10%는 70% 소유
 - 평균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3.3~3.8배 (당시 영국은 6배 수준)
- Maddison project에 따르면 1760 당시 프랑스 1인당 GDP는 1,643달러로 당시 영국보다 2,915 달러의 절반 수준
 - 절대군주가 통치하는 농업 왕국 (중국), 소농이 주도한 풍요(로마)

〈표 6〉 케네 당시 사회계급의 소득 수준과 인구 비중

사회계급	사회 집단	평균소득 대비 소득	인구 비중
노동자	농업 노동자	0.5	48
	제조업 저숙련 노동자	0.6	22
자영업자	포도 재배 자작동	0.8	6
	제조업 장인, 수공업자 (숙련 노동자)	2.3	4
자본가	자본가 (소작농)	2.7	8
엘리트	소유 계급 (지주, 성직자, 관료)	2.3	12
합계		1	100



【그림 6】 케네 당시 사회계급의 소득 수준과 인구 비중

- 중농주의자는 소득 원천과 사회계급을 최소 4가지로 구분
 - 소득 원천은 임금, 이윤, 이자, 순잉여로 구성
 - 사회계급은 1) 70% 인구로 구성된 노동자(농업 노동자, 저숙련 제조업 노동자), 2) 10% 인구 자영업자(포도 재배 자작농, 제조업 장인과 수공업자), 3) 인구 8%의 자본가 또는 소작농으로 이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며 소득이 가능 높음, 4) 엘리트는 지주, 성직자, 관료로 구성
 - 중농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는 지주에게 땅을 빌린 소작농을 뜻함
- 케네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은 다양한 자본가 계급 내 소득 차이에서 발생
 - 포도 재배 < 광산업 < 목축업 < 소작농 < 장인 < 지주 < 상업 자본가 < 곡물 토지 자본가 < 임업 토지 자본가 순으로 소득이 발생
 - 케네는 모든 자본의 수익률이 10%로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자본가 계급별 소득 차이는 결국 투자된 자본 규모의 차이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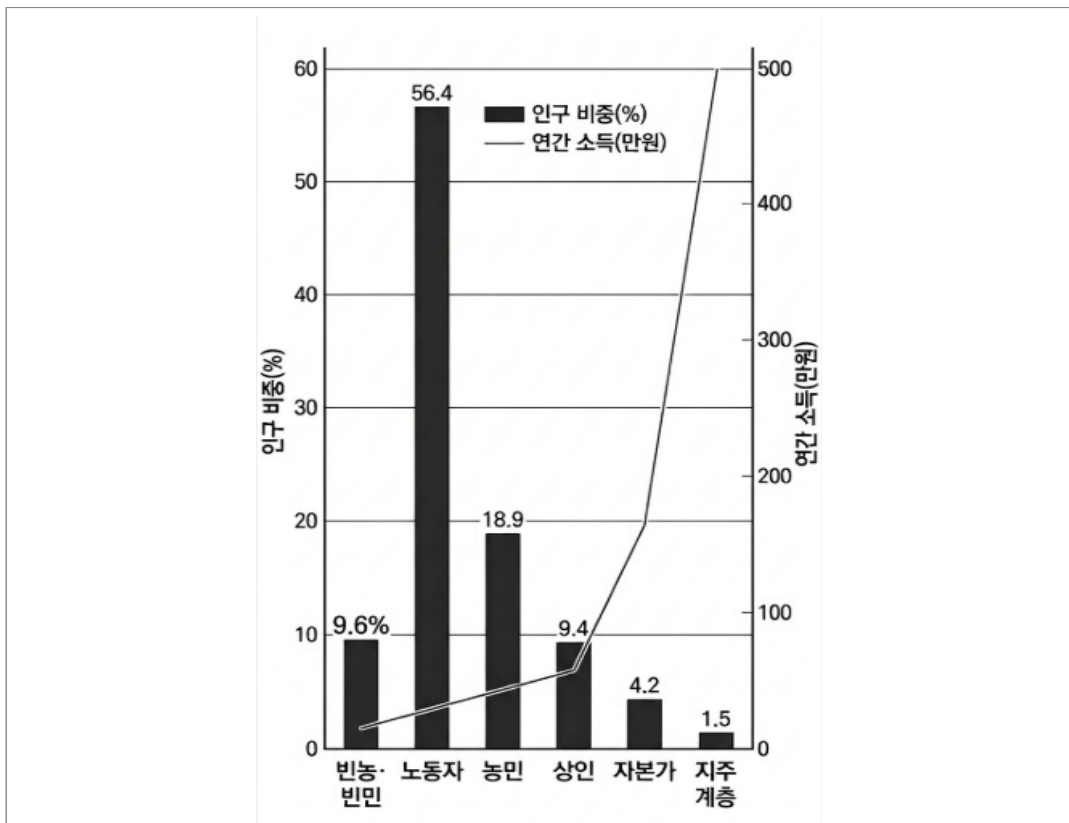
3) 애덤 스미스: 국부론

-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는 국부 증진이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상정
 - 그는 원시 국가, 목축 국가, 농업 또는 봉건 국가, 상업 국가로 발전한다는 발전 단계설에 따라 당시 영국을 가장 발전한 상업 국가로 상정

- 국가는 부가 증가하는 사회, 정제 사회, 쇠퇴 사회로 구분
- 애덤 스미스에게서 국부는 금, 은과 같은 중금속이 아닌 한 나라 국민이 연간 생산·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 즉 국민의 생활 수준을 의미
- 『국부론』의 서두에서 스미스는 “각 나라의 연간 노동이, 그 나라가 매년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원천”이라고 정의하며, 국부를 화폐가 아니라 생산물의 양과 질로 파악
- 그는 중상주의처럼 금·은 보유량을 부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현대적 의미에서 말하면 국민소득에 가까운 개념을 제시
- 스미스는 노동 생산력 향상의 가장 큰 원인은 분업이며, 분업이 숙련도 향상, 전환시간 절약, 도구와 기계 발명을 통해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킴을 강조
- 한 사람씩 모든 과정을 다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공정을 나누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줌
 - 핀 공장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분업이 수십 배의 생산량 증가를 가져온다고 설명
- 분업의 결과 잘 통치되는 사회에서는 그 효과로 모든 계층, 심지어 가장 낮은 계층에까지 보편적 풍요가 확장
-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되므로, 교통·무역·상업의 발달로 시장이 확대될수록 분업도 심화 되고, 국부도 증가
- 스미스는 자발적 교환과 가격 메커니즘이 자원 배분을 효율화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무역을 제약하는 관세·독점 특권·조합 규제를 비판
- 스미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인프라 등의 고정 자본 축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저축과 투자가 필수라고 주장
- 현재의 생산물 가운데 일부를 저축해 다시 생산에 투입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생산과 부를 가져오는 ‘순순환’이 형성
-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쟁과 가격 체계를 통해 사회 전체의 부가 증진된다는 메커니즘을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
- 그는 완전한 자유방임보다는 국방·사법·공공사업·기본교육 등 시장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지나친 상업 규제·독점 특권·부당한 세금은 비판
- 스미스는 큰 재산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큰 불평등이 있고, 한 명의 매우 부유한 사람 뒤에는 적어도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소수의 부유함은 다수의 빈곤을 전제함을 강조
- 그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 그리고 큰 재산이 권력과 결합할 때 생기는 지배·예속 관계를 분명히 인식

- 스미스는 임금 협상에서 사용자들은 임금을 낮추기 위해 비밀리에 결탁하는 일이 많지만, 노동자들의 결사는 법과 공권력의 탄압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법과 제도가 자주 고용주 편에 서 있다고 비판
- 스미스는 분업이 큰 부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노동자를 단순·기계적 작업에 고착시켜 “우둔하고 무지한 존재”로 만들 수 있음을 경고
 - 그는 국가가 기본교육을 제공해, 분업이 낳는 정신적·도덕적 퇴화를 완화해야 함을 주장
- 스미스는 절대적 빈곤의 감소와 생활 편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분업·성장·상업 사회를 지지
 - 영국의 보통 노동자가 많은 면에서 인도 왕자보다 더 많은 편의와 사치를 누릴 수 있음
 - 거대 재산 집중이 불평등과 정치적 지배를 낳는 경우 공정한 법과 세금, 공공교육 등을 통해 부의 편중과 그 부작용 완화가 필요
- 스미스 당시 영국 경제의 생산계급과 인구 비중은 다음과 같음
 - 당시 인구는 노동자 (56%), 농민 (20%), 상인 (10%), 빈민 (9.6%), 자본가 (4.2%), 지주 귀족 (1.5%) 등으로 구성
- 소득 기준으로는 지주 가족 1인당 평균 소득은 450 파운드, 자본가 145 파운드, 노동자 14 파운드 상인 27 파운드 농민 22 파운드 빈민 3 파운드
 - 지주는 자본가 대비 소득은 3배이고 인구 비중은 1/3 수준
 - 자본가는 노동자 대비 소득은 10배, 지주는 노동자 대비 소득이 30배
- 애덤 스미스 당시 영국 지니 계수는 0.45~0.5 수준
 - 영국 불평등 증가는 애덤 스미스 이전 시기가 아닌 국부론 출간 후 30년 지난 19세기 초 반부터 지속 증가
- 스미스 국부론의 기여는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과 부를 연결한 점
 - 중상주의 시대에는 통치자와 국가의 부만이 중요하다고 생각
 - 중농주의 시기부터 노동자와 농민의 번영을 국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
- 스미스에 따르면 높은 임금과 낮은 이자율은 경제 발전과 합리적 정의 유지를 바라는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특징
 - 노동계급이 생필품과 편의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국가는 부강

- 스미스의 견해는 당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
 - 당시에는 하층민은 항상 가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근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



【그림 7】 스미스 당시의 인구 비중과 소득 수준

- 스미스는 노동자와 지주의 이익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함께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들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
 - 경제발전은 최하위층 소득을 상승시키거나 최상위층 소득을 더 빨리 증가시켜 양극화를 심화
- 임금은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임금을 빨리 증가시킨다고 지적
 - 선진화 사회일수록 자본이 풍부하고 이윤율은 자본간 경쟁으로 하락

〈표 7〉 3계급의 이득과 사회적 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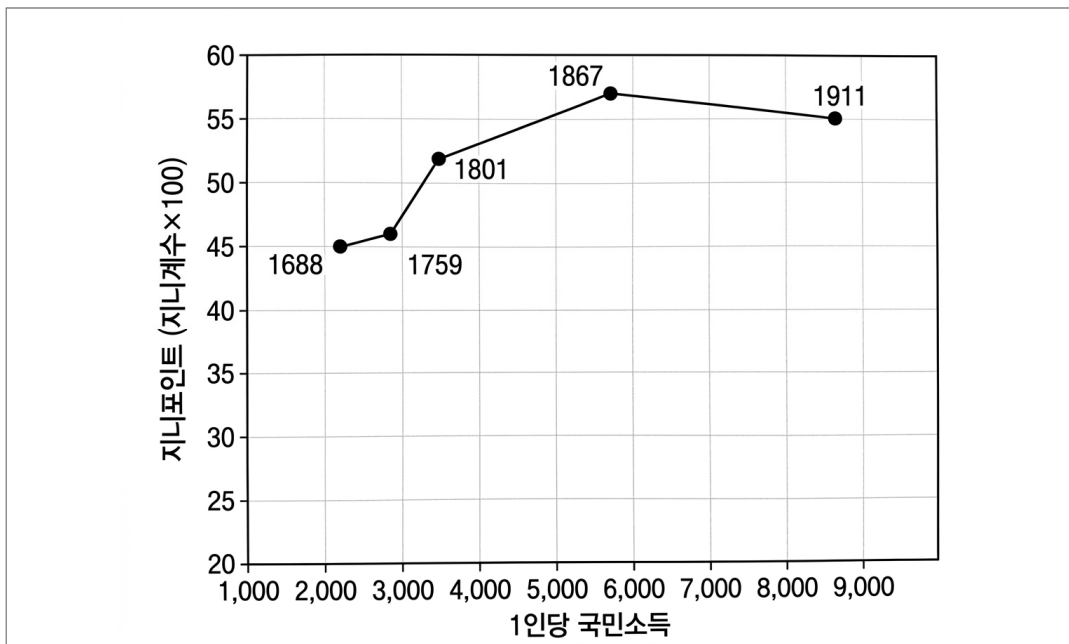
	지주	자본가	노동자
social betterment가 각 계층에 미치는 영향	이득 (지대 상승)	손해 (이윤 하락)	이득 (임금 상승)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작음 (게을러서)	큼 (말 재주)	작음 (낮은 교육)
공공 이익과 해당 계급 이익	일치	상충	일치

4) 데이비드 리카도: 정치경제학 원리

- 리카도는 경제성장의 핵심 문제를 생산물(소득)의 지주·자본가·노동자 사이 분배 문제로 보고, 그 분배 구조가 경제성장과 불평등을 결정
 - 경제에 참여하는 3계급 간의 분배 문제가 경제 문제의 핵심
- 리카도가 상정한 경제는 기본적으로 농업 경제로 지주는 토지를 소유·임대하고, 자본가는 토지를 빌려 농업 생산을 주도하며, 노동자는 임금을 받는 농업노동자로 구성
 - 농업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
 - 인구가 증가하면 농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대는 상승하고 임금은 생계수준에서 결정
 - 자본축적(투자)은 이윤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윤율이 경제성장의 동인인데 이윤율이 하락하면 투자는 점차 감소
 - 토지는 비옥도에 서열이 있고, 수요 증가로 열등한 토지까지 경작될 때 비옥한 토지에서 의 초과 생산물이 '차액지대'로 지주에게 귀속
- 리카도는 애덤 스미스와는 달리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한 결과 일반균형 접근을 시도
 - 이윤율과 실질 임금 간의 역(逆) 관계를 최초로 이론화하였고 이는 훗날 쉘페터에 의해 높이 평가
- 성장 과정과 이윤율 하락
 - 성장(자본축적)이 진행될수록 분배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리카도 성장론의 핵심
- 초기 단계
 - 비옥한 토지가 넉넉하여 지대는 없고 임금은 생계 수준, 이윤율은 높음
 - 높은 이윤율은 자본축적을 촉진시켜서 고용과 산출 증가
- 자본축적과 인구 증가의 진행
 - 자본축적으로 노동수요가 늘면 임금이 생계 수준 이상으로 상승 → 인구 증가 → 노동 공급 확대 → 생계 수준으로 회귀

- 인구와 식량 수요의 증가로 한계 토지가 점점 열등한 토지로 이동 → 농업에서 한계생산성이 하락, 곡물가격 상승 → 비옥한 토지의 차액지대 확대.
- 이 경우 지대의 절대·상대적 비중은 계속 증가
- 임금수준은 생계 수준에서 고정되지만, 총산출이 커지므로 임금 총액과 상대적 몫은 일정 구간에서 증가 가능
- 곡물 가격 상승은 생계임금 비용을 상승시키고 지대가 증가하면서 이윤은 점진적으로 하락
- 정체 상태(stationary state) 도달
- 열등한 토지가 개발되어 농업 한계생산성이 낮아지고, 지대 비중은 높고, 임금은 여전히 생계 수준, 이윤율은 “0에 가까운 낮은 수준”에 수렴.
- 이윤이 거의 사라지면 자본축적이 멈추고, 경제는 정체 상태에 도달
- 리카도와 불평등
- 리카도는 불평등을 수량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계급 간 몫의 구조 변화가 불평등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에 대해 분명한 함의를 제시
- 지대의 장기적 상승은 지주 계급의 몫과 권력을 확대시켜, 노동자·자본가에 비해 지주의 상대적 지위를 강화
- 노동자는 인구압력 때문에 생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장기적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 상승에 비관적
- 이윤율이 하락하면 자본축적이 둔화되고, 이는 노동수요 증가세를 약화시켜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할 여지도 축소
- 경제성장 과정 자체가, 자본축적과 더불어 “지대(지주)의 몫 증가 - 이윤율 하락 - 장기적 임금 정체”라는 구조를 통해 계급 간 불평등을 고착·심화시킬 위험을 내포
- 리카도는 성장·분배 구조를 전제로 세금이 성장과 분배에 덜 해로울지를 고찰
- 임금에 대한 과세는 자본가의 이윤을 잠식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윤세로 간주
- 이윤에 대한 과세는 직접 자본축적 능력을 떨어뜨리므로 성장에 가장 불리
- 지대에 대한 과세는 토지가 고정되어 있고 지대는 초과이윤(차액)이라는 점에서, 성장 인센티브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혹은 덜 왜곡적인 세금으로 간주
- 리카도는 지대에 대한 과세(예: 곡물법 폐지와 곡물 관세 반대)를 강하게 옹호하며, 지주 계급의 특권이 자본축적과 성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처지 개선을 가로막는다고 비판

- 리카도 당시는 소득과 소득 불평등 정도가 동시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
 - 영국의 소득 불평등은 18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악화
 - 리카도 당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극심하면서 동시에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시현



【그림 8】 영국 1688~1911 지니 계수와 1인당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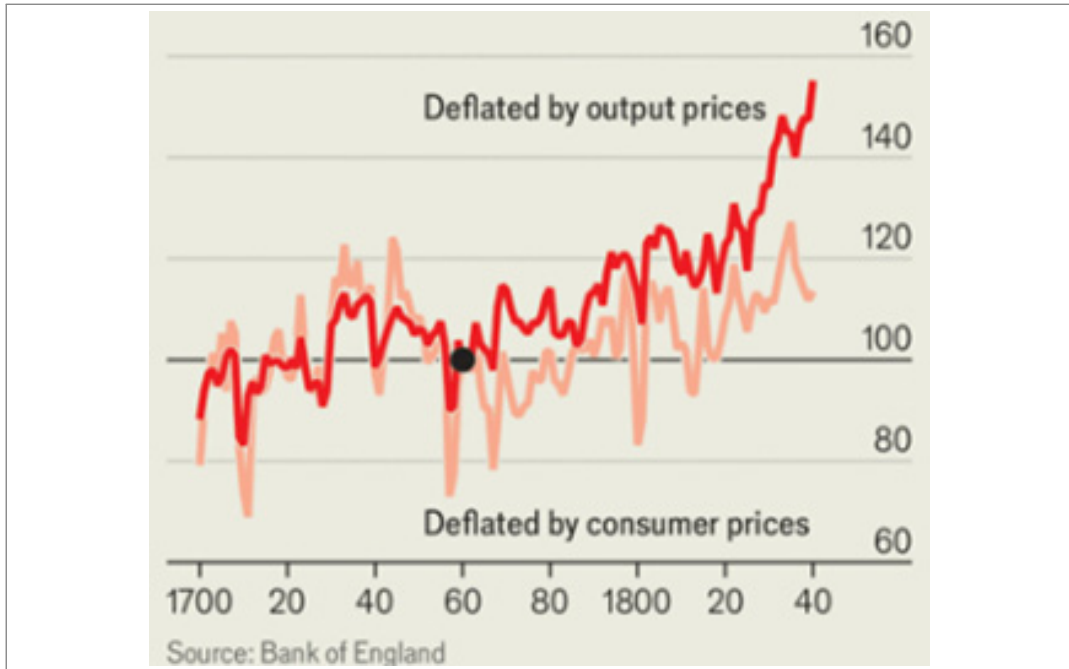
- 18세기 후반 자본가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본가의 인구 비율은 줄면서 소득은 집중되었기 때문
 - 지주와 자본가 인구 규모는 모두 감소하였지만, 자본가 소득의 증가가 귀족을 앞선 결과 과거 3:1에서 1.5:1로 격차가 축소
 - 높은 소득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저축과 투자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자본가의 번영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포착
- 1759~1801 기간 1인당 실질 GDP 누적 성장률은 18%에 달했고, 1인당 연간 성장률 0.4%, 인구 증가율 0.7%로 두 세대 넘게 1% 이상 성장을 기록
- 스미스는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계급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활동의 목표라 하였으나 리카도는 분배를 성장의 가속화를 위한 도구로 간주
 - 리카도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려면 부르조아 생산의 확대가 중요함을 인지

-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이런 견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리카도는 경제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파악
 - 임금이 상승하면 이윤 줄고 임금이 줄면 이윤 상승하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 명확히 이해
- 리카도는 곡물법이 노동자의 명목임금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
 - 명목임금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 순생산의 분배를 좌우
- 인구 증가와 곡물법의 지속으로 지대는 상승
 - 높은 식량 가격 → 높은 지대 → 높은 명목임금 → 낮은 이윤 → 낮은 투자 → 성장 둔화를 초래
- 식량 수입과 기술 진보를 통한 식량 생산 비용 낮추어라 함을 강조
- 해외 무역의 확대와 기계 발전으로 노동자의 식량과 필수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한다면 이윤은 상승
- 리카도에서 계급 갈등은 지주와 자본가 사이
 - 지주의 이익은 항상 공동체 내 다른 모든 계급과 상충하는데 이는 스미스와 대조적
 - 리카도에서 임금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 정치권력과 협상력에 의해 결정
- 리카도 원리 31장 기계에서 단기적 기계 도입이 노동자 생활을 악화시키나, 장기적으로는 기계가 생산을 늘리면서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임을 논리적으로 규명
- 리카도는 정체된 사회는 불평등을 유지하나, 성장하는 사회는 자본가의 이윤 증가로 인해 불평등 낮출 수 있음을 지적
- 또한 성장하는 사회에서는 지주의 소득 감소는 불평등을 완화
- 리카도 당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사회 계급의 인구 비중과 소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구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비중이 61.1%로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서 빈민 (14.9%), 농민 (10.8%) 순으로 나타났음
 - 1759년 대비 1801년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농민과 자본가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빈민의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촌에서 밀려난 인구의 절반이 빈민으로 전락했음을 시사
 - 소득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인 계급은 자본가로 나타났고, 이어서 상인, 농민이 평균이 넘는 소득 증가세를 보였음
 - 지주계급과 노동자는 1759년~1801년 기간 모두 67%의 소득 증가율을 보여 평균 증가율 88%에도 못 미치는 낮은 성장세를 시현

〈표 8〉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사회 계급 규모와 상대적 소득

	가계비중		소득 (연간 명목소득)		소득 증가율(%)
	1759	1801	1759	1801	
지주 귀족	1.5	1.3	453	756	67
자본가	4.2	3.2	145	525	261
상인	9.4	8.6	27	65	138
농민	18.9	10.8	22	49	128
노동자	56.4	61.1	14	23	67
빈민	9.6	14.9	4	4	1
총/평균			28	52	88
1인당 실질 GDP			2,850	3,351	18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엥겔스의 정체기(Engels’ pause)’ 동안 임금 상승은 느렸지만, 이전 반세기와 비교해 특별히 더 나쁜 것은 아니었음
 - 기술(와트의 증기기관)의 확산이 매우 점진적이었고, 인구 증가까지 겹쳐 실질 구매력이 조금이라도 증가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
- 특히 이는 실질임금 측정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짐
 -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 보면 개선이 더 뚜렷
- 노동자의 어려움은 저임금으로 인한 착취보다는 생활비 상승이 핵심 원인
 - 전쟁, (곡물에 대한) 관세 등 정책 요인 때문에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노동자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음
- 따라서 산업혁명의 문제는 기계보다 정치적 요인에 더 크게 기인했다고 평가가 가능
 - 노동자 폭동(기계 파괴 등)은 기술 때문이라기보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며, 오히려 임금이 잘 오르던 시기에 더 빈번하기도 했음
 - 차티스트 운동도 임금 상승이 재개된 이후 본격화
-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은 기술 발전이 노동소득을 희생시키는 전형적 사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그림 9】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로 할인한 실질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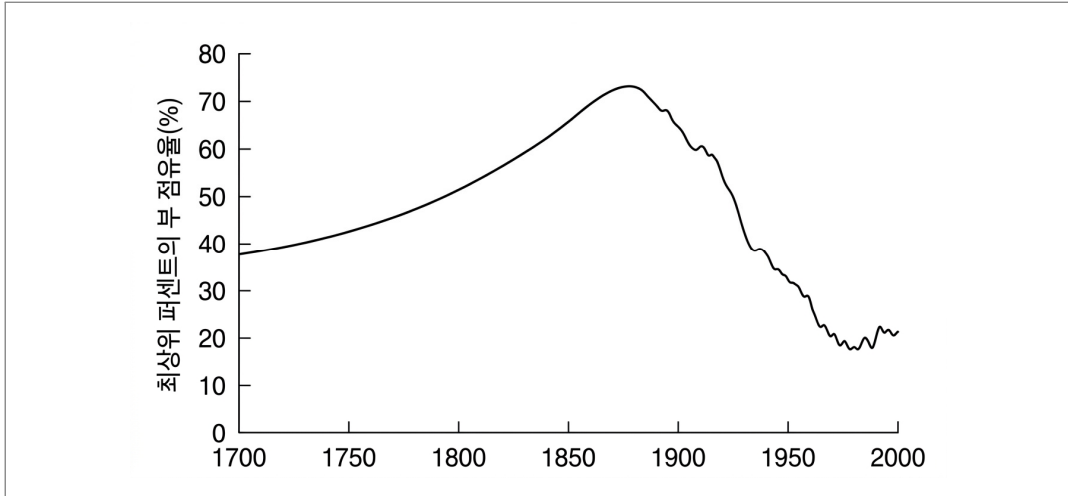
5) 칼 마르크스

- 마르크스 태어난 트리어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1794~1815년 기간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마르크스 탄생 시기에는 프로이센이 지배
- 1831~32 트리어의 소득 분배를 살펴보면 상위 1.2%의 소득은 인구 80%의 평균 소득의 10배 이상으로 나타났음

〈표 9〉 1831~32 기간 트리어 지역의 소득과 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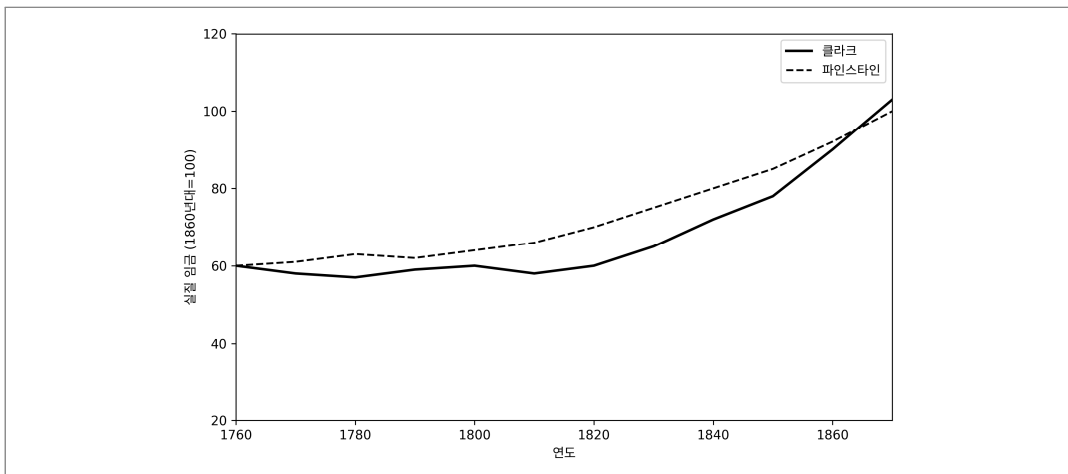
소득	200 미만	200~400	400~2,500	2,500 이상
인구 비중	80	10	8.8	1.2

-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할 당시 영국 1860년대 최상위 1% 자산 점유율은 60% 수준으로 부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19세기 말까지 지속 증가



[그림 10] 1670~2010년 잉글랜드 최상위 1% 부 점유율

- 영국 자본가의 자산 증가로 불평등은 확산되었지만, 노동자의 실질임금 역시 19세기에 걸쳐 지속 증가
 - 19세기 초까지 정체하던 실질임금은 이후 상승 추세
 -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노동 귀족이라 불리는 부유 노동자 계층도 등장



[그림 11] 영국 1760~1870 잉글랜드 실질임금 추이

-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하던 기간 영국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는 크게 상승
 - 노동 공장법, 선거권, 파업권, 아동 노동 금지 등이 입법화

-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출간 시점과 마르크스가 자본론 출간 시점의 영국 3계급의 상대 소득을 비교하면 지주의 소득은 크게 줄어든 반면 자본가의 소득은 증가

<표 10> 스미스와 마르크스 당시의 영국 3계급의 상대 소득 비교

	1776년 (국부론 출간)	1867년 (자본론 출간)
지주	33	20
자본가	11	15
노동자	1	1

- 노동소득 분배율은 실질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소
 - 이는 18세기 말 20%이던 자본가의 소득이 19세기 말 50%로 상승하였기 때문
 - 영국과 독일에서는 실질임금은 상승하였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은 감소
 - 이는 산업 발전 초기의 현상으로 소득 불평등 심화 현상을 보여줌
- 전통 경제학은 분배 관계는 역사적으로 발전하지만, 생산관계는 주어진 것으로 간주
 - 자원배분은 생산요소 가격에 따라 분배
 - 마르크스는 생산관계 역시 역사적인 관계로 설명하면서 생산 법칙과 분배 법칙이 동일한 법칙임을 강조
- 마르크스에서 부존자원은 과거와 현재의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급 권력에 따라 부존자원의 배분도 다를 수 있음을 지적
 - 소득 분배가 생산 양식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배 문제 해결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불가능
 - 마르크스는 이를 근거로 계급 철폐가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
- 착취는 자본주의 필수 불가결한 특징이므로 계급 투쟁이 중요
 - 순소득 분배, 노동시간, 노조 권리, 노동 조건 등을 망라
- 마르크스는 계급 구조를 4가지로 구분
 - 자본가는 산업 자본가와 금융 자본가로 구분, 지주는 토지 자본가로 간주
 - 자영업자 또는 소부르주아 계급
 - 노동자: 농민, 노동자
 - 롬펜 프롤레타리아: 만성 실업자, 극빈자, 부랑자 등

- 마르크스의 계급을 1830년대 프랑스의 사회 계급의 평균 소득과 고용 비중과 비교하면 소득 기준으로는 산업자본가에 해당하는 고용주가 평균 임금의 8배로 가장 높고, 농업노동자/하인의 소득은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장 낮은 수준
- 인구 비중으로는 소농, 농업노동자/하인, 블루컬러 노동자, 자영업자 순으로 나타났음

<표 11> 1831년 프랑스 사회표

(모리스, 스나이더) 계급 (소득순)	고용	평균 소득	마르크스 계급
고용주	3.4	8.0	산업자본가
부농	5.1	3.0	토지자본가
고위 공무원	1.1	1.8	국가
블루컬러 노동자	13.9	1.0	노동자
화이트컬러 노동자	2.0	0.9	
자영업자	13.4	0.7	소부르조아
하위공무원	1.1	0.6	국가
소농	31.4	0.5	농민
농업노동자/하인	28.5	0.45	
합	100	1	

- 마르크스 당시 임금은 노동자 유형에 따라 상이하고 국가별로는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임금 변화가 컸음
- 유럽 주요 국가의 명목 임금을 살펴보면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경제발전 수준이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순임을 보여줌

<표 12> 유럽 주요 국가의 명목 임금 (1848년)

국가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러시아
연간 임금	150	80	60	30

- 마르크스에 따르면 실질임금 상승 또는 이윤율 하락은 불평등 완화를 초래
- 경제 위기,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생산 영역 확대 또는 자본 직접업의 고도화는 불평등을 심화
- 산업예비군 역시 실질임금 하락을 통해 불평등을 심화

<표 13>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불평등 완화	불평등 심화
자본	이윤율 저하 경향	위기, 새 영역 생산 확대, 자본집적의 고도화
노동	실질 임금 상승	산업예비군

- 고숙련 대가로 높은 임금을 받으며 노동자의 자산 보유도 높은 새로운 계층을 탄생
 - 밀라노비치는 새로운 계층을 호모플루티아 (Homoploutia)라 부르며 노동 계급 중 자산을 갖춘 새로운 계급의 출현은 마르크스의 자본론과는 완전히 다른 현상으로 이들의 탄생으로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관계가 사라졌다고 평가
- 마르크스는 본론 1권 25장 자본주의 축적의 일반 법칙에서 영국,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과세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하였고 같은 데이터는 훗날 파레토도 활용 (1865년 과세 자료)
 - 1865년 과세 자료는 사업 소득, 주식소득, 전문직 소득, 근로 소득을 포함
 - 당시 세금 내는 사람은 인구의 1.5%인 33만 명에 그침 (전체 인구 24,127,003명)
 - 납세자 90% 이상인 30.8만 명이 최하위 과세 구간에 있음
 - 납세자의 최소 소득은 60파운드이고, 평균 소득은 133파운드로 추정
 - 최상위 납세자는 107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03,526 파운드로 납세자 평균 소득의 778배에 해당
- 당시 소득 집중화의 양상은 1864년과 1865년의 소득세 D항 (농업 등을 제외한 이윤)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통해 잘 드러남
 - 이 항목의 소득은 £60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소득세 과세 대상임
 - 영국,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 이러한 과세 대상 소득은 1864년에 £95,844,222, 1865년에 £105,435,579이었음
 - 과세된 인원은 1864년에 전체 인구 23,891,009명 중 308,416명이었으며, 1865년에는 인구 24,127,003명 중 332,431명
- 소득 단계별 집중 현상은 1864년에 비해 1865년이 심화
 - 1864년에는 총 이윤소득 £95,844,222을 308,416명이 나누고 그 중 57,028,289파운드를 23,334명이 소유해서 전체 납세자의 약 7.6%가 전체 이윤의 거의 60%를 차지하였고, 최상위 91명은 8,744,762파운드를 소유해서 납세자 0.03%가 전체 이윤의 약 9%를 차지
 - 1865년에는 총 이윤소득 £105,435,738을 납세자 332,431명이 납부
 - 상위 7.3%인 24,265명이 64,554,297파운드를 부유했고, 최상위 107명 (전체 납세자

의 0.03%)가 전체 이윤의 10.5%인 11,077,238파운드를 차지

- 즉, 인구의 극히 일부인 수백·수천 명의 자본가·지주·금융가들이 전체 자본소득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고, 최상위 100명 남짓이 10% 안팎을 독점하는 구조

<표 14> 1865 잉글랜드와 웨일스 납세자 소득분포

	Year ending April 5th, 1864.		Year ending April 5th, 1865.	
	Income from Profits	Income from People	Income from Profits	Income from People
Total Income	95,844,222	308,416	105,435,738	332,431
of these	57,028,289	23,334	64,554,297	24,265
of these	36,415,225	3,619	42,535,576	4,021
of these	22,809,781	832	27,555,313	973
of these	8,744,762	91	11,077,238	107

6) 빌프레도 파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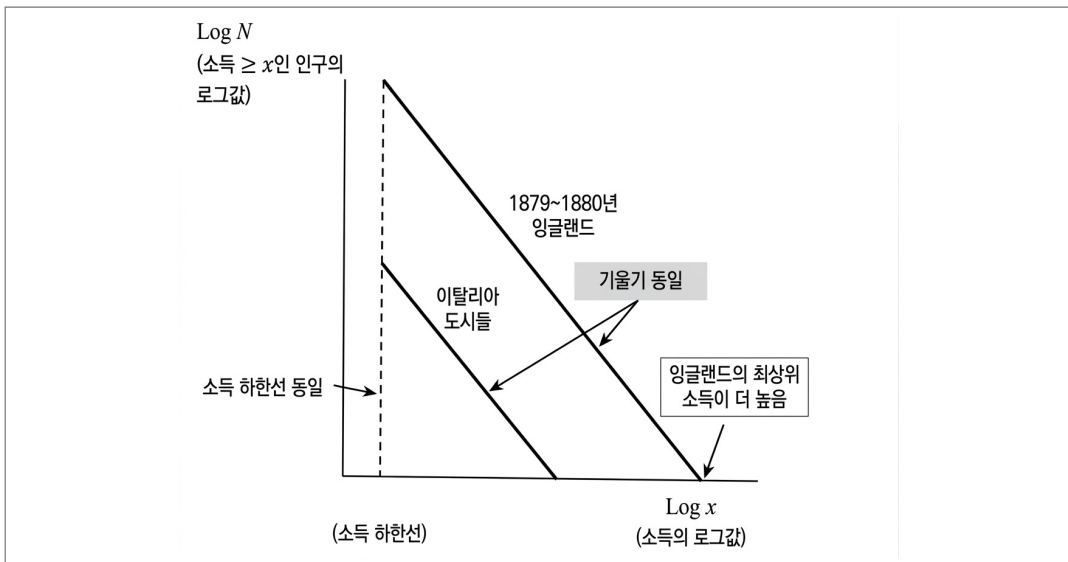
- 파레토는 정치경제학 입문 (Manuel de l' economie politique, 1906)에서 왈라스의 일반균형이론을 선택이론, 후생 이론의 틀 안에서 재구성하고, 오늘날 파레토 최적이라 불리는 개념을 정식화하였음
 - 그는 소비자 선택, 생산, 일반균형, 후생·효율, 비경쟁적 시장까지 포괄하는 경제 균형 일반이론의 제시를 목표로 하였음
 - 그는 어떤 경제 상태를 개인들의 욕구와 제약이 동시에 충족되는 균형점으로 정의하고, 이 점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논의
- 파레토는 개인의 복지를 측정 가능한 효용 함수 대신, 비교 가능한 만족 정도인 옠피리미티(ophelimity)와 선호 순서로 다룸
 -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과 가격, 기술적 제약 조건 아래에서 하에서 자신의 옠피리미티를 최대화하는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은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의 접점으로 표현
 - 그는 효용의 측정 가능성 대신 순수한 서열(preference ordering)에 입각한 소비자 이론을 시도함으로써, 이후 후생경제학과 현대 미시이론에 기여
 - 얼마나 더 행복한가를 숫자로 재는 대신, 이 묶음을 저 묶음보다 더 선호한다 또는 덜 선호한다, 또는 무차별하다는 순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
- 파레토는 왈라스의 경쟁적 일반균형 틀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선호-장애 모델 위에 재구성
 - 경쟁시장에서 균형이 성립하는 점은, 각 경제주체의 무차별곡선들이 가격에 의해 결정된 한계 조건 아래 서로 접하는 점으로 나타남

- 어떤 배분이 최대 오피리미티 상태라 함은, 거기서 아주 작은 변화로 모든 사람을 더 좋게 만들거나,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좋게 만들면서 누구도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 파레토는 이 개념을 토대로, 완전경쟁 일반균형이 집단의 오피리미티를 극대화한다는 파레토 최적을 제시
 - 이는 후생경제학 제1 정리(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로 체계화되며, 파레토는 그 직관적 정식화와 수학적 부록을 통해 그 방향을 먼저 제시하였음
- 파레토 효율이 분배의 공정성이나 평등성과는 독립적이라는 점, 그리고 효율 개념만으로는 사회적 선택의 규범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암묵적으로 제시
- 파레토는 소득과 부의 분포가 상위 구간에서 멍함수 (power function) 형태의 파레토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입문』에서도 경제 균형과 분배 구조의 관계를 다루었음
 - 여기서 “상위 20%가 총소득/부의 80%를 가진다”는 식의 파레토 원리(80:20 법칙)로 일반화되었음
 - 파레토에 있어서 분배는 단순한 경험적 규칙이 아니라, 일반균형과 후생이론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할 구조적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파레토는 1890년대 유럽 여러 나라의 소득·부 자료를 조사하면서, 높은 소득·부 구간에서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이상을 받는 사람의 수가 멍함수 형태로 감소한다”는 규칙성을 발견
 - 주어진 하한선 y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의 수는 소득 하한선이 상승하면 일정한 비율로 감소
 - y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은 사람의 수가 p 라면, 하한선 y 가 10% 상승할 때 그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의 수는 특정 비율 (예: 15%)로 감소

$$\ln p = A - a \ln y$$
 - a : 상수 p : y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 수, A : 전체 인구 규모
- 기준 소득이 최저소득이면 모두의 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높으므로 $p = A$
 - a : 파레토 상수 또는 계수: 이 값은 국가별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
 - a : 소득 하한선이 증가할 때마다 고정 비율로 인원 수를 잘라내는 절단기로 간주
-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소득 분포와 소득 하한선이 같다고 가정
 - 세로축과 가로축이 높은 것은 영국의 인구와 부유층 소득이 높기 때문
 - 소득이 하나의 특정한 방식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것으로 사회체제와

는 무관

-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모두 비슷한 형태
- 엘리트 순환 이론: 소득 분포는 정치 체조와 무관하게 근본적으로 안정적
- 엘리트는 사자형과 여우형 엘리트로 두 가지가 존재
- 어떤 엘리트가 지배하든 소득 분포는 일정
- 파레토 법칙의 함의는 특정 소득 이상을 얻는 사람에 대한 특정 소득 이하의 소득을 얻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한 불평등 지수
- 소득 분포 곡선이 변하지 않는다면 재분배를 통한 분배 양상을 바꿀 수 없음
- 파레토 계수는 1.5~2 사이에서 안정적이므로 상위 10% 차지하는 몫이 전체 소득의 46% (계수 1.5)에서 상위 10% 차지하는 몫이 전체 소득의 32% (계수 2)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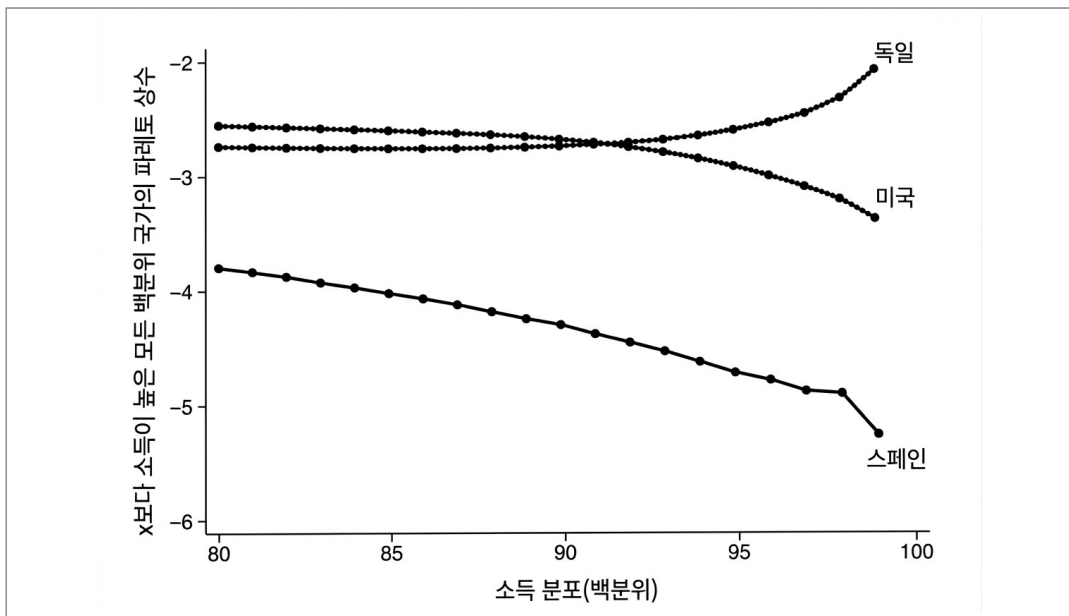
[그림 12] 파레토 곡선

- 파레토가 활용한 자료가 소득세 부과 대상인 부유한 사람 대상 자료
- 불평등의 해소는 실질소득의 향상을 통해 가능
- 파레토에서 불평등은 빈곤을 의미
- 실제 소득분포에서 파레토 관계
- 같은 분포 내에서도 어느 소득 분포 구간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계수 값이 달라짐

<표 15> 국가별 소득 분포 구간별 파레토 계수

	80	85	90	100
스페인	- 3.7	- 4	- 4.3	- 5.3
미국	- 2.8	- 2.85	- 2.8	- 3.4
독일	- 2.6	- 2.65	- 2.7	- 2.2

-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계수 값은 기울기가 점차 증가
- 미국의 경우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급하게 감소함을 시사
- 독일은 상위층이 더 두껍다는 의미



[그림 13] 파레토 상수

-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파레토 계수는 어떤 구간에서도 변함
- 파레토 계수 절대값이 클수록 지니 계수는 작음
- 파레토 계수 값이 크다는 것은 절단기가 강력하게 작동해 특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의 수가 가파르게 감소함을 의미
- 파레토가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은 소득과 부의 분포가 정규 분포 또는 대칭 분포라는 견해를 거부한 점.

- 파레토 자신은 소득 분포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음
- 파레토는 최초로 개인간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었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소득 불평등이 어떤 양상일지 제시
- 파레토는 “상위 몇 퍼센트가 전체 소득·부의 거대한 비중을 가진다”는 법칙을 제시했고, 이를 파레토 원리(80:20 법칙)라 칭함
- 파레토는 이 비율이 정확히 80:2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불균등한 상층 분포가 구조적으로 나타난다”는 성격의 규칙이라고 이해
- 파레토는 소득 또는 부를 y , 그 이상의 소득·부를 가진 사람 수를 x 라고 하고, 로그-로그 좌표에 이들을 찍어 보니 거의 직선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
-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

$$\log x = a - \alpha \log y$$
 - 여기서 $\alpha > 0$ 는 파레토 지수(계수)이며 분포의 두꺼운 꼬리 정도, 곧 상위 소득과 부의 집중도를 나타냄
- 이 분포에서 α 가 작을수록 상위 계층의 비중과 집중도가 커지고, α 가 클수록 상위층의 소득·부 집중이 약해져 불평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
- 확률분포를 사용하면 최소값 $y_{\min}$ 이상에서 정의된 파레토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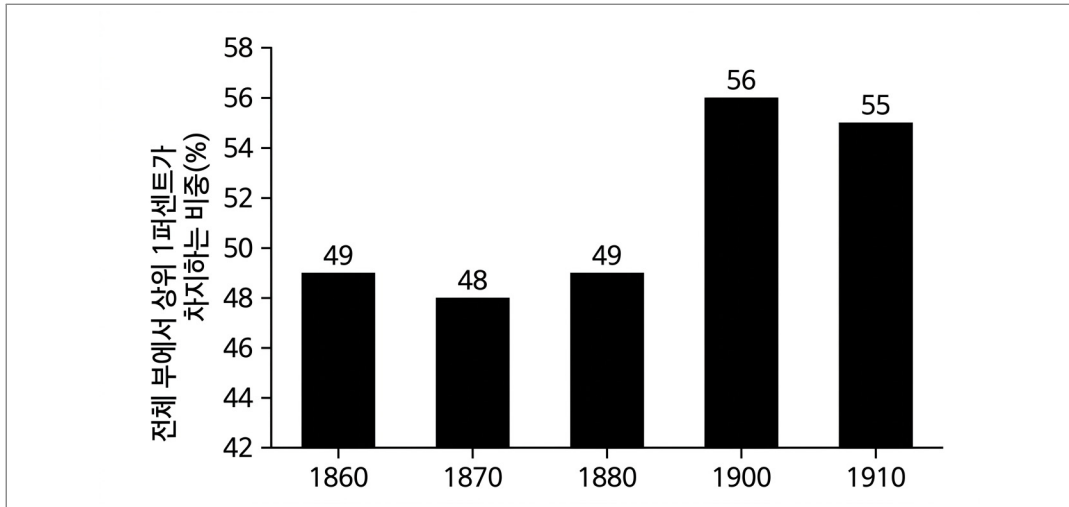
$$P(Y \leq y) = 1 - (y_{\min}/y)^\alpha$$
- 확률밀도함수 $f(y)$

$$f(y) = \alpha y_{\min}^\alpha y^{-(\alpha+1)}$$
- 파레토는 자신의 법칙이 전체 분포가 아니라 주로 상위 구간에 잘 맞다는 점을 인식했고, 하위·중간 소득층에는 다른 분포(로그 정규 등)가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보았음
- 상층에서 멱함수 꼬리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이후 이론들은 비례적 성장(“부가 부를 낳는” 가산이 아닌 승수적 과정), 상속과 자본수익률의 차이, 기업 규모 분포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시
- 자본소득이 지배적인 상위 부자 집단에서는 현재 부에 비례한 성장률의 랜덤한 누적이 작동해 파레토형 꼬리가 자연스럽게 출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 대표적
- 파레토 계수와 불평등 측정
 - 분포식에서 α 의 기울기는 고소득·고부 구간의 불평등 정도를 요약하는 지표로 사용
 - α 가 작을수록 상위 몇 퍼센트가 전체 소득·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며, 수학적으로도 상위 $q\%$ 의 소득과 부 점유율이 α 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어, 상층 불평등의 비교·국제 비교에 활용

- 현대 불평등 연구에서도, 지니 계수와 별도로 상위 1%의 파레토 지수처럼 상층 교리의 형태를 따로 추정해 자본소득 중심의 불평등을 분석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
- 『정치경제학 입문』에서 파레토는 자신의 소득·부 분포 연구를, 경쟁적·비경쟁적 시장이 만들어내는 균형과정의 반복 결과로 이해하려 하며, 이 분포가 특정 제도·시기만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상당히 견고한 사회적 규칙성임을 강조
- 그는 파레토 효율 개념과 결부시켜, 파레토 효율적인 균형이 반드시 평등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분배를 의미하지 않음을 암시하며, 분배 문제와 후생의 규범적 판단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 파레토의 분포 이론은 경험적으로 매우 불평등한 분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과 그러나 효율 개념만으로는 이 불평등을 비판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는 후생 경제학 메시지를 함께 품고 있음
- 1860~1910 기간 프랑스의 전체 부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프랑스 혁명 이전 소득 최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56%를 차지하였으나 100년 후 41~48% 수준으로 하락
- 프랑스 혁명 후 불평등은 축소되었다가 1830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가 20세기 초에는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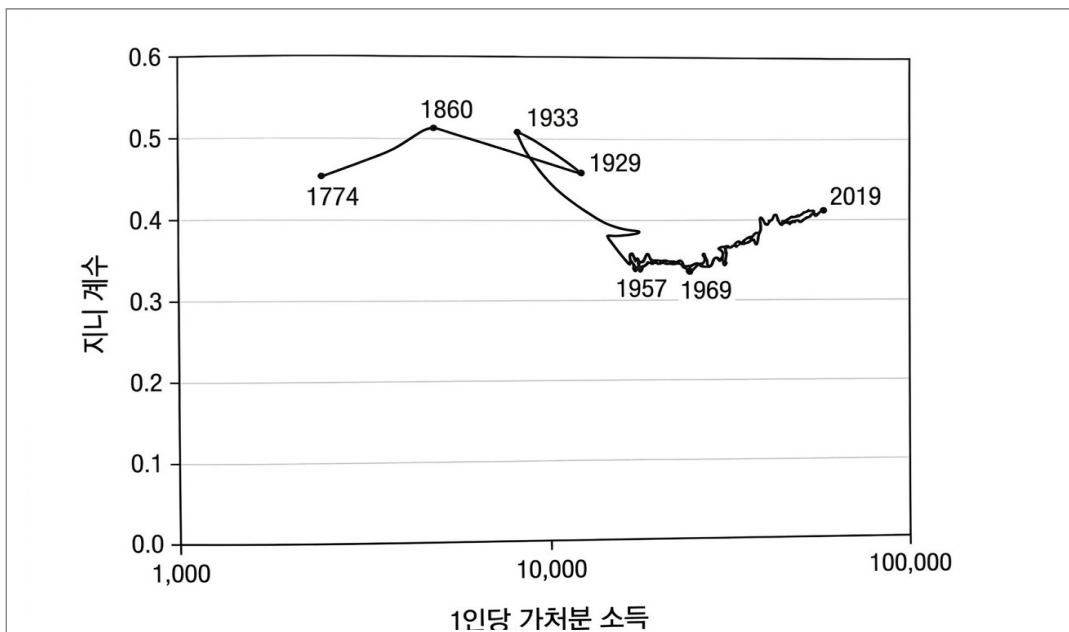
7) 사이먼 쿠즈네츠

- 쿠즈네츠는 1955년 AEA 회장 연설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에서 미국·영국·독일의 약 50~75년 장기 소득분포 자료를 재구성해 산업화 초기에는 불평등이 상승하고, 이후 성숙 단계에서 하락한다는 역-U자형(Kuznets curve) 가설을 제시
- 이 논문은 불평등을 경제성장 과정의 내생 변수로 다룬 계량 분석으로 평가되며, 이후 경제 발전단계에 따른 불평등 논의를 지배한 일반이론으로 자리 잡았음
- 쿠즈네츠는 경제의 발전단계가 낮은 수준일 때는 불평등이 비교적 낮다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불평등이 높아지고, 고소득 단계에 도달하면 다시 불평등이 감소함을 통계적으로 보여주었음
- 초기 농업사회에서 산업화가 시작되면, 일부 노동자와 자본가가 도시·공업 부문으로 이동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농촌-도시, 전통-현대 부문 간 격차가 커져 불평등이 상승



【그림 14】 전체 부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

- 경제가 성숙하면서 산업과 서비스 부문이 확대되고, 교육, 복지, 노조, 민주화 등 제도가 발달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증가하고 재분배가 강화되면서 불평등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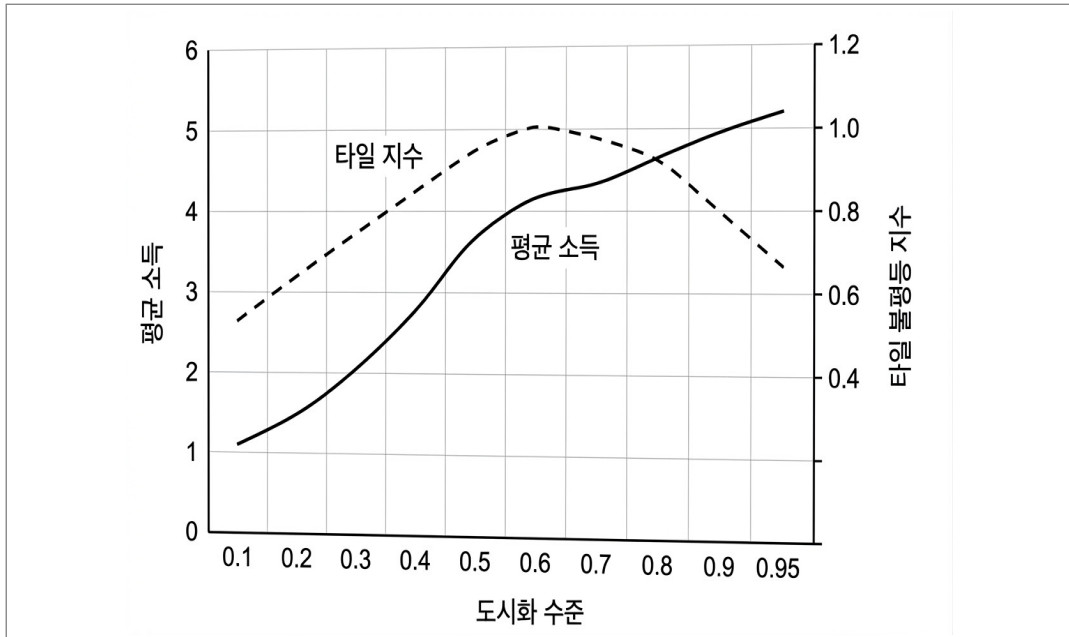
【그림 15】 1774~2019 미국의 장기적 불평등

- 쿠티네츠 당시 미국 인구는 전 세계의 6%인데 미국의 소득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94년 24%에서 1949년 31%로 증가
 - 이 기간 전 세계의 불평등도는 증가했으나, 미국 내 불평등은 완화
- 1930~50년대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축소된 배경에는 뉴딜, GI 법안 등 개혁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불평등은 해소
 - 공교육 기회 확대, 노동 수요 증가, 그리고 최상위층 소득 제한 정책 도입이 주된 원인
 - 미국 내 소득 불평등은 줄었으나 인종 간 불평등은 변하지 않았음
- 1930년대 이후 미국 불평등 완화 시기를 대 평등화 (Great Leveling)라 칭함

〈표 16〉 1774~1929년 미국의 불평등과 평균 소득

	불평등		
	지니 계수	최상위 1% 몫	1인당 GDP
1774	44.1		2419
1800			2545
1850	48.7		3632
1860	51.1		4402
1870	51.1	9.8	4803
1910		17.8	9637
1913		18.0	10108
192-		14.5	10153
1929	49	18.4	11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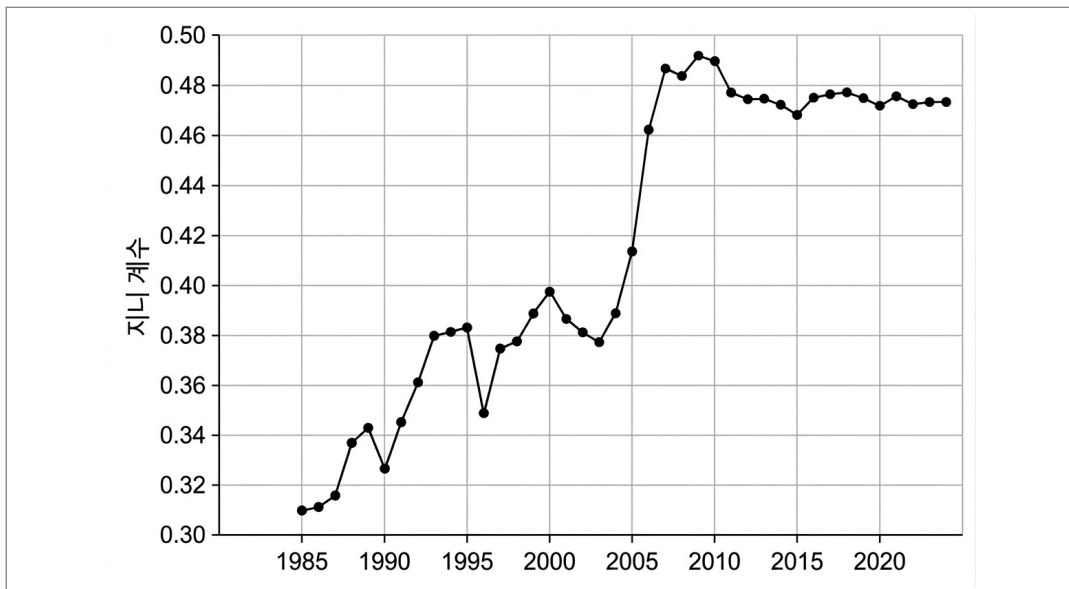
- 도시화의 완료는 불평등을 축소
- 불평등이 높아지면 그 이후 1) 비농업 부문과 농업 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감소하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 감소, 2) 자본 축적으로 자본이 풍부해져 수익률이 낮아지고 부유층 상대 소득 감소, 3) 사회의 부 증대로 노령 연금, 실업과 재해 보험, 불평등의 힘을 약화시키는 사회복지 확대



[그림 16] 쿠즈네츠 모형에서 평균 소득과 불평등

- 쿠즈네츠는 당시 더 불평등하다고 했는데 이는 데이터가 제한적이었기 때문
- 쿠즈네츠는 최하위 계층 소득 향상에 긍정적
 - 최소 극대화를 의미하는 Maxmin 원칙을 중시
 - 빈곤층 높은 소득에서 오는 이득이 상위층 인센티브 감소에서 오는 손실을 상쇄
- 미국은 1) 높은 사회적 이동성, 2) 계급 사회 종식, 3) 소득과 부 불평등 완화, 4) 높은 성장률 유지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 현상을 보여주었음
- 쿠즈네츠 가설은 도시와 농촌 노동자 간 실질 임금 격차,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도시화에 따르는 소득 격차를 통해 검증
 - 도시화 수준이 7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도시-농촌 간, 그리고 도시의 불평등 수준 모두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
 - 알렉시스 드 토크빌에 따르면 문명의 양극단에 있는 야만인과 문명화된 사람은 모두 비슷한 수단을 사용해 안락과 행복을 얻는다는 점에서 평등하지만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보통 세상에서는 부, 지식의 불평등이 존재함을 강조
 - 미국 연준위원장 아서 번즈는 1954년 불평등 혁명 (Inequality revolution)에서 1929~1946 기간 최상위 5% 점유율이 16%p 감소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쿠즈네츠 가설을 지지

- 중국의 경우 2010년부터 농촌 값싼 노동력이 줄면서 숙련 프리미엄이 감소 + 사회복지제도 도입하면서 역U자 모형(쿠즈네츠 가설 입증)



【그림 17】 중국의 쿠즈네츠 곡선(1985~2019)

8)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제도적 통제가 없으면 구조적으로 고도의 자산·소득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주장
 - 자본수익률 r 이 성장률 g 보다 체계적으로 높은 상태($r > g$)가 지속될 때, 과거에 축적된 자산이 노동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남으로써 상위 계층의 부가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를 지배
- 피케티는 18세기 이후 유럽·미국의 소득·자산·상속세 자료를 광범위하게 재구성하여,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불평등을 축소시킨다는 쿠즈네츠 가설을 비판
 - 20세기 중반에 관측된 불평등 완화는 성장에 따른 자생적 결과가 아니라, 두 차례 세계 대전·대공황·인플레이션·물수 및 매우 높은 누진세율 등 비정상적 충격과 강력한 정책의 산물이었음을 강조
 - 불평등의 장기 추세는 제도와 정치에 의해 조정될 뿐,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평등화되지 않음을 주장

- $r > g$ 와 자본집중 메커니즘

- 피케티에 따르면 자본/소득 비율이 높아지고,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체계적으로 높을 때, 자본소득이 국민소득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한다는 단순한 회계 관계에 기초
- 자본소득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상속과 증여를 통해 가계 간 재분배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상속사회”(patrimonial capitalism)로의 회귀가 발생한다는 것이 피케티의 진단
- 저성장·저인플레이션 환경에서 $r > g$ 가 지속될 경우, 과거에 축적한 자산이 현재의 노동 소득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며, 소수 가문의 자산이 세대를 넘어 누적되는 경향이 강화

- 피케티는 소득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을 분리하여 보되,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

-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장기적으로 상승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상위 1% 혹은 0.1%의 자산 점유율이 역사적으로 매우 높고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상층 노동소득(고위 경영진·금융부문 보수)의 급등이 상위 소득 불평등을 키우지만, 궁극적으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결정하는 것은 상속·부동산·주식·채권 등 자본자산의 집중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능과 사회적 이동성을 잠식할 수 있다고 주장

- 불평등은 피케티에게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세제·노동시장 제도·교육·복지정책·자본규제 등 정치적 선택의 결과

- 20세기 중반 불평등 완화는 누진소득세·상속세·자본통제·복지국가 확대와 결부되어 있었고,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감세와 규제완화, 금융세계화가 다시 상위 계층의 자산을 급격히 불려 왔다고 해석
- 세계화 탓이라기보다는, 각국이 선택한 세제 구조와 제도 설계가 불평등 궤적의 핵심 설명 변수라는 점을 강조

- 피케티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상속·부에 대한 고율의 누진과세를 주장

- 초고액 자산에 대한 글로벌 누진 자본세(global progressive wealth tax)를 통해 자본 축적의 속도를 조절하고, 자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민주주의가 소수의 자본가에게 포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
- 이는 장기 성장 자체를 억압하기보다는, $r > g$ 로 인한 자본집중을 완화하여 보다 포용적인 성장 경로를 만드는 ‘정치적·도덕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피케티의 불평등 논의는 단순한 계량분석을 넘어 자본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 문제제기로 확장

9)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 샌델은 현대 불평등의 핵심 문제를 “얼마를 갖고 있느냐” 자체보다,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시민적 존엄을 어떻게 훼손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강조
-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에서 그는 평등을 분배 문제 이전에 도덕적 인정과 시민적 존엄의 문제로 재구성하면서, 능력주의가 공정성·연대·공동선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비판
- 샌델은 현대 사회가 소득·지위의 차이를 능력과 노력의 공정한 보상으로 서사화함으로써, 부와 성공을 도덕적 우월성의 표지로 만든다고 지적
 - 가난과 실패는 구조·운의 결과가 아니라 네 책임으로 환원되고, 성공은 전적으로 네 공로라는 자의식으로 전유되며,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 연대와 상호책임의 감각을 약화시킴
 -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한 분배의 불균형이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고 존중할지에 대한 도덕적 서열화의 문제로 전환
- 능력주의가 가장 심각하게 초래하는 것은 승자의 오만(hubris)과 패자의 굴욕(humiliation)
 - 샌델에 따르면 승자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과했다는 경험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당연히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는 공로 의식을 갖게 되고, 그만큼 사회적 우연과 제도적 특권의 역할을 망각
 - 반대로 패자는 자신의 처지를 개인적 결함·무가치함의 증거로 내면화하면서, 정치적 목소리와 시민적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며, 이것이 분노·혐오·포퓰리즘 정치로 전이될 수 있음
- 샌델은 통상적 자유주의가 내세운 기회의 평등 담론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
 - 실질적으로 출발선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회에서, 형식적 기회균등만 확보한 뒤 결과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불평등의 도덕적 구조를 은폐할 뿐임
 - 정의는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어떤 존재로 대하느냐, 다시 말해 모든 시민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동등한 존엄을 인정받는가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
- 샌델에게서 평등이란 소득을 완전히 같게 만드는 상태가 아니라, 각자가 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 그 기여와 무관하게도 시민으로서 동등한 존중을 받는 상태
 - 시장소득과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 특히 엘리트 자격증이 없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인정하고, 공적 담론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경험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회복해야 함

- 샌델의 평등론은 분배 정의의 기술적 설계보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형성하는 상호 평가의 문법과 시민적 자존감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10) 아드리언 울드리지: 능력주의 두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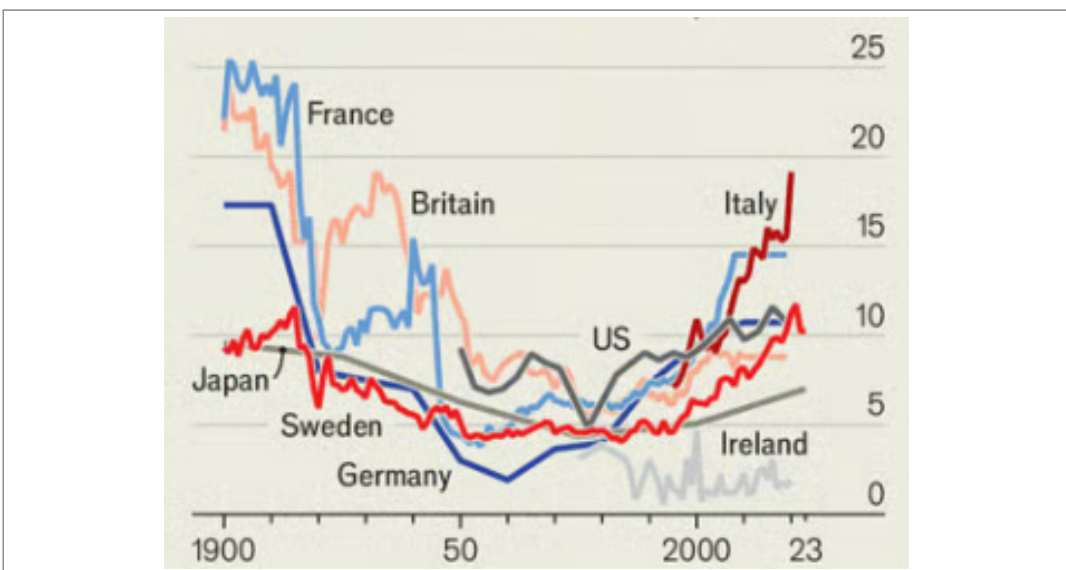
- 아드리언 울드리지에 따르면 능력주의(meritocracy)는 현대 문명을 만든 가장 강력한 제도이지만, 그 성공 때문에 스스로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이중성을 지님
- 현재로서는 능력주의의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능력주의를 개혁하고 재설계해야 함을 강조
- 울드리지가 정의하는 능력주의는 단순한 공정 경쟁이 아니라, 재능과 노력에 따라 선발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적 질서
- 이는 단순한 분배 원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혁신·행정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동
- 예를 들어, 혈통이 아니라 시험과 성과로 관료를 선발하면 유능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고 이는 기술 채택을 원활하게 하여 더 높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능력주의는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해 왔음
- 고대·전근대: 제한적 능력주의
 - 중국 과거제: 최초의 체계적 능력주의 실험 → 혈통 귀족 견제, 시험 기반 관료 선발
 - 유럽 중세: 혈통 귀족 중심 → 능력보다 출신이 지배
 - 핵심 대비는 시험 대 혈통
- 근대 국가의 탄생: 능력주의의 제도화
 - 프로이센, 프랑스, 영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변화
 - 군대: 장교 선발의 전문화
 - 관료제: 시험과 평가 도입
 - 교육: 표준화된 훈련 시스템
 - 영국은 인도 식민지 행정에서 시험 기반 관료제를 발전시킨 뒤 이를 본국에 역수입하여 능력주의가 제국 통치 기술에서 국가 운영 원리로 전환
- 미국식 능력주의: 개방성과 선발의 결합
 - 미국은 귀족이 부재한 사회였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더 빠르게 중심 질서로 자리 잡았음

- 미국 능력주의는 대학(아이비리그), 표준시험(SAT 등)을 통해 개방성과 엘리트 선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
-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상위는 엄격히 선발한다는 구조
- 울드리지는 능력주의 덕분에 근대 사회에서 산업화와 경제성장 가속,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료제 구축, 과학기술 혁신 촉진, 사회적 이동성 확대와 같은 성과가 가능했다고 평가
- 근대사회에서의 산업화와 관료제 국가의 탄생은 능력주의를 근간으로 이루어졌음
- 오늘날 능력주의는 자기 타락 속에서 위기
- 울드리지의 핵심 진단은 능력주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무 성공해서 귀족제로 변질되었다는 점이 문제
- 엘리트의 세습화: 고소득·고학력층이 교육, 주거, 네트워크를 통해 지위를 자녀에게 이전하면서 능력주의가 사실상 신귀족제로 변질
- 시험과 자격의 과잉: 시험은 원래 공정성을 위한 도구였지만 시험 준비 능력 자체가 계급화되면서 진짜 능력보다 시험 전략, 학벌·자격증이 중요
- 대중의 분노와 정치적 결과: 능력주의는 패자를 단순히 덜 노력한 사람으로 낙인찍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그 결과 엘리트에 대한 불신을 초래
- 울드리지의 처방은 능력주의의 폐기가 아니라 재설계를 통해 수정된 능력주의를 제시
- 엘리트 개방성 회복을 통해 상위 교육기관의 사회적 다양성 확대
- 초기 교육 격차 축소 통해 유아·초등 단계에서 기회 불평등 완화
- 단일 시험 의존 탈피 통해 다양한 재능을 평가하는 다중 경로
- 엘리트 책임 강화를 통해 공공 봉사, 사회적 기여 요구
- 존엄의 재구성을 통해 비엘리트 직업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 회복

4. 세대 간 이슈

1) Inheritocracy의 부상

- 영국의 The Economist는 2025년 3월 1일자 기사에서 상속계급사회(Inheritocracy)의 재등장을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강조
 -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잘 적용 되었기 때문에 상속이 적더라도 스스로 부를 일군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
 - The Economist는 선진국 전반에서 상속 재산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면서 능력주의가 표방하는 이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
- 상속 규모의 급증
 - 선진국 사람들은 올해 약 6조 달러를 상속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0% 규모로, 20세기 중반 선진국 평균(약 5%)의 두 배 수준
 - 프랑스에서는 상속 흐름(연간 상속 규모/GDP 비율)이 1960년대 이후 두 배, 독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거의 세 배 규모
 - 그 결과 젊은 세대가 집을 사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노동 성취 못지않게 상속 재산에 의해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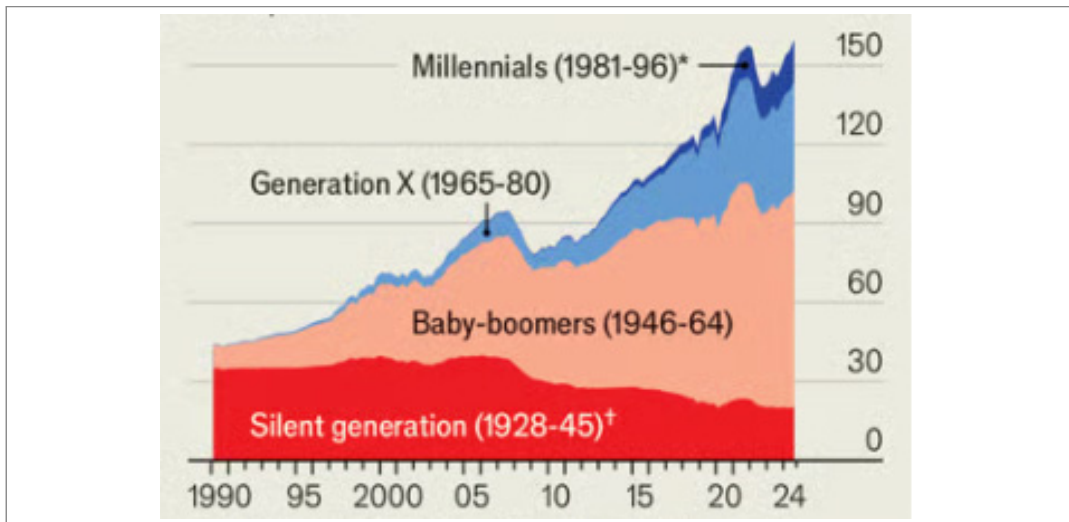
자료: The Economist

[그림 18] 상속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상속 규모가 급증한 구조적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설명
- 첫째, 사회가 더 부유해지고 고령화되면서, 노동자 1인당 자본이 축적되었고 그 자본을 누군가는 소유하면서 부의 규모가 증가하였고, 자산 구조 역시 변화
 -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건물 파괴, 고인플레이션, 부유세·국유화 등으로 부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으나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
 - 영국에서 건물 자산 가치는 1990년대 중반 약 1조 파운드(GDP의 130%)에서 최근 약 7조 파운드(GDP의 270%)로 상승
 - 부유세는 인기가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훌륭한 성과를 냈으며, 인플레이션은 최근까지 낮았고, 자산운용·인덱스 펀드의 발달로 부자들은 재산을 낚리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음
- 둘째, 인구 및 세대 구조의 변화
 - 베이비붐 세대는 집값과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성인이 되어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음
 - 독일에서 65세 이상(인구의 1/5)이 국가 자산의 1/3을,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인구의 1/5)가 순자산의 절반, 82조 달러를 보유
 - 베이비부머가 사망하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유산이 후대에 넘어가는 시기가 본격화
- 셋째, 경제성장률은 둔화된 반면 주택 가격(특히 대도시 부동산)은 급등하여, 자산 규모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커진 상태가 되었음
 - 이런 현상은 생산성 성장 부진이 심한 유럽에서 특히 두드러짐
 - 피케티·쥐크만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률이 낮은 나라일수록 부/소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일정 비율로 저축을 늘리지만, 인구 및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면 GDP 성장률은 떨어지기 때문
 - 선진국의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상속사회 문제가 심화
 - 미국·아일랜드처럼 성장률이 빠른 나라가 독일·이탈리아처럼 느린 나라보다 상속계급사회 문제가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물려줄 상속 자산이 크게 늘고,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해지면서 새로운 상속계급사회가 형성
- 20세기 대규모 자산은 나쁜 투자,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축소되면서 거대한 가문의 재산이 세대를 거치며 분산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음

- 1900년 미국의 부유한 가문들이 자산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매년 자산의 2% 소비하고, 평균적인 자녀 수를 유지했다면, 오늘날 미국에는 19세기 말 부자 출신 억만장자가 약 16,000명쯤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000명에도 못 미침
- 현대 사회의 슈퍼리치 대부분은 자수성가형이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억만장자가 막대한 부를 축적할 뿐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는 데도 훨씬 능숙해졌기 때문
- UBS에 따르면 2023년에는 상속을 통해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53명으로, 스스로 부를 쌓아 억만장자가 된 84명과 그 격차가 크지 않음
- 이는 펀드에 자산을 간편하게 맡길 수 있고, 자산 관리 노하우도 널리 알려진 데다, 여러 나라 정부가 상속세를 줄여준 영향도 크기 때문으로 분석
- 상속은 슈퍼리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산층 상속이 중요
- 사회에서 전형적인 상속인은 보통 집 한 채 혹은 그 매각 대금을 물려받는 중산층
- 런던, 뉴욕, 파리 같은 글로벌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과거에 집을 산 사람들은 큰 자본이득을 누렸고, 이런 자산 이득을 자녀에게 넘기고 있음
- 특히, 뉴욕·런던 등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싸지면서, 소득 상위 10% 수준의 임금만으로는 상위 10%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움
- 세대 간 상속 불평등
- 영국에서는 1960년대생의 1/6이, 본인 세대 평균 연 소득의 10년 치를 넘는 상속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1980년대생은 그 비율이 1/3로 높아질 전망
- 결과적으로 상속 규모의 격차는 급격한 증가 추세
- 35~45세의 1/5은 1만 파운드(약 1.3만 달러) 미만을 상속받지만, 1/4은 28만 파운드 이상을 상속받을 것으로 전망
- 시장경제 옹호자에게 새로운 상속계급사회의 부상은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없음
- 허점 많은 조세제도 탓에 부유층은 자본을 생산적 투자에 쓰기보다 세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을 것임
-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집주인들은 NIMBY를 주장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을 막아, 상속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더욱 비싸게 만들 수 있음
- 상속에 기대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지대소득 계층(rentier class)은 일하거나 혁신하려는 유인이 줄 수 있음

- 심각한 문제는 상속을 거의 받지 못하는 비 수혜 계층이 점점 뒤처지고, 정치·사회적으로 소외감을 키울 것임
- 사람들은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믿게 되면, 주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잃고 정치적 불안과 극단주의의 토양이 증가



자료: The Economist

【그림 19】 미국의 순자산

-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1인당 상속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보임
 -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같은 상속 규모가 더 적은 자녀에게 분배
 - 영국의 경우 최근 수십 년간 출산율 하락으로 평균 상속액은 약 6만 파운드(7.5만 달러)로 과거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상속세(Death duties)의 약화
 - 20세기 초 미국·영국에서 상속·유산세는 전체 세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20세기 후반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
 - 상속세가 완화된 이유는 글로벌 시대의 부자 탈출(tax flight)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제시
 - 오늘날 부유국에서 상속·유산세 수입은 정부 세수의 1%도 안 되는 수준
 - 호주, 캐나다, 인도, 노르웨이, 러시아 등은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

- 미국에서도 1976~2000년 사이 20개 넘는 주가 부(wealth) 이전세를 없앴고, 상속세 폐지를 바라는 여론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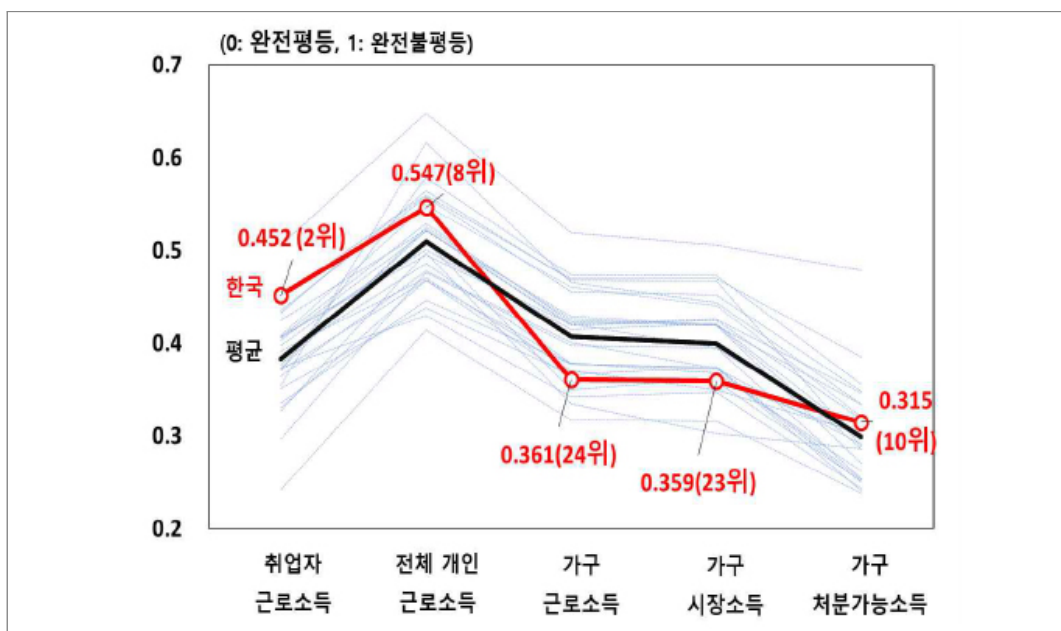


자료: The Economist

[그림 20] 정부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

- 상속계급사회의 도래는 사람들이 창업·혁신보다 혼처·상속 상대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기업가정신과 혁신이 위축되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면서 악순환 초래 가능
- 상속 증가는 자산 보유 상층과 하층 사이의 격차를 벌려 불평등을 심화
 - 미 연준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5% 미국인은 평균 5만 달러 이상을 상속받았지만, 중간층은 5,000달러 정도에 그쳤음
 - Hero Ashman, Seth Neumuller의 연구 결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흑인과 백인의 부 격차의 1/4을 설명
- 상속계급사회는 결혼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결혼시장에서 똑똑하거나 성실한 사람보다,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음
 - 과거 문헌에서는 교육·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동류혼(assortative mating) 현상이 보편적이라 간주했지만 최근 연구는 상속 여부가 중시되고 있음

- Etienne Pasteau and Junyi Zhu (2017) 연구에 따르면 독일에서 결혼 상대 선택을 설명하는 데 상속은 노동소득보다 2.5배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 이동성이 가장 높은 덴마크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상속이 결혼 상대 선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우리나라는 고소득 남녀 간의 결혼이 흔히 나타나지만,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결혼,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이상 여성 간 결혼 등 이질적인 결혼이 주요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발생하였음
- 그 결과 취업자 근로소득 대비 가구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높았음
- 향후 국민소득의 10% 이상의 자산이 상속 증여된다면 과거 교육·소득 동류혼에서 자산 동류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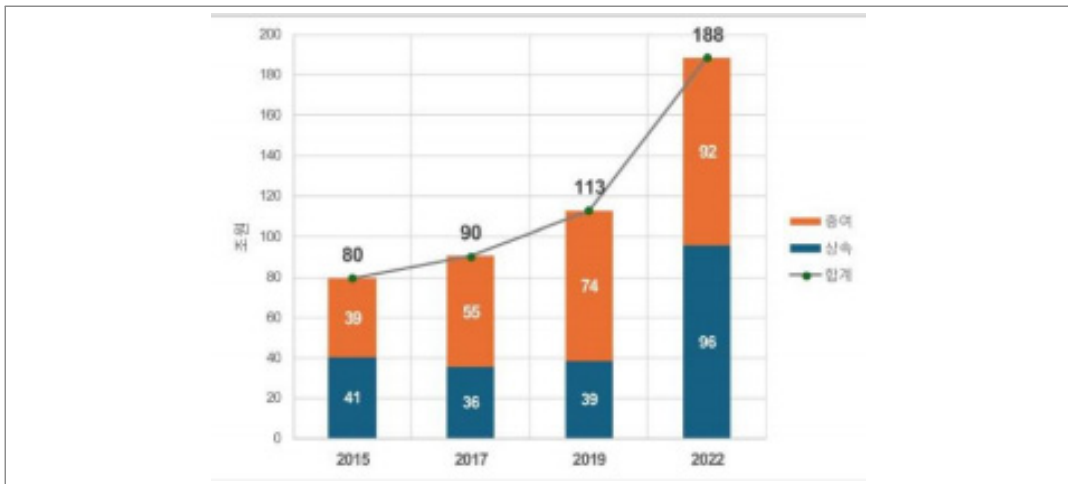


[그림 21] 가구 소득 형성 단계별 지니 계수 및 한국 불평등 순위

-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 인구 고령화, 저성장으로 상속계급사회의 기반이 견고
- 베이비부머 및 그 이전 세대(대략 60세 이상)가 가계 순자산의 40% 자산 보유
- 순자산 총규모는 약 4,300조원 수준 (2025년 기준)으로 80% 이상이 부동산
- 상속, 증여 금액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15년 80조 원

으로 국민소득 대비 5% 규모에서 2022년 188조 원으로 국민소득 대비 8.7% 수준으로 급성장

※ 2025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이고 전체 가구 수는 2,182만 가구이므로 이 둘을 곱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총 자산은 1.2경원으로 GDP 4.5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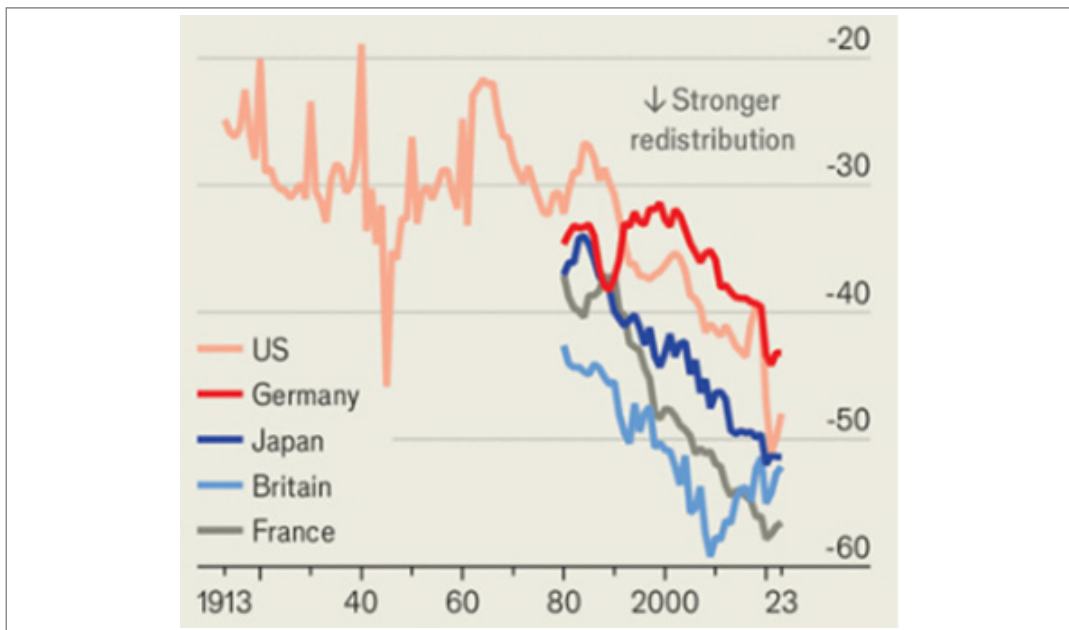


[그림 22]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 규모 (2016~22)

2) 대응 방안

- The Economist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사망은 2036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2036년에 미국에서만 150만 명의 붐 세대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
 - 주택·주식 가치도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상속될 자산 더미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큼
 - 금리가 높아진 세상에서 상속을 받아 은행 예금이나 국채에 넣어두기만 해도 순수 렌티어로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대부분 선진국의 정부는 상속세를 올리기보다는 줄이는 추세를 보임
 - 상속세는 상속계급사회 문제를 다루는 공정한 수단일 수 있음
 - 상속세는 극도로 인기 없는 세금이라, 정부는 상속세를 제대로 집행하기보다 각종 예외·감면 규정을 도입하거나, 과세 기준(공제 한도)을 올리고, 아예 세제를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에 의존하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음
 - 현대 사회의 문제점은 불평등은 커졌는데 세금은 과거에 비해 매우 진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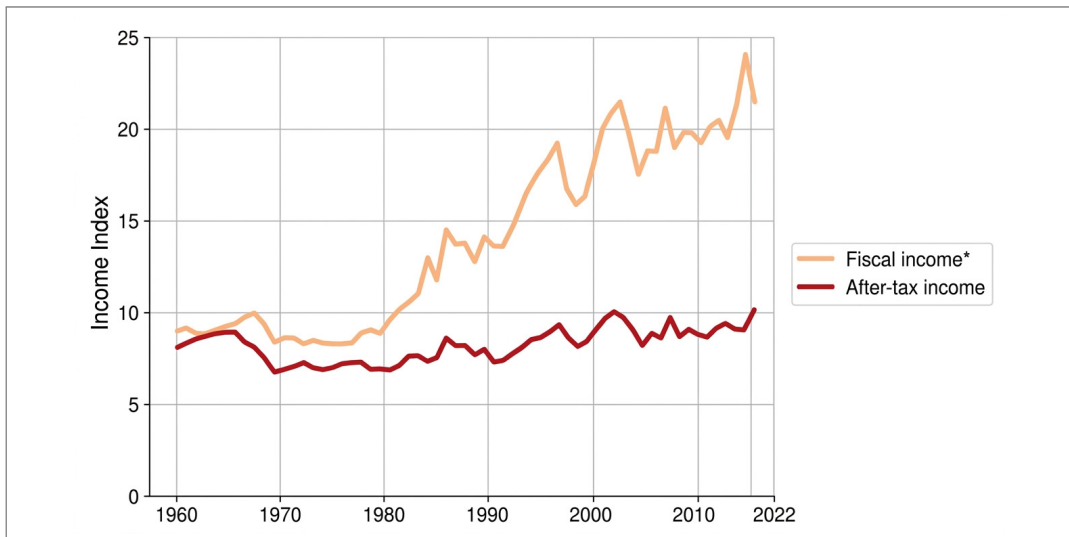
- 1980~90년대 선진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상승했고, 이후 불평등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중산층 소득은 정체하였고 그 결과 포퓰리즘은 부상
- 1980년 미국 상위 1%의 세전 소득 점유율은 9%였으나, 2024년에는 20.7%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유럽 상위 1%는 8%에서 12%로 상승
- 미국의 세전 소득은 불평등해졌으나 세제는 보다 진보적으로 운영된 결과 선진국의 불평등 증가를 상당 부분 상쇄하거나 거의 따라잡는 수준
 - 미국 상위 1%는 경제소득의 1/5을 누리고, 연방세의 1/3을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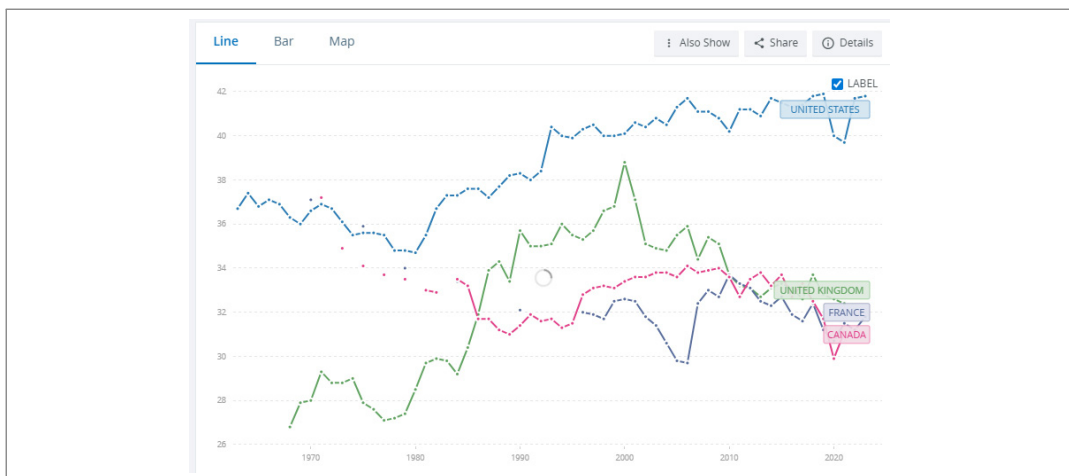
[그림 23] 복지국가가 불평등에 미친 효과: 상위 10% 대비 하위 50% 비율의 변화

- The Economist는 오늘날의 국가를 로빈후드 국가(Robinhood State)라 부름
- 로빈후드 국가의 적극 개입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것을 상당 부분 막고 있음
- 소득 재분배 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은 1960년대의 두 배, 10개국 중 7개국은 1990년보다 더 진보적으로 나타났음
- 세제의 진보성을 간단히 측정하는 방법은 세전 소득 분포와 세후 소득 분포를 비교
- 미국은 오늘날 1960년대의 약 두 배 규모로 소득을 재분배

- 아래의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상위 1%의 세후 소득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약간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크게 증가
- 영국·프랑스·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상위 1%의 세후 소득은 거의 늘지 않은 반면, 하위 50%의 세후 소득은 크게 개선
- 영국의 세후 지니 계수는 1990년 이후 3%p, 프랑스는 4%p 하락했고, 캐나다에서는 상위 1%가 최근 성적이 매우 부진



[그림 24] 미국의 상위 1% 세후 소득과 조세 부담



[그림 25] 주요 G7 국가의 지니 계수 추이 (1970~2020)

- 20세기 후반의 불평등 증가는 대부분 1980년대에 일어났고, 그 이후 각국 정부는 격차 완화에 훨씬 적극적이었음
- 1990~2023년 G7 평균 세전 소득 지니 계수는 약 4%p 상승했지만, 세후 지니 계수는 하락
- 미국은 CBO 기준 2022년이 과세소득 지니 계수가 역대 네 번째로 불평등하였지만, 세후 불평등은 2000년, 2000년대 중반, 2010년대보다 낮은 수준이며, 1986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
- 불평등의 역사적 접근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후 초고 소득세 및 상속세는 불평등의 대압착 (Great Compression)을 초래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세계화, 신자유주의와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화, 조세 경쟁, 노동조합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위 소득, 자산 비중이 다시 급격히 상승
- 영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83%, 배당 소득은 98%에 이르렀고, 미국은 1951~63년 동안 최고 소득세율이 최소 91%이었고 1970년대 스웨덴에서는 실효 한계세율이 100%를 넘기도 했음
- 상속·증여세도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실제로 당시 부자가 낸 세금은 많지 않았음
- 개인 소비(식비·교통비 등)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등, 다양한 회피 수단을 활용
- 1950년대 매우 진보적이던 시기에도 미국 상위 1%의 실효 연방소득세율은 약 20%에 불과했고, 1960년대에는 13.8%까지 떨어졌음
- 오늘날 상위 1%의 실효세율은 과거에 비해 더 높은 수준
- 현대 사회에서는 조세 회피가 어려워졌고,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은 눈에 띄게 높아졌음
- 영국 상위 1%의 실효 소득세율은 2000년대 34%에서 현재 40%로 상승
- 캐나다 상위 1%는 연방+주 합산 약 39%, 스페인은 20년간 30%에서 34%로 상승
- 이탈리아·일본도 평균 임금의 2.5배를 버는 고소득층에 대한 실효세율이 10년 전보다 현저히 상승
- 미국도 상위 1%의 평균 연방 소득세율이 27.6%로, 2000년 역사적 고점(28.9%)과 크게 다르지 않음
- Thomas Coleman and David Weisbach (2023), Thomas Picketty 등의 연구는 20세기 전체에 걸쳐 미국·프랑스에서 재분배 효과가 상당했고, 최근에도 세제가 더 진보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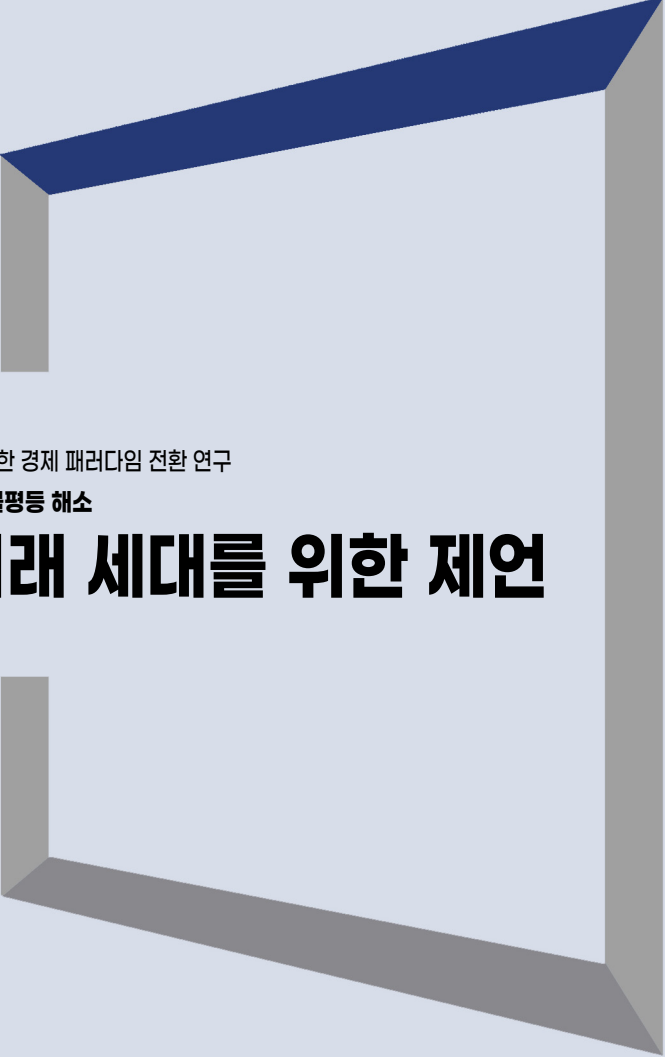
- 과거에 비해 오늘날 세금 회피 가능성은 훨씬 줄었지만 최상위 부유층(상위 0.01%)은 자본이득에 낮은 세율, 자산 담보 대출을 통한 소비(대출은 소득이 아니라서 과세 대상이 아님), 소득을 임금인 아닌 기업이익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였음
- Arun Advani (2018)에 따르면 영국의 최상위 부유층(연 수백만 파운드 이상)은 실효세율 25% 수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의 “단지 아주 부유한” 계층은 35% 정도를 냈다고 보고
- 미국 상위 400가구, 일본의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비슷하게 낮은 실효세율을 포착
- Gerald Auten and David Splinter (2024)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고 부유층의 실효세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 임금·이익·자본이득·상속세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 미국 상위 0.01%가 전체 소득의 약 50%를 세금으로 낸다고 추정
- 1960·70년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 최상위 부유층이 더 높은 실효세율에 직면한다는 결과도 제시
- 스플린터는 상위 400명의 부를 가족 구성원 2,000명 이상에 분산해 봐야 한다며, 일부 연구가 친족들이 낸 세금을 놓쳐 실효세율을 과소추정한다고 비판
- 이런 조정 후 미국 상위 400명의 실효세율은 40% 안팎이라는 결론을 제시



[그림 26] 미국 평균 조세 부담률 (소득 이전 이후)

- 현대 국가의 로빈후드 세제는 부자 의존 재정과 대규모 이전을 특징
- 첫째, 상위 1%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
 - 세전 불평등 확대와 높은 고소득층 세율이 결합하면서, 정부 재정은 상위 1%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
 - 영국: 상위 1%가 소득세 수입의 거의 27%(2000년 22%에서 상승).
 - 호주: 상위 1%가 소득세의 17~20% (2010년대 초 16%에서 상승).
 - 한국: 상위 1% 납세자가 소득세의 40%를 부담
 - 미국: 상위 1%가 2022년 소득세의 40% (2001년 33%에서 상승).
- 둘째, 다른 계층의 세 부담 완화와 이전 확대
 - 정부는 부자에게서 거둔 재원을 사용해 나머지 계층의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확대
 - 영국: 2024년 당시 재무장관 제러미 헌트는 영국 평균 소득자의 실효 개인 세 부담이 1975년 이후 가장 낮다고 지적
 - 미국: 하위 80% (소득 하위 4분위까지)의 세 부담은 1960~70년대보다 훨씬 낮음
 - 1990년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세 환급(EITC) 확대가 시스템을 더 진보적으로 만들었음
 - 저소득·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이전지출은 크게 증가
 - OECD 기준 사회 이전지출은 1990년대 중반 GDP의 18%에서 최근 22%로 상승하였고 대부분은 연금 형태로 이전
 - EU에서는 중앙값 공적연금이 50대 근로자의 임금 대비 55%(2010년)에서 60%로 상승
 - 영국에서는 근로 연령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납부하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국가지출(보건 의료 등)을 받음
 - 미국에서는 클린턴·오바마·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건강보험 보조금이 확대되었고, 팬데믹 기간 ACA 보조금도 크게 증가
 - 소득 하위 20% 미국인은 현재 정책적(소득조사 기반) 복지 수혜액이 근로소득의 100% 수준으로 1970년대 후반 50%에서 두 배 상승
- 선진국을 중심으로 더 높은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흐름이 대세
 - 뉴욕 시장 Zohran Mamdani는 연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2% 추가 시세를 추진 중이고, 버지니아·로드아일랜드·워싱턴 주도 비슷한 세금을 검토

- 캘리포니아는 주 거주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에 대해 한 번만 5% 부과하는 부유세 국민 투표가 실시 예정
- 프랑스에서는 부유세 도입 요구가 크고, 영국 노동당 좌파는 스타머 약화 시 자산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
- 부유세의 가장 큰 쟁점은 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세율을 과도하게 올려서 생산성을 훼손시킬지 여부
 - 일부는 캘리포니아 억만장자 유출, 영국에서 부유 외국인 탈출 등을 과도한 과세의 증거로 간주
 - 실효세율이 오르는 와중에도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 시간은 줄지 않고 늘어났고, 캘리포니아의 백만장자들도 50% 수준의 실효세율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로 열심히 일한다는 점에서 생산성 훼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 선진국 부자 과제는 세수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임
 - 캘리포니아 억만장자 자산 5% 일회성 부유세는 주 연간 GDP의 약 2% 정도에 그침
 - 뉴욕 시장의 2% 부자 추가 세제도 연간 생산물의 0.25% 수준으로, 대규모 복지국가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
- 유럽 국가들은 복지 재정을 소비세 등 광범위한 세목으로 충당하지만 미국의 경우 낮은 전체 조세부담으로 인해 진보적인 소득세 구조를 유지
 - 즉, 부자 특혜를 유발하는 누수는 막아야 하지만, 예산의 지나친 의존은 해법은 아님
 - 상속 시 자본이득 과세 기준을 재설정하는 규정은 buy, borrow, die 전략을 가능하게 함
 - 이 규정을 폐지해도 연간 GDP의 0.1%도 안 되는 세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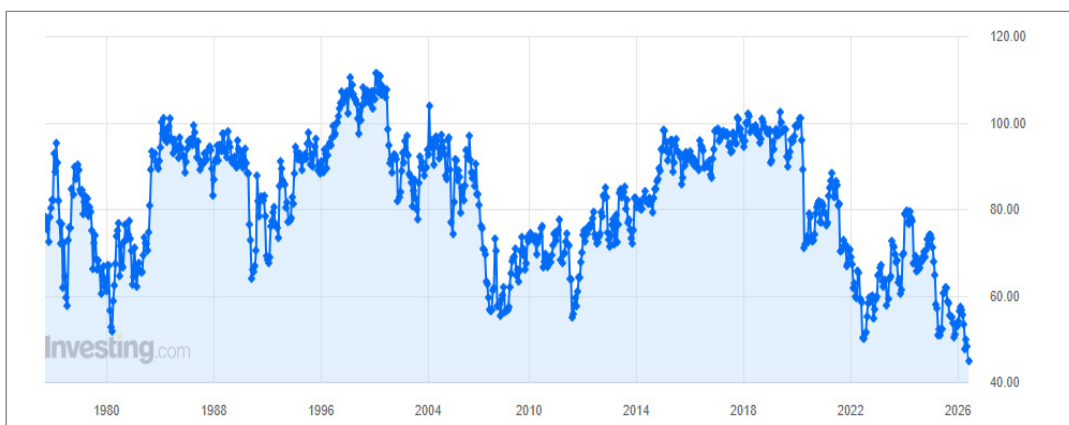
모두의 성장과 불평등 해소

Ⅳ. 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

Ⅳ. 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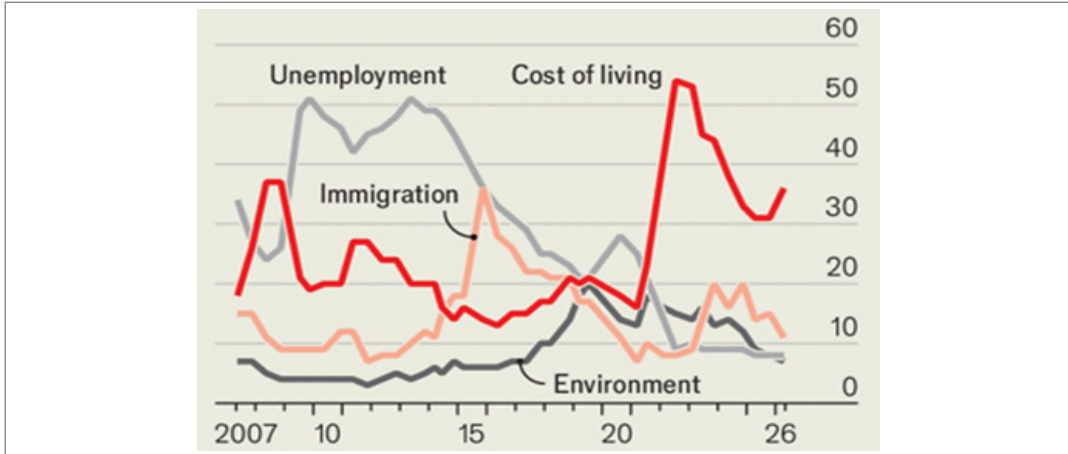
1. Z세대 사회주의

- The Economist 2026년 6월 4일 발표한 Z세대 사회주의 특집 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Z세대 사회주의(Gen Z socialism) 등장을 경고
 - 미국에서는 뉴욕 시장 조람 맘다니, 영국에서는 녹색당을 이끈 잭 폴란스키, 프랑스에서는 장뤽 멜랑송, 캐나다 신민주당의 매비 루이스 등이 표방하는 정책이 Z세대 사회주의를 상징
- Z세대 사회주의는 현실에서의 불만에서 출발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문제 해결책을 외면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이 전통적인 사회주의자와는 대조를 이룸
 - Z세대 사회주의자를 제로섬 게임 생각에 갇힌 자신만 중시(me-first)하는 세대라 칭함
- Z세대 사회주의의 불만은 너무 높은 집값과 임대료, 그리고 인플레이로 인한 생활비 부담에서 시작
 -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특히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겪으면서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
 - 더욱이 최근 AI 도입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커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되면서 청년 세대의 정부 개입 요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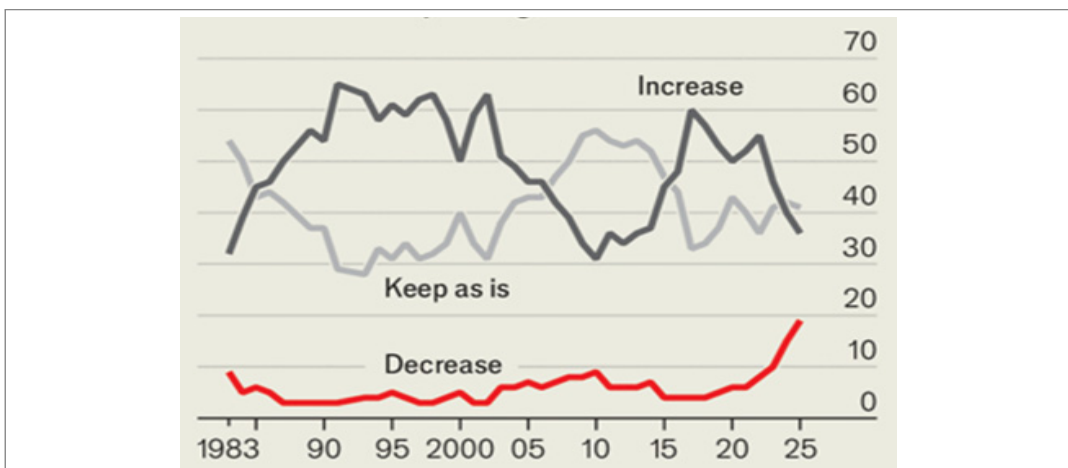
[그림 27]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 뉴욕 시장 조란 맘다니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에 대해 임대료를 동결하고, 저렴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시영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만 5세까지 보편적 무상 보육 제공을 약속
- 독일 좌파당의 디 링케는 보육부터 대학까지 모든 비용을 폐지하겠다고 공약
- 폴란스키가 이끄는 영국의 녹색당은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고 청년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제공
- 호주 녹색당은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
- 캐나다의 루이스는 캐나다 전역에 공공 식료품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코스트코를 떠올리되, 공공 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
- Z세대 사회주의자의 등장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또는 자유주의자를 정치무대에서 퇴장시켰음
- 영국 베이비부머 좌파가 열렬히 지지했던 제레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의 노동당은 2019년 선거에서 1935년 이후 최악의 선거 결과
- 미국에서도 전통적인 좌파의 지지를 받았던 버니 샌더즈는 정치 영향력을 많이 잃었음
-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의 사회주의 또는 자유주의는 노조 활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자본주의 틀 안에서 행사하였음
- 유럽에서는 기간 시설의 국유화,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녹색 기술 보조금 지급, 누진적인 소득세 확대 등이 밀레니얼 사회주의자 또는 자유주의자의 대표적인 활동 영역
- 반면에 Z세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틀 안에서 행동하기를 거부
- Eurobarometer에 따르면 자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계비를 지적
- 이민, 실업, 환경 등의 문제는 생계비와는 큰 격차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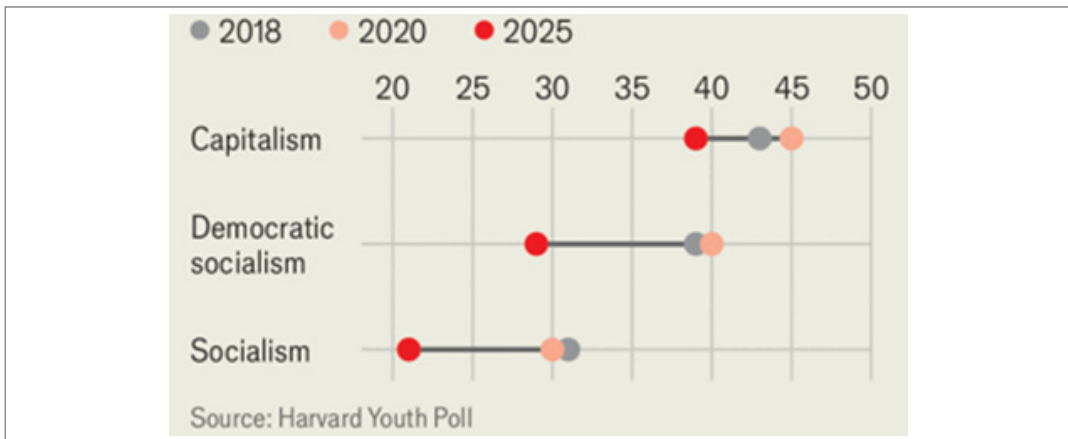
[그림 28] 유럽인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

- 최근 대부분 사람은 자신들의 곤경에 대해 기업과 국가를 비난하는 입장을 드러냄
 - 미국인 5명 중 3명은 '기업의 탐욕'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연방 소득세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정부가 공공 서비스에 "세금을 인상하고 더 많이 지출"하기를 원하는 영국인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소득세가 "불공정하다"거나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9년 이후 두 배로 증가(아래의 그림 참조)
 - 프랑스 역시 정부가 공공 자금을 잘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 비율이 2023년 33%에서 2025년 22%로 감소



[그림 29] 영국인 중 세금을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

-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젊은 세대는 과거에 비해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이념 지향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자본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축소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같은 거창한 이념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해석
- 미국의 18~29세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는 지난 몇 년 사이 체제 이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하락 (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30] 미국 18~29세 청년 세대의 이념 지지

- 일반적으로 경제전문가는 생계비 인상을 기업의 가격 폭리보다는 인건비를 포함한 원가 상승에서 그 원인을 찾는데 반해, Z세대 사회주의는 기업의 폭리가 생계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 간주
- Z세대 사회주의는 제로섬 게임의 사고방식을 신봉하면서 기업의 폭리 때문에 생계비가 올랐다고 생각
- 이런 이유에서 Z세대 사회주의자는 민간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일부 Z세대 사회주의자는 경제 성장 자체를 부정
- The Economist는 Z세대 사회주의자가 3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지적
 - 첫째 제로섬 사고 방식 관점에서 경제 성장은 일반 사람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 둘째 정부 지출을 위한 재원을 전통적인 좌파는 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자 했는데 Z세대 사회주의자는 이와 달리 자원 마련은 가장 부유한 사람의 몫이라 생각
 - 셋째, 부동산을 포함한 물가 인상이 민간 기업의 이익 추구 때문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해서 연방 및 주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만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간주

- 이런 배경에서 미국의 일부 주 정부와 프랑스 등에서 부자 증세를 강력히 요구
 - 전통적인 사회주의 또는 자유주의자는 정부 지출의 재원을 광범위한 세금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새로운 좌파 세대는 초부유층(uber-rich)이 이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
 - 2010년대 후반 샌더즈는 미국인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 29,000달러 이상에 대해 추가로 4% 세금을 더 징수할 것을 제안
 - 맨다니 뉴욕 시장은 5백만 달러 이상의 비거주용 고가 주택에 초과 세금을 추징해 연간 최소 5억 달러를 추가 세수 확보 계획
 - 워싱턴 주에서도 1백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9.9%의 백만장사 세금을 도입
 - 영국의 폴란스키 역시 1천만 파운드 자산가에 대해 1%의 부유세 징수를 주장
- 새로운 사회주의 접근은 청년 계층이 접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청년 세대를 넘어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도심에서 임대료 통제는 도심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여 주택 공급을 더 제한적으로 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악순환을 초래
 - AI로 인한 불안감으로 AI 도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투자와 일자리를 제한하여 경제를 위축
- 새로운 사회주의자의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해서 이들에게 시장경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함
 - 새로운 사회주의자의 요구 사항은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가 모두 공유하는 문제점이라는 점에서 이들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함
 - 저렴하고 풍부한 주택과 인프라를 건설하고, 기성 세대에게 과도한 연금을 지원하는 부담에서 젊은이를 괴롭히는 것을 멈춰야 함
 -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과 더불어 보육 서비스를 개선해 청년세대의 부담을 완화
- 경제전문가는 강화된 소득세의 누진 체계가 상당히 잘 작동해서 소득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 증세를 논하기 전에 우선 낭비적인 정부 지출 줄이는 방법을 찾아서 정부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
 - 증세가 필요한 경우 기본 원칙은 다수로부터 안정적인 세원을 마련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많은 사람이 느끼는 초부유층의 낮은 조세 부담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
- 학계에서도 초부유층의 조세 부담률에 대해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우선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프랑스의 쥐크망에 따르면 미국 초부유층의 조세 부담률은 보통 시민의 30%보다 낮은 24%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의 스플린터는 초부유층의 조세 부담률은 38%로 일반 시민 평균 18%를 크게 상회한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음

2. 한국 청년 세대의 소득 및 자산 현황

- 2025년 3월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5분위별 자산은 전년에 비해 소득 5분위에서 8.0%, 4분위에서 4.0%, 3분위에서 3.6% 증가한 반면, 1분위에서 6.1% 감소
- 자산 점유율은 소득 5분위에서 전년대비 1.4%p 증가, 1분위에서 0.7%p 감소
-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자산은 40대, 50대에서 각각 7.7% 증가, 39세 이하에서 0.3% 감소하여 연령대별로 청년 세대만이 자산이 감소

〈표 17〉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보유액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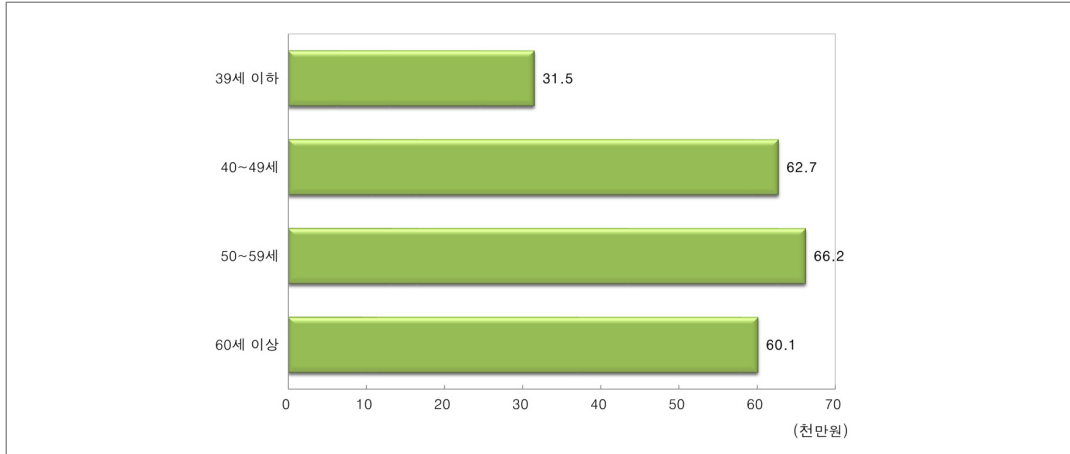
		전체	39세이하	40 ~ 49세	50 ~ 59세	60세이상
평균	2024년	54,022	31,583	58,212	61,448	58,251
	2025년	56,678	31,498	62,714	66,205	60,095
	증감	2,655	-85	4,502	4,757	1,845
	증감률	4.9	-0.3	7.7	7.7	3.2

-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50대 가구가 6억 6,205만원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
-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 39세 이하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의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났음

〈표 18〉 자산 유형별 보유액 및 구성비 (가구주 연령대 및 종사상지위)

(단위: 만원, %)

		자 산	금 융 자 산			실 물 자 산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구성비	부동산	거주주택	기타
전체		56,678	13,690	9,960	3,730	42,988	75.8	40,298	2,689
가 구 주 연 령 대	39세이하	31,498	12,957	6,309	6,648	18,541	58.9	16,418	2,123
	40~49세	62,714	16,401	10,786	5,615	46,313	73.8	43,063	3,251
	50~59세	66,205	16,507	13,173	3,333	49,698	75.1	46,131	3,567
	60세이상	60,095	11,236	9,475	1,761	48,860	81.3	46,652	2,207



[그림 31] 연령대별 자산 보유액

-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는 40대, 50대, 60세 이상, 39세 이하 순으로 전년 대비 각각 8.9%, 7.0%, 2.8%, 1.3% 증가

<표 19>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보유액

(단위: 만원, %)

		전체	39세이하	40 ~ 49세	50 ~ 59세	60세이상
평균	2024년	9,128	9,425	13,148	10,317	6,328
	2025년	9,534	9,548	14,325	11,044	6,504
	증감	406	123	1,177	727	176
	증감률	4.4	1.3	8.9	7.0	2.8

- 청년세대의 자산 보유액 규모가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을 수 있지만 청년세대의 자산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뒤처지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 청년세대의 자산 구성에서 금융 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은 자산 증식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음
- 청년세대에게 보다 안정적인 금융자산 증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청년세대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임
- 금융부채를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가구의 68.8%가 금융부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반면, 60세 이상 가구는 34.8%가 금융부채를 가장 적게 보유
- 금융부채 보유액은 40대 가구가 1억 5,272만원으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 가구가 1억 1,181만원으로 가장 적음

-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39세 이하 청년 세대의 비중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20〉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보유액

(단위: 만원, %, %p)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	전년차	금융부채	증감률	소득	증감률	자산	증감률
전체		52.0	-2.1	13,057	6.5	8,457	3.7	62,857	4.7
가구주연령대	39세 이하	63.0	-3.0	13,127	4.3	7,215	2.1	36,326	-0.2
	40~49세	68.8	-3.7	15,272	12.7	9,506	3.3	64,909	6.9
	50~59세	60.5	-2.4	12,857	10.1	9,653	5.3	69,998	8.3
	60세 이상	34.8	0.3	11,181	-0.6	7,386	5.7	75,968	0.3

- 가구 연령별 재무 건전성을 부채/자산과 금융부채/저축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년세대의 재무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부채/자산은 60세 이상의 경우 10.8%이지만 청년세대의 경우 30.3%
 - 금융부채/저축액 역시 60세 이상의 경우 41%이지만 청년세대의 경우 131%

〈표 21〉 가구특성별 가계의 재무건전성

		부채/자산			금융부채/저축액		
		2024년	2025년	전년차	2024년	2025년	전년차
전체		16.9	16.8	-0.1	68.4	68.2	-0.1
가구주연령대	39세 이하	29.8	30.3	0.5	132.2	131.1	-1.1
	40~49세	22.6	22.8	0.3	93.6	97.4	3.8
	50~59세	16.8	16.7	-0.1	58.2	59.0	0.8
	60세 이상	10.9	10.8	0.0	41.9	41.0	-0.9

3. 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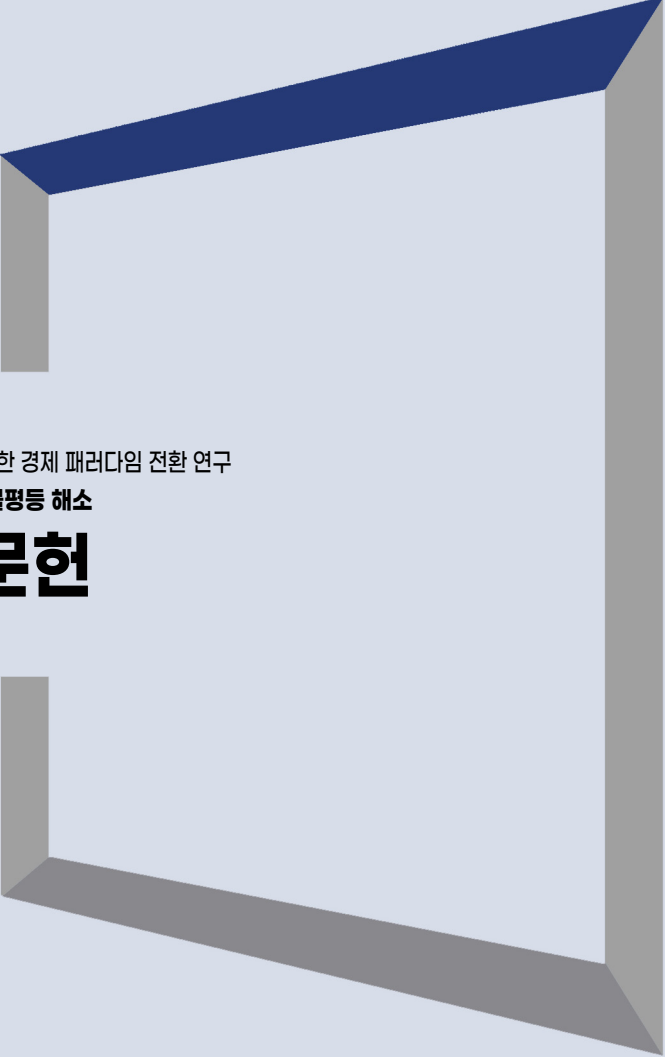
- Gen-Z 사회주의는 진보주의 정신에 입각한 이상보다는 “내 임대료 낮춰라, 청구서 줄여라, 버스 공짜로 해라, 내 일자리 지켜라” 등의 나 먼저(me-first) 요구를 주장하는 좌파 성향 포퓰리즘에 해당
 - 기후·인종·정체성 이슈보다는 주택 임대료, 높은 생계비, AI로 인한 일자리 위협이 핵심 불만으로 임대료 통제, 공공요금·식료품 가격 상한, 무상 보육·무상 교통 등 직접적 가격·비용 통제를 선호
 - 정부 지출 재원으로는 광범위한 증세 대신 초부유층과 고소득자의 과세에 집중
 - 시장과 민간 기업에 대한 강한 불신, 상당 부분을 국가 규제·공영화로 대체하려는 성향이 큼
- The Economist에 따르면 이들 새로운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를 없애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삶의 비용을 줄여 줄 ‘공짜 점심’을 국가와 부자에게 요구하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정의
- 새로운 청년세대의 사회주의 이념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됨
- 일부 청년 세대는 경제 성장과 자신의 생활 수준이 분리되었음을 크게 느끼고 있음
 - 한국의 MZ 세대는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자신의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1인당 GDP 수준은 사상 최대인데, 월세·점심값은 감당이 안 되고, 좋은 일자리는 없다”는 인식과 동일
-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자산 가격 급등, 정규직 기회 축소 속에서 한국의 청년세대 역시 성장 과실이 기성세대와 일부 자산가에게만 집중되었다는 제로섬 인식을 강하게 인지
 - 주거·생활비에 집중된 분노와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
- 전월세, 청년 주거, 외식·교통비 등 생활비 문제에서 시장 가격을 통제해 달라는 요구가 강함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대학가 원룸 임대료 규제, 청년 교통비 할인, 무상 지하철 논의 등은, 주택 임대료, 교통비에 대한 직접 통제 또는 보조금 지원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음
- 한국 사회에서도 부자·대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음
 - 재원은 재벌 또는 초부유층 증세로 충분하다 또는 대기업의 ‘탐욕 인플레이션이 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식의 논의가 청년층 담론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

- 우리 사회에서도 누진 상속·증여세, 보유세 강화, 초고소득층 과세 강화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지지를 보이는 반면, 부가세나 소득세 전반의 인상에는 거부감이 크다는 점에서, 광범위 증세보다 상층부에 집중된 세금이라는 Gen-Z 사회주의의 재원 인식과 유사
- AI·고용불안에 대한 불안과 일자리 보장 욕구가 커졌음
-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 확대, 자동화에 대한 불안 속에서 “국가가 좋은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라”, “AI가 대체해도 인간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정서가 일부 청년층에서 확산
- 기술 변화에 대한 방어적 태도와 국가 책임의 확대 요구라는 점에서는 Gen-Z 사회주의와 유사
- 이념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지만 ‘생활비를 낮춰줄 정치’에 대한 수요는 증가
- The Economist가 강조하듯 미국 젊은 층에서 자본주의·사회주의 모두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대신, 이념이 아니라 내 소득을 올리고 비용을 줄여줄 정치에 대한 선호는 커졌음
- 한국 청년층에서도 특정 이념 정체성(전통 좌우)에 대한 귀속은 약해지는 반면, “누가 내 월세·대출 이자·교통비를 줄여 줄 수 있는가”라는 실용·거래적 정치가 강해지고 있고, 이는 Gen-Z 사회주의가 ‘공익’이 아니라 ‘개별 유권자의 즉각적 이익’에 호소하는 소매 정치라는 분석과 같은 맥락
- The Economist의 분석 틀을 빌리면서 한국 맥락을 얹어 보면, 한국형 Gen-Z 사회주의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한국 청년 세대의 일부 정서는 The Economist가 분석한 Gen-Z 사회주의와 상당 부분 구조적으로 유사한 me-first형 분배·가격 개입 요구라 할 수 있음
- 첫째, 성장 스토리의 붕괴와 기회 구조에 대한 냉소
- 고도성장기·1990년대까지 유효했던 열심히 공부해 대기업·전문직에 들어가면 중산층이라는 경로가 구조적으로 약화되면서, 청년들은 성장·노력과 생활수준 향상을 연결시키는 신뢰를 잃고 있음
- 이런 의미에서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이 분리되었다는 인식이 한국에서도 강해졌고, 이는 제로섬적 분배 정치·자산 보유층에 대한 적대 정서를 키운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움
- 둘째, 주거·자산 불평등의 급격한 확대
-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제도의 변형, 청년기의 자산 형성 실패에 대한 불안이 임대료 통제·공공주택 확대·보유세 강화 같은 개입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있음

- The Economist가 지적하듯, Gen-Z 사회주의의 가장 강력한 동력도 임대료·주거비 위기이며, 한국에서도 청년층 정치 의제의 상당 부분이 주거 문제에 수렴한다는 점에서 동일
- 셋째, AI·노동시장 변화 속 세대 간 부담 배분에 대한 불만
 - 빠른 기술 변화와 비정규화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층은 “노동시장의 위험은 젊은 세대가 떠안고, 연금·복지의 과실은 기성세대가 가져간다”는 인식을 품게 되었음
 - The Economist가 강조하는 것처럼, Gen-Z 사회주의는 AI에 대한 공포와 결합하여 국가가 내 일자리를 보장하고, 세대 간 부담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로 나타나는데, 한국의 국민연금·노인 복지 자원 구조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과 상당히 구조가 비슷
- 한국 사회와 Gen-Z 사회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
 - 서구의 Gen-Z 사회주의는 조직화된 정치 세력과 지도자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 좌파당, 녹색당과 개별 정치인)을 통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흐름이 산발적 정책 선호·온라인 여론 수준에 머무른다는 차이가 있음
 - 또한 한국 진보정당·시민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기후·노동권 등 보다 전통적인 좌파 의제와 결합되어 있어, The Economist가 말하는 것처럼 기후·정체성을 제쳐둔 순수한 생활비·가격 통제' 어젠다로 재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국에서도 Gen-Z 사회주의의 정서적·경제사회적 기반은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고, 이미 정책 선호 차원에서 그 징후가 보이지만, 서구에서처럼 완결된 정치 프로젝트의 형태로 출현했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음
- 한국 사회에 Z세대 사회주의 또는 앵그리 2030이 부리를 내리기 전에 해야 할 최선의 대안은 일하는 청년 세대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임
- 첫째, 소득 창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중요
 - AI 출현, 이중적인 노동시장, 부문 간 심각한 생산성 격차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더욱이 강력한 노조의 정년 연장 요청 등 노동시장 환경은 청년층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청년층을 위한 다수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음
 -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지라도 청년층이 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를 더욱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한시적일지라도 청년 세대의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서 이들

이 저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둘째, 기성 세대의 재산 형성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 경로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청년 세대는 부동산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청년세대의 좌절은 커지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이 아닌 소득 기반 자산 형성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조성해야 함
 - 한국의 가계는 전체 자산의 75%가량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청년 세대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규제 위주 정책은 과거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가 필요
 - 과도한 부동산 가격 인상은 청년 세대의 재산 형성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매우 중요
- 셋째, 일하는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은 급격히 증가한 상속 및 증여세의 일부로 충당
 - 현 정부의 전 국민 또는 소득/자산 일정 수준 이하 국민 대상 현금 지급 정책은 지양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 매년 상속 및 증여 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
 - 상속 및 증여 세금의 일부를 일하는 청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 세대의 도약 기회를 제공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모두의 성장과 불평등 해소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고영선. (2024, 2월 27일).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KDI FOCUS.
- 김광석, 박준경, & 홍성덕. (1983). 한국경제의 성장요인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박명호. (2019).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에 관한 일고찰: 한중일 비교 연구. 비교경제연구, 26(2).
- 사공일, & 고영선 (편). (2010). 한국경제60년사.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4). 코리안 미래클 2: 도전과 비상. 나남.
- 전현배, & 신동한. (2022). 기업 규모와 청년 고용: 종사자 연령별 일자리 창출구조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전현배, & 신동한. (2022). 기업동학과 생산성 성장.
- 한국생산성본부. (2023). 2023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 한기춘 외. (1973). 고속도로효과조사보고서. 건설부; 한국도로공사.
- 한진희. (2007). 경제위기 10년: 평가와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허준영. (2025, 2월). 한국 경제 저성장 요인 및 제언 [발표자료]. 경기도일자리재단.

해외 문헌

- Boserup, S., Kopczuk, W., & Kreiner, C. T. (2016). The role of bequests in shaping wealth inequality: Evidence from Danish wealth record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 Bosworth, B., & Collins, S. M. (2008). Accounting for growth: Comparing China and Indi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
- Davies, J. B. (1982). The relative impact of inheritance and other factors on economic inequa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7.
- Denison, E., & Chung, W. (1976). How Japan's economy grew so fast? Brookings Institution.
- Elinder, M., Erixson, O., & Waldenström, D. (2016). Inheritance and wealth

inequality: Evidence from population registers (CEPR Discussion Paper No. 11191).

- Foster, L., Haltiwanger, J., & Krizan, C. J. (2006). Market selection, reallocation, and restructuring in the U.S. retail trade sector in the 1990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 Jeong, H. (2017). Korea's growth experience and long-term growth model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8240). World Bank Group.
- Jorgenson, D. W., Gollop, F. M., & Fraumeni, B. M. (1987). Productivity and U.S. economic growth.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K. S., & Hong, S. D. (1997). Accounting for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1963–1995.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Krugman, P. (2013). Hitting China's wall. The New York Times.
- Lawrence, R. Z. (2024). Is the United States undergoing a manufacturing renaissance? SSRN Working Paper. <https://ssrn.com/abstract=5001699>
- Lee, J. W. (2016). The Republic of Korea's economic growth and catch-up: Implications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B Working Paper No. 571).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Li, H. (2014). Human capital in China—2014 (China Human Capital Report Series). China Center for Human Capital and Labor Market Research.
- OECD. (2019).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 (SDBS) database.
- OECD. (2022).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OECD Publishing.
- OECD. (2022).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database.
- OECD. (2022). Trade in Value Added (TiVA) database.
- Pasteau, E., & Zhu, J. (2017). Love and money with inheritance: Marital sorting by labor income and inherited wealth in the modern partnership. Discussion Paper.
- Perkins, D. H., & Rawski, T. G. (2008). Forecasting China's economic growth to 2025. In L. Brandt & T. G. Rawski (Eds.), China's great economic trans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ketty, T. (2011). On the long-run evolution of inheritance: France 1820–205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6.
- Robertson, P., & Ye, L. (2017). Labour reallocation is not why China's economy is slowing: Busting the myth of surplus peasants in China's growth. *VoxEU* (CEPR). <https://voxeu.org/article/myth-surplus-peasants-and-china-s-growth>
- Sui, Q. (2019). China's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Public Policy Review*, 15(1).
- The Economist. (2025, June 10). Factory work is overrated. Here are the jobs of the future. *The Economist*.
- Wedgwood, J. (1929). *The economics of inheritance*. George Routledge and Sons.
- Weldon, D. (2025). *Blood and treasure: The economics of conflict from the Vikings to Ukraine*.
- Wolff, E. N. (2002). Inheritances and wealth inequality, 1989–1998. *American Economic Review*, 92.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2013).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society*. World Bank.
- World Bank. (2024, December). *China Economic Update: December 2024*. World Bank.
- World Bank. (202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World Bank.
- Wu, H. X. (2016). On China's strategic move for a new stage of development? A productivity perspective. In D. W. Jorgenson, K. Fukao, & M. P. Timmer (Eds.), *The world economy: Growth or stag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hu, X. (2012). Understanding China's growth: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6(4).

■ 집필진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모두의 성장과 불평등 해소

발행인 윤덕룡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경기도일자리재단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Tel. 031-270-9600 Fax. 031-270-9732
홈페이지: www.gjf.or.kr
편집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70
(문래동3가, 우리벤처타운2) 409, 904, 905호
Tel. 02-2672-1535
E-mail. yb1555@yeobaek.com
ISBN 979-11-24368-22-0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31-270-9600

재단 | <https://www.gjf.or.kr>

꿈날개 | <https://www.dream.go.kr/dream>

잡아바 | <https://www.jobaba.net>

꿈마루 | <https://www.dreammaru.or.kr>

